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외교학 석사학위 논문

베스트팔렌 신화와 신성로마제국의 존속에 관한 연구(1495-1806)

2016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부 외교학전공
용 채 영

베스트팔렌 신화와 신성로마제국의 존속에 관한 연구(1495-1806)

지도교수 전 재 성

이 논문을 외교학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6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부 외교학전공
용 채 영

용채영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16년 8월

위 원 장 김 상 배 (인)

부 위 원 장 안 두 환 (인)

위 원 전 재 성 (인)

국 문 초 록

본 연구는 근대 유럽 주권국가체제의 등장에 관한 국제정치학의 베스트팔렌 신화(Myth of Westphalia)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는데 목적이 있다. 신화에 따르면 30년 전쟁(1618-1648)과 베스트팔렌 조약(1648) 이후 주권 국가로 재편되는 유럽정치에서 신성로마제국과 같은 위계적인 단위는 유명 무실화되었다고 평가되어 왔다. 기존의 신화 비판 연구들은 베스트팔렌 조약이 신성로마제국의 정치관계와 대내 문제들을 해결한 것이 핵심이라는 점을 간과했고 신화의 주요 대상인 제국의 대내외적 동학에 대해서도 주목하지 않았다. 본 연구는 신성로마제국의 내부구조와 역학을 간과한 채 베스트팔렌 조약의 유럽적, 국제적 의미를 평가하고, 유럽 주권국가체제의 등장을 설명하는 기존 연구들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세력균형을 국제정치적 규범 또는 원칙으로 삼아 움직이는 베스트팔렌 체제 속에서 신성로마제국이 어떻게 비정상적인 소(小) 체제이자 독특한 제국 단위로서 생존할 수 있었는지 밝혔다.

본 연구는 1648년 이후 신성로마제국의 존속 원인을 제국의 내적, 외적 균형의 변동과 회복을 통해 설명한다. 제국의 위계적인 관습법적 구조는 구성원들의 권한, 지위를 조정해 내부 균형을 유지하는 법, 제도들을 만들어왔다. 대외적으로는 비주권적인 상태로써 제국의 현상유지가 유럽 평화의 보존에 핵심이라는 동의가 있었다. 외부 행위자들은 제국 내 균형의 유지 혹은 변동이 자국과 유럽체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제국의 존속을 지지했다. 즉 제국 대내외 행위자들 모두 신성로마제국의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하지 않았고, 세력균형 논리가 이러한 위계질서를 지탱했다. 합스부르크와 독일의 군주들은 외부 세력들로부터 군사, 정치적인 원조를 받아 내부 균형을 유지하여 유럽의 평화와 안보를 지탱하는데 기여했다.

본 논문은 1618년부터 1806년까지 크게 네 시기에 걸쳐 제국 내외 세력균형의 변동 과정에서 어떻게 제국이 존속할 수 있었는지 분석한다. 제국의 구조적 취약성과 탄력성이 공존하였으나 각 시기와 행위자들에 따라 제국의 대응과 회복양상도 달라졌다. 세 번의 대내 균형과 유럽 세력균형의

위기에도 제국은 생존했다. 3장은 제국의 대내 균형에 대한 위기로부터 발생한 30년 전쟁과 이를 조정한 베스트팔렌 조약의 핵심내용을 다룬다. 4장은 대외위협과 전쟁 대응을 통한 제국의 회복국면, 5장에선 오스트리아-프로이센 갈등에서 비롯된 두 번째 대내 균형에 대한 위기 국면을 다룬다. 마지막 6장에선 나폴레옹 제국 등장으로 인해 나타난 유럽 세력균형의 위기에 대해 대응하는데 실패하고 왜 제국의 해체로 이어졌는지 다룬다.

본 연구는 두 가지 측면에서 함의를 갖는다. 첫째, 기존연구들이 베스트팔렌 신화를 가정한 국제정치학 연구들의 몰역사성과 이론적 한계를 비판한 것을 넘어서, 신성로마제국에 대한 구체적인 역사적, 경험적 연구를 보완한다는 점에서 기여한다. 둘째, 신성로마제국과 같은 위계적 단위 또는 조직원리가 유럽 단위들의 역학과 체제의 무정부적, 구조적 성격을 형성, 변화시키는 데 중요했음을 지적했다. 즉 비정상적, 비근대적, 비주권적인 신성로마제국의 존속이 실제로는 근대 유럽정치체제를 안정적으로 유지, 작동시키는 핵심이었다. 이를 통해 단위 또는 질서에 관한 국제정치학계의 특정한 편견을 깨고, 이론화를 하는데 힌트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베스트팔렌 신화, 신성로마제국, 30년 전쟁, 제국 관습법적 구조, 세력균형, 유럽 주권국가체제

학번: 2012-22999

목 차

I.	서론.....	1
1.	문제제기	1
2.	기존연구 검토	4
3.	연구시기 및 연구방법.....	9
4.	논문의 구성.....	11
II.	신성로마제국의 관습법적 구조(ReichsVerfassung, Imperial Constitution)	13
1.	구성원: 황제와 제국영방.....	14
2.	제국개혁 시기 변화: 평화, 법, 방어질서로서 제국.....	18
3.	카를 5세와 종교개혁의 충격: 아우크스부르크 회의 (1555)를 통한 질서 회복	21
1)	카를 5세의 통치와 대외전쟁, 종교개혁.....	21
2)	아우크스부르크 회의(1555)를 통한 제국 정치, 종교질서 조정....	24
4.	소결.....	27
III.	제국 내 세력균형의 위기 1: 30년 전쟁(1618-1648)과 베스트팔렌 신화	29
1.	제국의 종교, 정치적 내전으로서 30년 전쟁.....	29
1)	위기의 원인: 황제 리더십 약화와 제국 영방들 간 갈등.....	30
2)	보헤미아 반란과 제국 내전으로의 확산.....	33
3)	합스부르크 세습영지의 변환과 제권강화에 대한 우려.....	35
4)	북독일 지역 세력의 개입과 제후들의 입장.....	37
5)	제국구성원들의 내전해결 노력과 그 한계: 프라하 회의(1635)	41
6)	제국 문제의 국제화와 내전종결 실패.....	43
7)	소결.....	46
2.	베스트팔렌 조약(1648)의 내용과 의미.....	48
1)	협상기본원칙과 방식 논쟁: 조화의 회복과 독일의 자유 (German Liberties).....	48
2)	제국 구성원들의 정치적 권한 조정.....	50
3)	종교문제 조정.....	53
4)	제국영방들의 사면, 지위, 영토 조정.....	55
5)	제국 내 세력균형과 유럽 세력균형의 연계.....	57
6)	소결.....	59

IV.	유럽 세력균형의 위기 1: 양면 전쟁과 제국의 회복, 1648-1740	60
1.	제국-위계 보존의 대내외적 요인.....	61
2.	튀르크와 프랑스의 위협: 집단안보의 문제.....	64
3.	제국 방어체제 개혁과 양면 전쟁 대응, 1680-1699.....	67
4.	유럽 세력균형과 오스트리아-신성로마제국의 회복.....	72
5.	오스트리아의 제국, 유럽전략의 한계, 1713-1740.....	77
6.	소결.....	80
V.	제국 내 세력균형의 위기 2: 오스트리아-프로이센의 갈등, 1740-1763	82
1.	제국 내 세력균형 변동과 프로이센의 부상.....	83
2.	오스트리아 왕위계승 전쟁: 영토와 제권을 둘러싼 갈등.....	84
3.	오스트리아, 프로이센의 대내개혁과 외교혁명, 1748-1756.....	89
4.	7년 전쟁(1756-1763).....	93
5.	소결.....	97
VI.	유럽 세력균형의 위기 2: 제국의 분열과 해체, 1763-1806.....	99
1.	계몽 절대주의 영향과 제국 영토들의 분화.....	100
2.	요제프 2세 황제의 제국정책.....	102
3.	제국 내외 영토 재분배 계획과 현상유지 노력.....	104
4.	프랑스 혁명 전쟁과 나폴레옹 전쟁, 제국의 해체.....	109
5.	소결.....	115
VII.	결론.....	117
	참고문헌	121

그림 목차

<그림 II-1>	제국 관습법적 구조(imperial constitution).....	21
<그림 IV-1>	베스트팔렌 조약 이후 신성로마제국과 유럽의 영토 변화	57

표 목차

<표 II-1>	제후들의 수 변화.....	17
----------	----------------	----

I. 서론

1. 문제제기

30년 전쟁(1618-1648)을 종결한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은 국제정치 학계에선 오랫동안 유럽 근대 주권국가체제의 토대를 마련한 기점으로 간주되어 왔다.¹⁾ 이는 국제정치학계에서 쉽게 깨지지 않는 “베스트팔렌 신화(Westphalian Myth)”라고 불리면서 역사적 오류에 한정되지 않고, 주권 원칙과 국제체제에 관한 이론들의 토대가 되었다. 대표적으로 신현실주의자 월츠는 이론화를 위해 국가, 주권의 역사성을 배제하고, 베스트팔렌 조약 이후 현재까지 무정부상태의 조직원리(organizing principle)에 기반한 국제체제를 몰역사적으로 가정했다(Waltz 1979). 국제정치학계에서 신화는 여전히 깨지지 않고 계속해서 국제질서에 관한 왜곡된 이해와 서사를 반복적으로 재생산하는 양상을 보인다(Carvalho et al 2011; Kayaologu 2010; S. Schmidt 2011). 신화는 특정한 단위와 체제에 대한 가정을 받아들이게 하여 지역적 특수성을 간과하고, 과거와 현재의 국제정치를 보는 고정된 시각을 갖게 한다는 문제가 있다.

이후 탈-베스트팔렌 질서에 대한 관심과 함께 베스트팔렌 조약의 역사적, 이론적 의미를 재평가하고 신화를 다각도에서 살펴본 연구들이 진행되었다(Bartelson 1995; Krasner 1993; Ruggie 1993; Teschke 2003). 베스트팔렌 조약 전후 주권에 대한 세부규범이 단계적, 점진적으로 정착되었고(Beaulac 2001; Croxton 1999; Osiander 1994), 유럽에서는 무정부상태(anarchy)와 위계상태(hierarchy)가 섞인 혼성질서(heterarchy)가 장기간 유지되었다(Hobson 2002). 주권과 근대국가, 국가체제의 등장계기를

1) 모겐소는 베스트팔렌 조약이 근대국가체제의 토대로서 영토국가 및 법의 원천, 세력균형을 구축했다고 평가했다. “국제법의 핵심 규칙은 15-16세기 상호 간의 국가들의 권리와 의무에 기반을 두었다. 이러한 국제법의 규칙은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이 종교전쟁을 끝내고 근대 국가체제(modern state system)의 토대로서 영토국가를 만들었을 때 구축되었다.” Morgenthau, 1948, p. 210; 1993, p. 254. 또한 세력균형을 구축한 의미를 지적했다. “30년 전쟁에서는 프랑스, 스웨덴의 리더십 아래의 하나의 동맹과 다른 쪽의 오스트리아인 동맹(coalitions)이 제국주의적 야심을 촉진했고, 스웨덴과 오스트리아는 서로의 야심을 견제하고 있었다. 30년 전쟁 이후의 여러 유럽의 조약들은 세력균형을 구축하려고 노력하였다.” Morgenthau, 1978, p. 196; 1993, p. 227.

베스트팔렌 조약에 환원시켜 볼 수 없고, 그 역사성을 조망하며 유럽의 국제정치적 근대 이행에 대해서도 여러 층위에서 검토되어야 한다(전재성 2009).

다양한 측면의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베스트팔렌 신화는 쉽게 깨지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신화에 대한 중요한 비판과 검토가 유럽정치와 국제정치적 기본 단위, 규범 또는 질서로서 ‘주권’과 ‘근대국가’, ‘주권국가 체제’의 등장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이었다. 신화의 주요 대상이자 핵심 행위자였던 신성로마제국(Holy Roman Empire)²⁾의 내부 동학에 대해선 간과해왔다. 그러나 베스트팔렌 조약의 핵심은 30년 전쟁의 원인이었던 신성로마제국의 구성원들 간 상호관계와 대내문제를 조정한 것에 있다.

최근 역사학계에서도 30년 전쟁과 그 이후 유럽정치에서 신성로마제국이 계속 ‘중심’이었다고 평가한다.³⁾ 하지만 계속 장기화된 전쟁과 국가 건설경쟁이 심화되는 유럽정치에서 제국이 어떤 정체(政體)를 가진 모습으로, 왜 장기간 존속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선 합의된 결론이 없다. 제국은 영토국가들로 이루어진 느슨한 연합으로서 또는 오스트리아 중심의 합성적 국가로서 베스트팔렌 체제의 일부였는가, 아니면 그러한 체제에서 이질적, 예외적인 봉건제국으로 남아있었는가?

당시 제국 구성원들에겐 황제와 제국영방들의 정치적 관계에 대한 이론적 문제가 제국의 생존과 구성원들의 실질적인 정치권력의 행사범위에 대한 현실적 문제였다. 하지만 제국에 대한 정당한 평가는 주권과 근대국가에 관한 편견으로 인해 어려웠고, 당대인들에게 남은 중세 이래 로마법과 로마제국에 대한 지속된 관념도 장애물이었다. 17-18세기에 들어 객관적인 역사, 정치학적 논쟁의 대상이 된 신성로마제국은 혼성적 단위로서 하나의

2) ‘로마제국’으로 지칭되다가, 1254년부터 공식문서에 라틴어로 ‘Sacrum Romanum Imperium’으로 불리기 시작했고, 독어로는 ‘Heiligen Römischen Reichs’이다. 15세기 후반 이후 ‘신성로마제국과 독일국가(Heiligen Römischen Reiches Teutscher Nation, Holy Roman Empire and German Nation)’를 공식명칭으로 사용했다. 유럽에선 ‘신성’과 ‘로마’의 의미를 축소했지만 19세기 초까지 ‘독일제국(German Empire)’으로 지칭했다.

3) 유럽사에서 신성로마제국에 대한 강조는 Brendan Simms, *Europe: The Struggle for Supremacy, from 1453 to the Present* (Basic books, 2013); Peter H. Wilson, *Heart of Europe: A History of the Holy Roman Empire*. (Harvard University Press, 2016), p. 1.

고정된 형태가 아닌 복수의 특징을 가졌다. 17세기 후반의 정치, 법학자인 푸펜도르프(Samuel von Pufendorf, 1632-1694)는 <독일제국의 현 상태 The Present state of Germany>(1667)에서 신성로마제국을 “비정상적인 국가체제(irregular system of states)”라고 지칭했다.⁴⁾ 그 의미는 오늘날 생각하는 ‘주권국가’들의 모임으로서의 국가들의 체제가 아니라, 제국도 연합도 아닌 명명할 수 없는 괴물과 같은 모습의 제국을 말하는 것이었다. 황제는 완전한 제국의 주권을 갖지 못했고, 개별 영토 안에서 통치권을 행사하는 7명의 선제후들에 의해 선출되었다. 동시에 황제를 대군주로 한 봉신 관계를 통한 위계질서가 남아있었고, 다양한 지위와 서열을 보유한 구성원들이 전체 제국을 이루고 있었다. 푸펜도르프는 제국의 생존을 위해선 비정상적이지만 완전히 주권국가가 아닌 기존 상태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당시 대외적 상황에선 정상적인 상태의 황제 중심의 주권국가나 또는 영토국가들의 연합으로 개혁하는 것보단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보았다.

중부유럽을 차지한 신성로마제국이 내적으로 어떤 질서를 이룬 상태여야 유럽에 평화를 가져올 것인지, 이러한 “독일문제(German Problem)”는 주변국들의 이익과 세력균형의 문제와도 직결된 핵심문제였다. 주변 군주, 국가들이 취한 제국에 대한 정책은 단일한 행위자로서 신성로마제국에 대한 정책만이 아니라 황제와 선제후, 중소 제후국들 각각에 대한 정책을 포함했다. 제국 외부 행위자들은 오스트리아 황제와 제국영방들을 모두 교섭대상이자 준-주권을 가진 행위자로서 대했지만 제국 안에서 황제가 대외정책의 결정권자여야 했다는 점에서 혼란이 있었다.

다시 말해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 이후 유럽정치에서 신성로마제국이 왜, 어떻게 존속했는지는 당대에도, 현재에도 쉽게 해명되지 않는 문제이다. 특히 국제정치학계의 베스트팔렌 신화에 관한 연구에서 신성로마제국의 대내 작동방식과 정치과정은 연구의 공백으로 계속 남아있다. 이에 따라 유럽정치에서 신성로마제국이 존속해 온 모습을 설명하지 않고, 유럽의 주권, 국가체제의 등장을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

4) Samuel von Pufendorf, *The Present State of Germany*, trans. Edmund Bohun, Michael J. Seidler ed., (Indianapolis: Liberty Fund, 2007).

따라서 본 논문의 핵심질문은 “베스트팔렌 조약 이후 신성로마제국은 어떻게 제국질서를 유지했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이다. 베스트팔렌 신화가 1648년을 근대 주권국가체제의 토대로 삼았다면, 본 연구는 신성로마제국 내부 동학에 더 초점을 두고,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1648년의 의미를 평가하고자 한다.

2. 기존연구 검토

국제정치학계에선 오랜 기간 주로 군사, 정치 층위 중심으로 근대국가 및 국가체제 형성을 설명하는 연구전통을 이어왔다(Hintze 1975; 박상섭 1996).⁵⁾ 30년 전쟁을 포함한 근대 초 내전과 국제전들은 국가건설의 촉매제였고, 국가건설 경쟁은 다시 전쟁을 촉진했다(Tilly 1985). 국가발전의 여러 유형들(ideal-types) 중 하나로서 전형적인 국민국가(nation-state)와 다른 신성로마제국에 대해선 봉건 제국으로서 유효성을 상실하고, 내부의 주요 영토단위들이 국가발전을 진행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Tilly 1990; Spruyt 1994).

역사사회학과 역사학계의 연구들을 토대로 한 최근의 논의들은 30년 전쟁과 베스트팔렌 조약 이후에도 신성로마제국이 약화되지 않았고, 영토단위들이 주권을 확보하면서 유럽 주권국가체제가 형성되었다는 점을 비판한다(Nexon 2009). 조약 전후 질서변화에 적응한 신성로마제국의 유연성과 연속성을 재평가해야하며, 이러한 소(小) 위계질서가 19세기 초까지 다양한 성격의 유럽단위들과 공존했고, 혼성질서를 유지했다는 점에서 유럽전반의 근대 이행이 완결되는 시점을 18세기-19세기로 늦춰서 봐야한다고 본다(Osiander 2001; Schroeder 1994; Teschke 2003).⁶⁾

5) 전통적으로 힌체-베버류의 군사기구와 관료제 발전을 중심으로 한 지정학적 경쟁(geopolitical competition) 모델이 지배적이었다. 이에 대한 비판은 Teschke 2003, pp. 118-127; Benno Teschke, “Revisiting the “war-makes-states” thesis : war, taxation and social property relations in early modern Europe.” in Asbach, O and Schroeder, P eds., *War, the State and International Law in Seventeenth Century Europe* (Ashgate, 2010), pp. 35-62. 신성로마제국과 독일영토들의 유기적 군사-국가 발전에 대해선 Peter Wilson, *German Armies: War and German Society, 1648-1806* (Routledge, 2002), ch.1 참조.

신성로마제국의 ‘관습법적 구조(Reichsverfassung, imperial constitution)’⁷⁾에 대한 평가는 여전히 논쟁적이다.⁸⁾ 이는 근대의 공식적, 법적 의미의 정부구조 또는 헌법의 의미와 다르며, 중세부터 근대 초까지의 성문화된 여러 제국 기본법(Grundgesetze, Basic Law)과 전통, 관행, 법 규범 등을 포괄한다. 이에 대해선 크게 두 가지 시각으로 나뉜다. 신성로마 제국이 다른 단위들과 유사한 근대적 국가성과 기능을 가졌다는 시각과 봉건제국의 특징이 핵심이었다고 보는 시각이다.

넥슨, 김준석, 슈미드는 신성로마제국을 전형적인 중앙집권화된 국가는 아니나 ‘합성적 국가(composite state)’ 또는 ‘연방적 국가(federative state)’, ‘제국-국가(empire-state)’와 같은 정체유형으로 보고, 제도적 연속

6) 테쉬케는 베스트팔렌 체제를 전근대적인 이질적 행위자들의 지정학적 체제(heterogenous geopolitical system)로 보고, 연방적 선출군주정(confederal elective monarchy)으로서 신성로마제국이 존속했다고 본다. 오시엔더는 근대국제정치의 등장을 프랑스 혁명과 산업 혁명 이후로, 슈뢰더는 1815년 빈 회의를 중요 국제정치적 변환(transformation) 기점으로 본다.

7) 1495년까지 체계적인 제국 기본법에 대한 정리는 없었고, 인본주의자들의 저술, 문학 등을 통한 로마제국 계승론(translatio roman)만이 있었다. 17세기 중반 공법학자이자 역사가자들이 신성로마제국의 실증적 법의 원천을 모색하고, 정부형태에 대한 논의들이 발전됨에 따라 관습법적 구조에 대한 법적, 정치적, 역사적인 이해가 축적되었다. 연구자들은 이를 ① 법, 관습, 전통, 실제적 합의가 축적된 체계 ② 로마법, 기본법, 교회법, 제국법/제국공법 등의 체계 ③ 정체(body politics), 정부형태 등으로 간주해왔다. 최근에는 실증법, 조약, 법률들과 정책결정, 제도, 행정적 관행, 법에 대한 해석과 체계화 등을 넘어 상징, 의례 형태의 문화적 재현체계에 따른 오래된 제도화의 방식에 주목한다. 또한 기존의 성문화된 폐쇄적 법적 체계보다 실제 행위자들 간 구성관계나 정치적 관행을 강조한다. Markus Volker, “The Historical Consciousness’ of the Empire,” in Evans, Schaich and Wilson, 2011, pp. 330-334; Barbara Stollberg-Rilinger, *The Emperor’s Old Clothes: Constitutional History and the Symbolic Language of the Holy Roman Empire*. Vol. 10. (Berghahn Books, 2015).

8) Joachim Whaley, *Germany and the Holy Roman Empire: Volume I: Maximilian I to the Peace of Westphalia, 1493-1648*. Vol. 1, 2.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Peter H. Wilson, *The Holy Roman Empire, 1495-1806* (London: Macmillan, 1999); R. J. W. Evans, Michael Schaich, and Peter Hamish Wilson, (eds.), *The Holy Roman Empire, 1495-1806*. (Oxford University Press, 2011).; Evans, Robert, and Peter Wilson, eds. *The Holy Roman Empire, 1495-1806: A European Perspective*. Vol. 1. (Brill, 2012).; 신성로마제국에 대한 연구사 정리는 T. C. W. Blanning, “Empire and State in Germany 1648-1848,” *German History* Vol. 12. No. 2 (1994), pp. 220-236.; 국가성에 대한 논의는 Peter Schröder, “The constitution of the Holy Roman Empire after 1648: Samuel Pufendorf’s assessment in his Monzambano,” *The Historical Journal* Vol. 42. No. 4, (1999), pp. 961-983.; Peter H. Wilson, “Still a monstrosity? Some reflections on early modern German statehood,” *The Historical Journal* Vol. 49. No. 2, (2006), p. 575.

성을 강조한다.⁹⁾ 신성로마제국은 16세기 등장한 프랑스, 스페인과 같은 왕조적 연합체(dynastic agglomerations) 또는 제국적 합성국가(imperial composite state)에 속하나, 지역엘리트들과 동질적 계약을 맺어 연방적 특징도 갖는다.¹⁰⁾ 제국적 합성국가들에 대해선 종교개혁과 계승전쟁 등의 도전이 있었으나, 신성로마제국의 제국제도들과 정치문화, 기능, 조직의 특징은 합스부르크와 제국의 지배를 안정화했고 존속할 수 있었다. 김준석은 신성로마제국이 근대 이행의 결정 국면인 15세기 말, ‘제국개혁(Imperial Reform)’ 시기에 외면적인 봉건성을 탈피하고 연방적 국가로 변화했고, 제도적 재생산 과정에서 계속 존속했다고 본다(Kim 2005).

위의 연구들은 국제정치적, 역사사회학적 관점에서 신성로마제국의 단위적 특징과 존속을 설명한 의의가 있다. 합성적 성격은 고정적으로 유지되지 않고 시기적으로 중심-주변부, 중앙-지방계약관계도 변화했다. 신성로마제국의 봉건적, 위계적 요소가 부활하여 합성적, 연방적 특징과 공존한 측면도 있었다. 넥슨의 연구범위는 종교개혁과 30년 전쟁 직후에 한정되어, 이후에도 신성로마제국이 제국적 합성국가로 어떻게 존속했는지 다루지 않고 있다. 둘째, 단위와 질서에 대한 비교 및 이론화를 목표로 두어 신성로마제국의 내부 구성원들의 동학을 상대적으로 간과했다. 마지막으로 대내외 압력에 따라 전근대적, 합성적 또는 연방적 국가들이 근대적 주권국가로 변화하는 과정에 있다는 ‘근대화(modernizing)’에 대한 편견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9) 합성적 국가로서 제국을 보는 견해는 Daniel H. Nexon, *The struggle for power in early modern Europe: religious conflict, dynastic empires, and international change*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9).; 연방적 국가 또는 국가연합에 대한 논의는 Kim Joon Suk, *Making States Federatively: Alternative Routes of State Formation in Late Medieval and Early Modern Europe*, P.H. Dissertation, University of Chicago, 2005, p. 29. 제국-국가론은 Georg Schmidt, 2011, “The Old Reich: The State and Nation of the Germans” in Evans, Schaich, and Wilson, (eds.), *The Holy Roman Empire, 1495-1806*. Oxford University Press.

10) 합성국가는 이질적 정치단위들이 상이한 계약으로 중심부 권위체와 연결된 특징을 지닌다. 합성국가의 군주들은 여러 구성영토들에 단일한 형태의 지배를 강제하지 않고, 각 영토들은 군주들과 지역 귀족에 의한 공식, 비공식 계약을 통해 각각의 법, 관습, 특권을 유지시킨다. 합스부르크 군주정은 합성국가의 대표적 예로서 간주된다. John H. Elliott, “A Europe of composite monarchies.” *Past & present* 137 (1992), pp. 48-71.; 합성국가와 신성로마제국에 대한 설명은 Nexon, 2009, pp. 71-74. pp. 81-84.

반면 아레틴, 슈뢰더는 신성로마제국이 대군주인 황제와 다수의 제후들 간 봉신관계를 기본 축으로 하며, 각 구성원들에게 비대칭적인 권력, 권한이 분배된 위계질서라고 본다.¹¹⁾ 제국은 전통, 관습법, 교회법과 보통법 등이 혼합된 ‘법에 의한 통치(rule by law)’에 따른 기능과 역할을 보유했다. 법, 평화질서로서 특징은 구성원들 간 경쟁을 제한하며 약소세력들을 보호하는 동시에 외부의 경쟁적 세력균형에 쉽게 동화되지 않게 했다. 또한 슈뢰더에 따르면 오스트리아가 주도한 왕조제국은 지리, 구조적 취약성으로 인해 독일 제후들과 협력하면서 너무 강하지도, 약하지도 않은 상태를 계속 유지해야 했다.¹²⁾ 군사, 정치적 위기 시에도 외부세력들은 제국 대내 균형의 변동이 가져올 체제의 불안정을 우려하여 오스트리아의 존속을 지지했다.

본 연구는 신성로마제국의 위계적 특징을 강조하는 아레틴, 슈뢰더의 시각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 이들은 넥슨, 테쉬케 등의 연구에서 표면적으로 다뤄진 신성로마제국의 내부 구조와 역학에 대한 더 정확한 평가를 제공한다. 하지만 법, 평화질서의 구축도 구성원들의 권력정치적 충돌의 결과로서 나왔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대내 균형이 무너지는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질서가 복원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

나아가 본 연구는 제국의 존속이 당시 유럽 국제정치의 예외가 아니라 유기적으로 연결된 정상상태였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는 당대인들의 평가와도 부합한다. 17-18세기 이론가들은 신성로마제국의 관습법적 구조의 약점을 보완하지만 현상유지와 이전질서로 복원하고 강화하는 개혁을 지지했다. 비정상성의 정상화가 가져오는 불안정을 피하고, 제국의 평화와 유럽의 평화를 위해선 급진적인 개혁보다는 현상유지를 적절한 대안으로 생각했다.¹³⁾ 즉, 다른 유럽단위들이 주권확립과 국가적 변환으로 생

11) Karl Otmar von Aretin, “The Old Reich: A Federation or a State of the German Nation?,” in R. J. W. Evans, Michael Schaich, and Peter H. Wilson (eds.), *The Holy Roman Empire, 1495-1806* (Oxford University Press, 2011); Paul W. Schroeder, *The transformation of European politics, 1763-1848*. (Oxford University Press, 1996); Wilson, 1999.

12) Ingrao, 2000, p. 21; Schroeder, 2001, p. 217.

13) 루소, 라이프니츠, 생피에르 등은 유럽 국제관계 내 평화를 조정하는 체계의 대안모델로서 제국을 인식했다. 연방주의(federalism)에 대한 논의는 제국 ‘안’의 정체(政體)와 조직

존한 것과 달리, 신성로마제국은 단순히 ‘제국-주권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다.¹⁴⁾ 역사사회학적 연구들의 견해와 달리, 봉건, 위계질서의 긴장관계 속에서 제국의 존속이 가능했던 것은 주권국가화 과정에 있어서가 아니었고, 오히려 정체의 전면 개혁이나 근대화를 ‘목표’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본 연구는 1648년 이후 신성로마제국의 존속에 기여한 대내적 요인과 대외적 요인을 찾고, 이를 시기별로 제국 내부 세력균형과 유럽 세력균형의 변동과 회복 과정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대내적 요인은 제국의 구성원들이 대내 세력균형 변화에 따라 움직이면서 위계적인 관습법적 구조를 유지하려고 했다는 점이다. 관습법적 구조는 구성원들의 권한, 지위를 조정해 내부 균형과 평화를 유지하는 법, 제도들을 만들어왔다. 제국 안에선 구성원들이 주도하여 정치적 권리, 자유를 보존하고, 공동이익의 합의와 타협을 추구했다.¹⁵⁾ 동시에 구성원들 간 세력 격차와 영토 및 지위를 확보하려는 상호질시(mutual jealousy)에서 나온 권력정치적 경쟁이 있었다. 이는 갈등과 분열을 낳기도 했지만, 어느 한 쪽이 일방적으로 우세해지는 것을 막는 세력균형 상태를 만들었다.

대외적 요인은 비주권적인 상태로써 제국의 현상유지가 유럽 평화의 보존에 핵심이라는 동의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외부 행위자들은 제국 내 균형의 유지 혹은 변동이 자국과 유럽체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제국의 존속을 지지했다. 황제가 제권을 너무 강화하려고 하면 제국영방들의 편에서 개입하고, 반대로 과도하게 제국이 약화되는 것의 세력균형의 변화를 우

을 기반으로 대외질서의 조직원리를 상상하는 데 영향을 주었다. Patrick Riley, “Three 17th century German theorists of federalism: Althusius, Hugo and Leibniz.” *Publius* (1976), pp. 7-41.

- 14) 신성로마제국에 대한 연구자들은 제국의 특수성을 설명하기 위해 분할된 주권(fragmented sovereignty) 또는 분리 가능한 주권(divided sovereignty)이라는 특징을 지적해왔고, 황제, 제국의 주권과 영토주권의 현실적 범위를 다양하게 개념화했다. Hanns Gross, *Empire and sovereignty: a history of the public law literature in the Holy Roman Empire, 1599-1804*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5). Blanning, 1994, pp. 220-236.
- 15) 웨스트팔은 제국제도를 “불균등한 위계적 위치에서 행위자들 간의 의사소통적인 관계”를 조정하는 장으로서 본다. 이를 통해 제국제도들이 일방적인 권력행사의 도구에 한정되지 않고, 황제, 제국영방, 신민들의 합작품이었다고 강조한다. Westphal, 2011, pp. 85-86.

려해 오스트리아 리더십 중심의 단합을 지원했다. 반면 제국이 느슨한 국가 연합과 같이 변하면 너무 약하고 분열적이어서 패권에 종속되거나 유럽의 평화를 깰 가능성이 있었다.

이러한 갈등과 타협의 결과, 베스트팔렌 조약 이후 신성로마제국은 여러 충격에도 불구하고 제국질서를 유지했다. 제국 대내외 행위자들 모두 신성로마제국의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하지 않았고, 세력균형에 의한 유럽평화 보존의 논리가 이를 지탱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신성로마제국이 위계성을 유지하고, 통일된 군주정부로서의 강대국도, 소수의 강력한 군주들로 이루어진 연합으로도 변하지 않은 채 생존할 수 있었다.

3. 연구시기 및 연구방법

베스트팔렌 신화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30년 전쟁 및 조약 전후의 시기를 분석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하지만 베스트팔렌 조약 이후 유럽 내 신성로마제국의 존속 원인을 설명하기 위해선 제국 거버넌스의 유지, 발전, 해체를 겪는 약 15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초반까지 다룰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각 시기별 맥락과 행위자에 따라 제국 내 균형과 유럽 세력균형을 조정하는 논리가 어떻게 타협했는지 설명한다.

신성로마제국은 관습법적 구조의 취약성으로 인해 30년 전쟁, 종교개혁의 충격 이후에도 계속해서 더 심화된 문제들을 당면함으로써 위기와 회복의 사이클이 있었다. 제국-주권의 이중적 또는 비정상적 상태에서 대내 균형에 대한 안과 밖의 도전이 있었고, 각 시기와 행위자들에 따라 대응과 회복양상도 달라졌다. 베스트팔렌 조약 역시 계속 축적된 제국 관습법적 구조에 관한 합의들 중 일부였고, 그런 연속성을 고려하여 제국 내부 세력균형에 어떤 조정이 있었는지 다룰 필요가 있다.

30년 전쟁이 발발한 1618년부터 해체 시점인 1806년까지 크게 네 시기를 나누어 각각 제국 내외 세력균형이 내부, 외부의 위협요인에 의해 흔들렸다가 다시 복원되는 단계로 살펴본다. 세 번의 시기에서 대내 균형에 대한 위기와 유럽 세력균형의 위기를 극복하고 신성로마제국이 존속할 수

있었으며, 마지막 단계에선 균형회복에 실패하고, 해체로 이어지게 되었다. 1차 대내 균형에 대한 위기국면은 30년 전쟁과 베스트팔렌 조약이 체결된 시기이다(1618-1648). 두 번째 시기는 유럽 세력균형의 논의가 등장하고, 대외전쟁을 통한 제국의 회복국면이다(1648-1740). 2차 대내 균형에 대한 위기국면은 오스트리아-프로이센 갈등의 시기로서 오스트리아 왕위계승전쟁과 7년 전쟁 시기이다(1740-1763). 마지막은 7년 전쟁 이후 프랑스의 변동으로 인한 유럽 세력균형의 위기와 제국 해체단계(1763-1806)이다.

본 연구의 연구방법은 조약문, 회고록, 역사서, 팜플렛 등의 1차 자료와 2차 자료를 활용한 문헌연구이다. 국제정치학, 역사사회학계의 연구들은 국제정치사에 대한 역사학계의 2차 연구들을 주로 참고해왔고, 기존의 역사서술(historiography)을 반영한 사례연구와 이론화를 우선시한 문제가 있었다.¹⁶⁾ 이에 따라 유럽 국가체제 발전, 근대국가 형성, 정체모델에 관한 비교연구 흐름에서 신성로마제국의 발전경로를 유추해왔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당시 신성로마제국과 관련된 1차 자료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을 통해 내부 역학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30년 전쟁과 베스트팔렌 조약에 대해선 최근 영미권 연구자들이 번역한 자료집을 참고했다.¹⁷⁾ 16세기 이후 독일관련 1차 자료들은 The German Historical Institute에서 만든 “German History in Documents and Images”의 자료들을 참고했다.¹⁸⁾ 그리고 17-18세기의 문헌들 중 일부는 인터넷 아카이브(Internet Archive)를 참고했다.¹⁹⁾ 연구자의 언어능력의 제약으로 인해 독일, 오스트리아 등의 1, 2차 자료를 폭넓게 참고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16) 국제정치이론, 역사사회학파의 역사적 접근방법에 대한 평가는 George Lawson and John M. Hobson. "What is history in international relations?." *Millennium* Vol. 37. No. 2, (2008), pp. 415-435; Andreas Osiander, *Before the state: systemic political change in the West from the Greeks to the French Revolution*. (OUP Oxford, 2007), chapter 1 참조.

17) Tryntje Helfferich, *The Thirty Years War: A Documentary History* (Hackett Publishing, 2009); Peter H. Wilson, *The Thirty Years War: A Sourcebook* (Palgrave Macmillan, 2010).

18) <http://germanhistorydocs.ghi-dc.org/index.cfm> (검색일: 2016년 5월 20일)

19) <https://www.archive.org/> (검색일: 2016년 5월 20일)

4. 논문의 구성

본 논문의 2장은 신성로마제국에 대한 예비적인 고찰에 해당되며, 이후 시기의 제국 내외 동학을 이해하는데 핵심이 된다. 3장부터 6장은 네 시기에 걸쳐 제국 내외 세력균형에 대한 위기대응과 복원과정에서 제국이 존속할 수 있었음을 분석한다.

2장은 신성로마제국의 관습법적 구조의 특징을 검토한다. 제국개혁 시기를 거쳐 구성원들 간 관계와 제도들을 포함하여 내적으로 어떻게 위계 질서를 형성해왔는지 살펴본다. 이는 황제와 제국영방 어느 한 쪽으로 세력 균형을 치우치지 않고, 해체 시점까지 제국을 지탱하는 연속적이고, 유연한 구조를 만들었다. 종교개혁과 카를 5세 황제의 통치에 의한 충격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정치적 타협을 통해 회복했는지 살펴본다.

3장은 제국의 내부 문제와 대내 균형의 변동으로 나타난 30년 전쟁과 베스트팔렌 조약을 통한 회복 과정을 다룬다. 30년 전쟁은 신성로마 제국의 관습법적 구조를 둘러싼 구성원들의 종교, 정치적 갈등에서 촉발된 내전이었고, 베스트팔렌 조약의 내용도 제국 내부 균형의 조정과 대내문제 해결을 중심으로 그 의미를 다시 파악하고자 한다.

4장은 1648년 이후 지속된 전쟁을 통해 유럽 내 국제정치적 원칙으로서 세력균형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면서 신성로마제국이 어떻게 회복했는지 다룬다. 양면 전쟁 속에서 제국은 위계적인 정체성을 보존하며 지정학적 역할과 지위를 회복했고, 제국의 현상유지가 세력균형에 의한 유럽 평화의 핵심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존속했다.

5장은 프로이센의 성장에 따라 제국 내부균형이 깨지면서 발생한 오스트리아 왕위계승 전쟁(1740-1748)과 7년 전쟁(1756-1763) 시기를 다룬다.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의 영토적 고착화와 갈등은 제국에 질적으로 다른 충격을 가했다. 대내외 세력들이 유럽 세력균형 논리로 양자의 갈등으로 인해 깨진 제국과 유럽의 세력균형을 어떻게 복원시켰는지 다룬다.

6장은 7년 전쟁 후 제국, 유럽 세력균형에 대한 변동과 1806년까지 제국 해체까지의 과정을 살펴본다. 7년 전쟁 후 이후 오스트리아의 현상 변경적 시도를 막으려 프로이센과 제국의 중소 세력들은 관습법적 구조의

유지를 위해 노력했다. 유럽 세력균형 논리는 계속 제국의 관습법적 구조를 지탱했지만 동시에 약탈적인 강대국 정치로 제국의 분할위협이 높아졌다. 프랑스 혁명 이후 제국 내외 세력들이 나폴레옹의 제국화와 전쟁대응 과정에서 제국과 유럽의 균형을 회복하지 못했고 제국의 해체로 이어졌다.

II. 신성로마제국의 관습법적 구조 (ReichVerfassung, Imperial Constitution)

본 장에서는 3장 이후의 논의를 위해 위계적인 ‘제국’으로서 신성로마제국의 내부 구성과 작동원리를 설명한다. 1절은 제국의 핵심 구성원들에 대해 설명하고, 전통, 관습, 법들이 축적된 관습법적 구조와 제국제도에 대해 살펴본다. 1495년 보름스 제국의회부터 16세기 초중반까지 이어진 ‘제국 개혁(Reichsreform)’ 시기 제국의 변화가 주목된다.²⁰⁾ 개혁 이후 계속 봉건적 위계성(feudal hierarchy)을 유지했는지, 아니면 주권국가로 변모했는지에 대해선 논쟁적이다.²¹⁾ 전자의 견해는 제국에서 중층의 위계질서가 더 복잡한 형태로 강화되었다고 보고, 후자는 제국정치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이 ‘독일 국가(German nation)’ 의식을 공유했으며, 이를 통해 ‘제국-국가(empire-state)’를 안정화했다고 평가한다. 세부적인 변화내용들은 제국이 18세기 중후반까지 생존하는데 상당히 유연하면서도 연속적인 틀을 제공했다.

신성로마제국의 관습법적 구조의 성격에 대한 여러 견해는 제국법, 제도들에 대한 평가와 연관된다. 최근의 시각은 제국의 법, 제도들에 대해 국가이행의 지표로 보기보다, 구성원들이 특정 시기 제국보존을 위해 그것을 통해 어떤 목표, 동기, 행위를 보였는지를 주목한다.²²⁾ 웨스트팔은 제국

20) 윌슨은 제국개혁 시기를 보름스 의회부터 황제 막시밀리안 사망(1495-1519)까지 또는 황제 카를 5세 통치 시기(1520-1555)까지 두 시기로 나눈다. 1519년 이후 카를 5세가 황제와 제국영방들 간의 균형을 완전히 바꾸고, 개혁 아젠다를 수정해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기 때문이다. Peter H. Wilson, *The Holy Roman Empire 1495-1806* (Palgrave Macmillan, 1999), pp. 20-21.

21) 전자는 아레틴이, 후자는 슈미드의 논의가 대표적이다. 논쟁에 대해선 Karl Otmar von Aretin, “The Old Reich: A Federation or a State of the German Nation?,” in R. J. W. Evans, Michael Schaich, and Peter H. Wilson (eds.), *The Holy Roman Empire, 1495-1806* (Oxford University Press, 2011); Georg Schmidt, “The Old Reich: The State and Nation of the Germans,” in Evans, Schaich and Wilson, 2011. 슈미드와 비슷한 평가를 내리는 김준석은 역사사회학적 관점에서 신성로마제국이 외부의 지정학적 경쟁, 압력에 대한 대응으로 제국개혁시기 근대적 국가발전으로 가는 결정적 국면을 거쳤다고 본다. 김준석, “‘연방적 국가’의 탄생” 『국제정치논총』 Vol. 46, No. 4 (2006), pp. 61-86.

22) Siegrid Westphal, “Does the Holy Roman Empire Need a New Institutional

제도를 “불균등한 위계적 위치에서 행위자들 간 의사소통적인 관계를 조정하는 장”으로 본다.²³⁾ 이를 통해 제국제도들이 일방적인 권력행사의 도구에 한정되지 않고, 황제, 제국영방, 신민들의 합작품이었다고 강조한다. 하터는 제국적 질서의 핵심 특징을 ‘법적 다원주의(legal pluralism)’로 보고, 신성 로마제국이 제국 기본법(Grundgesetze, Basic law), 보통법, 교회법 등을 통한 중재, 조정, 합의체계를 만들어왔음을 강조한다.²⁴⁾ 제국은 다층의 합성적 법체계(multiple composite legal system)를 통해 상이한 지역의 다양한 신민들을 통치할 수 있는 강점이 있었다.

신성로마제국의 관습법적 구조는 19세기적 의미인 헌법 또는 국법과 다르며, 18세기 중반까지 존속했고, 다른 정치단위들과 다른 독특한 특징이다. 전통, 관례 등으로 합의되어왔고, 제국 기본법이나 공식 조약으로 간주되기 전부터 존재했다. 제국의 대내구조변화를 단선적인 국가발전 경로로 평가하기보다, 베스트팔렌 조약을 포함한 과거 여러 구체적인 합의들이 연속성을 가지면서도, 시기별 제국정치, 종교적 상황 변화에 따라 유동적으로 조정된 과정을 주목해야 한다.

3절에서는 카를 5세 지배와 종교개혁이 신성로마제국에 준 정치, 종교적 충격을 살펴보고, “아우크스부르크 제국종교평화” 또는 “아우크스부르크 화의”(Peace of Augsburg, 1555)의 의미를 평가한다. 이것이 황제와 제국영방들의 균형을 어떻게 조정했는지, 다음 장에서 다루는 30년 전쟁의 원인과 연관하여 의미를 살펴본다.

1. 구성원 - 황제와 제국영방

신성로마제국은 수장인 황제와 다양한 제국영방(Reichsstände, Imperial estates)들로 구성된다. 황제와 제국영방들의 관계는 중세 시기

History?,” in Evans, Schaich and Wilson, 2011, p. 94.

23) Westphal, 2011, p. 85-86.

24) 법적 구조의 특징은 제국수준에서 지방장원(seigniorial domain) 수준까지의 전통, 법, 특권, 규칙들의 혼합(conglomerate)으로 볼 수 있다. Karl Härter, “The Early Modern Holy Roman Empire of the German Nation (1495-1806): A Multi-layered Legal System,” in Jeroen Duindam, et al. *Law and empire: ideas, practices, actors* (Leiden: Brill, 2013), pp. 112-115.

봉건 왕과 가신사이 개인적 유대관계를 기반으로 한 전쟁지원 의무에서 비롯되었다. 중세 왕의 봉건적 역할은 중재자, 심판자, 특권과 수여식(investiture), 의례 주최자였고, 군주로서 역할과 최고 귀족으로서 덕, 기사적인 수행을 보였다. 황제는 기독교보편 공동체의 수장이자 세속 질서에서 가장 상위의 대군주(overlordship) 지위를 보유했는데, 교황에게 임명되어 대관식을 올려야 했다.

금인칙서(Golden Bull, 1356)는 관습법적 구조를 따라 황제선출 방법을 조정하고, 선거권을 갖는 선제후(prince-electors, Kurfürsten)들의 수를 7명으로 정했다. 성직 선제후 3명(마인츠, 쾰른, 트리어 대주교), 세속 선제후 4명(보헤미아 국왕, 작센 공작, 브란덴부르크 변경백, 팔츠 궁중백)이었다. 황제와 주요 제후들 간의 타협으로서 만들어졌고, 신성로마제국의 가장 중요한 기본법으로 간주된다. 이는 제국의 ‘목적’과 ‘역할’, ‘제국의 계승’에 대한 원칙, ‘로마 왕’(King of Romans)의 선출과 관련된 선제후들의 역할과 법적 지위, 권한을 조정했다.²⁵⁾

“황제라는 지위의 이름으로 우리는 선제후들 간의 불화(disunity)와 투쟁에 대항해야 하는데, 이는 우리의 제국직위(imperial office)와 선제후로서의 권리 때문이다...상호 간의 통합(unity)을 위해선 선제후들 사이에 만장일치(unanimity)를 낳고 불명예한 분파를 회피하고, 서로 간의 다양한 위험을 막아야한다...”

금인칙서는 황제의 선출권을 교황으로부터 독일제국으로 가져온 의미가 있고, 혈연에 의한 왕위계승을 불가능하게 했다. 황제는 교황의 간섭에서 벗어나 왕의 선출을 담당하는 선제후들의 특권을 인정했고, 황제는 선

25) 선제후 회의 결정은 과반수 득표로 결의하고, 마인츠 대주교가 선제후 회의 의장인 제국대제상직을 맡고, 독일 왕 선거를 위한 선제후 회의는 프랑크푸르트에 소집한다. 성직, 세속 선제후들의 특권, 권리, 자유 등을 보장하고(2조), 마인츠 대주교가 황제가 부재할 경우 선제후들을 소집할 권한이 있었으며, 선제후들은 장자상속권과 영토불가분성을 인정해 선제후국의 영토분할로 선제후 수에 변화가 생기는 것을 막았다. 8-11조는 서제후들에게 재판권, 관세수익권 및 주화수익권과 같은 중요 권한을 부여했다. 12조는 선제후들과 황제의 연례모임을 허용했다. 평화유지명령 동맹을 제외한 일체의 동맹체결은 금지하고(15조), 제권을 통해 영주에 대한 쟁의, 소송을 불법화하고 부정의한 전쟁을 방지(17조)했다. “The Golden Bull (1356)” p. 2.

http://germanhistorydocs.ghi-dc.org/pdf/eng/Doc.15-ENG-Golden%20Bull_ENGLISH.pdf
(검색일: 2015년 9월 13일)

제후들의 간의 불화를 중재, 조정할 의무가 있었다. 이러한 점은 제국의 중앙권력과 영토권력 간의 균형을 부여한 것이었다.²⁶⁾ 루돌프 1세(1273-1291) 이래 한 번을 제외하고 합스부르크는 막대한 영토에서 나오는 자원을 토대로 선제후들과 협상하여 제권을 계속 보유할 수 있었다.

제국영방은 제국의회(Reichstag, Imperial Diet)에 참석하는 투표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는 개인, 집단을 지칭한다. 성직 영방들은 성직 선제후들, 대주교공(prince-archbishop), 주교공(prince-bishop), 대수도원장(abbot), 소수도원장(prior), 제국기사단(Reichsritter, imperial knights)들이 포함되었다. 세속 영방들은 세속 선제후들, 대공(Archduke), 공작(duke), 변경백작(margrave), 방백작(Landgrave), 남작(Freiherr)과 제국자유시 들이다. 모두 황제의 가신으로서 중첩된, 분화된 관할권 안에서 봉신관계를 맺었다. 1480년대 이후 황제의 관할권 하에서 제국직할령(Reichsfreiheit 또는 Reichsunmittelbarkeit)과 비직할령이 구분되었는데, 제국직할령 지위의 영방들은 대군주로서 상위 지위에 황제만이 있다는 의미이다. 이들은 Reichsgraf로도 불린다.

제국의회는 제국의 구성원들이 파견한 대표들로 이루어진 신성로마 제국의 공동관심사를 위한 협의체이자 최고의사결정의 장이었다. 그러나 제국 구성원들을 근대적 의미의 비인격적, 추상적인 정치적 주체로 볼 수 없고, 마찬가지로 제국의회도 공식화된 ‘제도’이기보다 구성원들이 스스로를 대표하여 드러내는 재현(representation)의 장이었다. 대관식과 제국의회와 같은 중요 행사에서 황제는 제국의 최고통치권(majesty)을 행사했는데, 이는 복식, 보물, 왕관, 검, 휘장(insignia)과 같은 시각적 요소에서 드러났다. 1486년 로마 왕으로 선출된 막시밀리안 대공의 대관식은 황제의 역할, 책임, 의례형식과 봉토수여식의 중요성을 명백히 드러냈다.²⁷⁾

26) Peter Wilson, 1999, p. 19. 김준석은 신성로마제국에선 선출을 통한 왕위계승의 원칙 확립으로 왕권강화를 위한 체계적 노력을 어렵게 했다고 본다. 김준석, 2006, pp. 72-73.

27) “Royal Coronation of Maximilian I (April 9, 1486).” p. 2. http://germanhistorydocs.ghi-dc.org/sub_document.cfm?document_id=3756 (검색일: 2015년 9월 15일) 당시 황제와 선제후들이 지위를 드러내는 복식을 입은 것이 상세히 묘사되었다. 콜로네 대주교가 로마 왕에게 묻는 질문 6가지에 황제의 전통적 역할과 의무가 거론된다. 황제는 “가톨릭 신앙을 보존”하고 “신성한 교회의 수호자”, “신이 부여한 대로 전임자들의 정의에 따라 통치”해야 하며, “제국과 제위의 권리들을 보

제국영방들의 자격과 제국의회의 대표권은 상당히 오래 비고정적이었고, 상징적인 시각화 중심이었다. 왜냐하면 멤버십 선정 기준이 여전히 불명확했고, 전쟁지원에 기여하지 않은 영방들도 목록에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점차 구성원들 간 위계는 제국의회에서 참석자들의 서열, 지위에 대한 정확한 명시를 통해 가시화되었다. 1521년 보름스 제국의회에서 만들어진 제국대장(Reich Matrikel)은 각 영토에 부여된 제국의회의 대표권을 보장했다. 제국영방들은 황제 선출권을 보유한 선제후의 대표들과 일반 제후들의 대표들, 제국시의 대표들이 각각 별도의 모임(corpora, colleges)을 갖는 형식으로 구분되었다. 선제후들은 다른 제국영방들보다 상위지위의 특권, 지위를 누리고자 했고, 일반 제후들은, 도시들은 황제와 협력해 선제후들 중심의 주요 의사결정을 막고자 했다.

<표Ⅱ-1> 제후들의 수 변화

		성직(Ecclesiastical)		세속(Secular)		
		1521년	1792년		1521년	1792년
선제후 (electors)	선제후	3	3	선제후	4	5*
제후/군주 (princes)	대주교공, 주교공	50	24	공작, 변경백작, 방백작	33	61
영주 (lords)	대수도원장 소수도원장	83	40	백작	143	99
		136	67	180	180	165

* 1648년 바이에른 선제후가 8번째로, 1692년 하노버 선제후가 9번째로 추가되었다. (Wilson, 2004, p. 43 참고작성)

호하고, 부당하게 상실된 것을 회복하고, (권위를) 제국과 임페리움의 선(the good of the empire and the imperium)을 위해” 사용할 것인지, “가난한 자와 부자, 미망인과 고아들의 정당한 심판자이자 정의로운 수호자”가 되어야 하며, “로마교황과 신성로마교회에 충성, 복종”해야 했다.

2. 제국개혁 시기 변화: 법, 평화 질서(Rechts-und Friedensordnung)로서 제국

제국개혁의 배경은 15세기 초 흑사병, 후스파의 도전 등에 따른 제국 내 평화 유지에 대한 관심, 그리고 교회 대분열로 촉발된 교회개혁이 있었다. 중요한 개혁목표는 약소 세력들을 포함한 구성원들의 갈등을 방지하고, 조정하는 법, 평화질서를 만드는 것이었다. 대외적으로는 합스부르크가와 부르봉가의 갈등이 있었고, 황제는 제국에 이탈리아 원정과 투르크 전쟁 지원을 요청했다. 이러한 갈등 상황에서 제국영방들은 합스부르크에 대한 자원동원의 범위와 방법에 대해 고심하게 되었다.

황제의 리더십과 정치력은 왕가의 이익과 제국의 이익을 조화시키는데 있었다. 막시밀리안 1세는 봉건 대군주로서 합스부르크 후견체제를 활용하고, 합스부르크 왕조이익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제국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제국영방들과 협력하고, 제권강화를 추구했다. 이탈리아 원정 및 부르군트, 네덜란드, 헝가리 등과 관련한 막대한 세습영지를 중시한 이유는 독일 왕으로서 지위를 고착화하고, 제권이 가진 보편성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또한 교황에 의한 로마 대관식은 안정적인 제위를 보존하는데 필요했다.²⁸⁾ 그러나 제국영방들은 1480년대 이후 외세대응을 위해 제국상비군을 마련하는 문제에서 제국 내 황제권 강화를 우려했다. 이에 따라 상비군 대신 주기적인 부담(levy) 체계를 합의했다.²⁹⁾ 막시밀리안 1세는 제후들의 원조를 얻어내기 위한 반대급부로서 정치적 양보를 진행했다.

이를 배경으로 1480-90년대부터 논의가 본격화된 개혁의제들은 신성로마제국이 당면한 대내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는지 보여준다. 이전부터 제국개혁과 방어체제를 마련해야 하는 필요성은 이미 대두되었고, 황제와 제국영방들 양 쪽에서 개혁내용들이 제언되었다.³⁰⁾ 양 쪽이 공유한 개혁원칙은 “평화와 법의 관리”였다.

이에 따라 ‘영구평화유지명령(Ewiger Landfriede, Perpetual

28) Whaley, 2012a, p. 70.

29) Whaley, 2012a, p. 79.

30) 콘스탄스 공의회, 바젤 공의회(1410-20년대)의 맥락을 배경으로 한다. 지기스문트(1410-1437) 개혁 주도자들은 황제와 알브레히트 2세 국왕(1348-1349) 때도 시도한 제국개혁 법안들을 통과시켰다.

Public Peace)’과 ‘게마이어 페니히(Gemeiner Pfennig, Common Penny)’³¹⁾라는 제국세 도입과 함께 평화유지수단으로서 정기적 모임, 최고대법원(Reichskammergericht, Imperial Supreme Court) 설치를 포함한 네 가지 주요 사안에 대한 조치가 시행되었다. 또한 제국 각 지역을 10개의 크라이스(Reichskreise, Imperial Circles)라는 행정구역으로 나누었고, 공동방어와 제국세, 사법적 판결 시행, 종교적 평화 시행 등의 역할을 맡았다.

영구평화유지명령의 목표는 “안정적인 법, 질서를 구축,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며 “기독교세계에 대한 공격을 저지하는 대내외의 방어, 평화 유지”였다.³²⁾ 이에 따라 쟁의를 불법화했다(2조). 또한 “평화와 법의 시행”을 위해 황제는 제권을 한정하고, 입법자로서의 주권적 군주보다 법체계의 ‘중재자’로서 역할을 확인했다.³³⁾ 황제는 제국에 대한 의무를 인지하고, 선 제후, 군주, 제국영방들의 모임을 매년 정례적으로 소집하기로 했다(6조). 제국영방들은 황제의 파트너로서 함께 제국을 유지시키는 역할을 인정받았고, 황제와 영방들의 합의는 더욱 발전되었다.

대내 위계질서의 핵심 축은 제도화된, 공식적으로 성문화된 관계보다 이러한 가시적, 비가시적인 것을 포함한 황제-제국영방의 정치적 관계였다. 보름스 제국의회는 1356년의 금인칙서의 형태를 반영했고, 여전히 전통적인 개인적 봉신관계와 봉건적 대군주로서 황제의 역할이 강조되었다. 하지

31) 게마이어 페니히의 도입 목적은 “우리(막시밀리안 황제와 제국영방)가 신성제국의 법과 질서를 보존하고, 기독교의 적, 투르크와 다른 신성제국과 독일의 적들을 저지하기 위해 서..”라고 명시되었다. “Imperial Reform (1495), B. The law of the Common Penny” pp. 4-6.

http://germanhistorydocs.ghi-dc.org/sub_document.cfm?document_id=3795
(검색일: 2015년 9월 20일)

32) 영구평화유지명령은 중세의 사적 전쟁, 쟁의, 폭력에 대한 정신적인 금지로부터 발전했다. 마인츠 란트프리데(Mainzer Reichslandfreide, 1103), 대 란트프리데(The Great Imperial Landfrieden, 1152)는 군주들의 일시적인 동맹을 허용했다. 제국 란트프리데(The imperial Landfrieden, 1235)와 금인칙서(1356)의 쟁의(feud)의 금지 조항에서 지속적으로 발전되었다. 13-14세기까지 영토평화 유지를 위해 도시동맹, 지역동맹들이 형성되었다.

33) “Imperial Reform (1495), A. The Perpetual Public Peace” p. 2. 더불어 제국통치 평의회(Reichsregiment)라는 황제와 황제대리인의 주재 하에 2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상설위원회의 설치법안이 상정되었다. 제국통치평의회는 1500-2년, 1521-30년 실제 설치되어 활동하긴 했으나 결국 실패했다. 많은 제후국들이 자신의 정치적, 재정적 독립성을 저해할 것을 우려하여 반대했기 때문이었다.

만 관례화된 봉토수여식의 상징적, 가시적 행위로서 제국영방들의 지위가 더 드러났다. 참석자들의 집단적 행위(collective action)를 통한 정치적 재현/대표(representation)의 정당성과 지위를 가시적으로 보였고, 공적의미를 제시하는 측면에서 새로웠다.³⁴⁾ 여전히 성문화된 기록보다 상징, 의례적 측면이 중요했고, 그 안에서 제국은 유연성과 유동적 성격을 계속 내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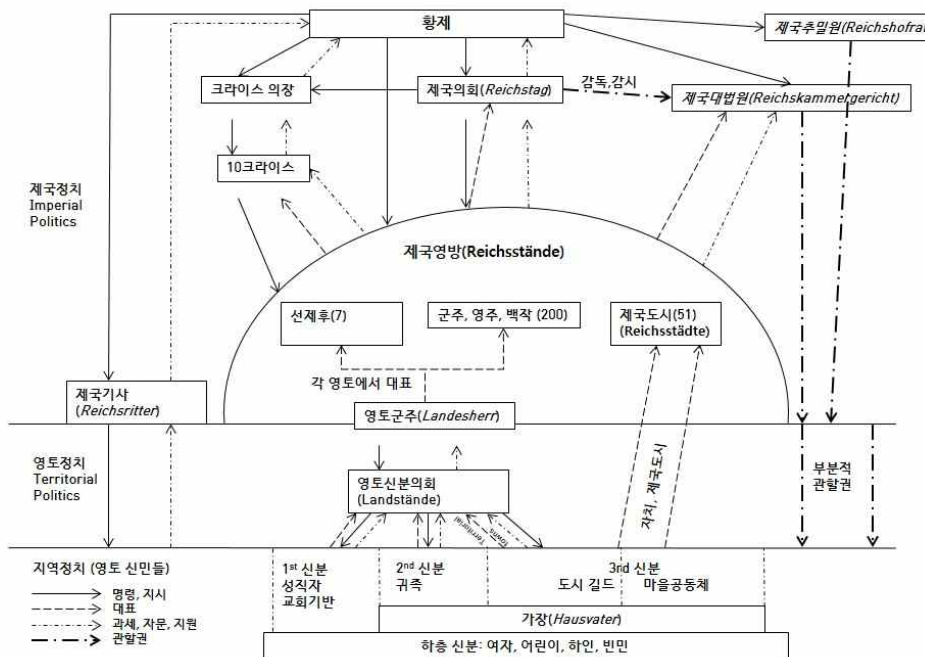
전통, 관례, 관습의 축적이 배경이 되는 성문화된 합의의 의도적 모호성은 제국이 해체되는 시기까지 지속되었다. 또한 제국정치문화는 구성원들의 합의, 타협, 법, 질서를 강조하면서 분쟁을 방지하고 조화를 추구하려 했다. 이를 위해 관습법적 구조 상 집단 간 이해 또는 법적 갈등요인을 명확하게, 완전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제시하거나 해결방향을 내놓지 않고 각자 다양한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모호한 상태로 놔두었다. 물론 상충된 해석들에서 나타난 제국 정치구조 내의 분열, 불화 가능성도 있었다.

따라서 제국개혁 결과, 제국영방이나 황제 한 쪽의 의지대로 제국 거버넌스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이러한 양자의 불확실한 균형 상태는 1648년에도 나타났고, 1806년 해체 직전까지도 지속되었다. 여러 위기들이 반복될 때 견제와 균형, 방어와 법, 평화체계로서 제국이 의사결정을 한다는 거버넌스의 원칙은 계속 확인되었다. 이는 뒤에서 살펴보듯이 1555년 아우크스부르크 화의는 종교문제를 1495년의 영구평화조례의 기본틀을 확장시킨다는 점에서 중요했다. 이에 따라 신교군주들과 카를 5세의 투쟁 역시 공적평화를 누가 위배하는가, 단순히 교파 간 갈등만이 아니라 정치질서의 유지와 타파의 측면에서 다루어졌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아래 그림과 같은 관습법적 구조 안에서 제국정치의 구성원들과 제국 제도들의 기본 관계는 해체 시기까지 남아있었다. 1803년 마지막 제국의회 결정을 통해 제국질서를 지탱해온 제국기사들, 성직영방들이 다수 사라지고 핵심토대가 약화되었다. 중대형 영토국가들만 남았지만 마지막까지도 일부 제국제도들의 기능은 존속했고, 제국정치와 영토정치 수준에서 광범위하게 남아있던 봉건적 위계관계는 장기간에 걸쳐 추상적, 공적 관계로 변화했다.

34) Stollberg-Rilinger, 2015, p. 27. 스톨베르그-링거는 “성문화된 텍스트의 재현과 의례적으로 격상된 왕실회의에서의 공적인 모습은 수행적 효과를 갖는다. 이를 통해, 그리고 이러한 방식으로만 제국의 위계질서가 객관적(objective)일 수 있었다.”고 한다.

<그림 II-1> 제국 관습법적 구조(imperial constitution)



* Wilson, 2010, xxix 참고 작성.

3. 카를 5세와 종교개혁의 충격: 아우크스부르크 회의 (1555) 를 통한 질서 회복

1) 카를 5세의 통치와 대외전쟁, 종교개혁

16세기 중반 이후 카를 5세(Charles V, 재위: 1519-1556)가 통치하는 합스부르크의 팽창과 종교개혁이 제국 관습법적 구조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³⁵⁾ 카를 5세 통치 시기는 보편제국의 이념과 물리력, 제도로써 뒷받침된 “라틴 기독교세계(Latin Christendom)의 몰락” 혹은 “중세제국 종언”의 시기로 평가되기도 한다.³⁶⁾ 종교개혁을 통한 관념

35) Whaley, 2012a, pp.155-324.

적 변화는 새로운 유럽 국제질서의 등장으로 이어졌는가?³⁷⁾ 종교개혁 전후 왕조-제국적(dynastic-imperial) 경로를 추구한 합성적 국가들인 스페인, 프랑스 등과 같이 합스부르크도 유사한 통치전략의 고민을 갖고 있었다.³⁸⁾ 합스부르크 출신 신성로마제국 황제의 대내외 정책으로 인해 제국은 동, 서 양면전쟁에 참여했고 종교개혁은 기존 정치, 종교적인 거버넌스 원칙과 합의들을 흔들었다. 152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황제와 제국영방들 사이의 정치적 갈등과 타협으로 다시 균형을 구축하려는 노력이 진행되었다.

카를 5세는 합스부르크가의 상속으로 부르군트, 이탈리아, 스페인 제국, 독일까지 광범위한 통치지역을 다스렸다. 황제는 로마법과 기독교세계의 보편제국(universal monarchy)의 건설을 지향했다.³⁹⁾ 이에 따라 교회의 통합성을 유지하려고 했고, 제국의 중심부인 이탈리아를 포함한 합스부르크 세습영지의 이익을 더 중시했다. 황제는 종교개혁 문제를 제국의 공적 질서에 대한 문제로 축소시키려고 했다. 제국의 신교 제후들이 황제의 일방적인 정치, 종교적인 권위확립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면서 가톨릭교회가 소유한 재산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했다. 카를 5세와 달리, 차기 로마 독일 왕으로 임명된 페르디난트(Ferdinand I, 재위: 1531-1564) 오스트리아 대공은 튀르크의 위협에 더욱 우선순위를 두고 있었다.⁴⁰⁾

36) Andrew Phillips, *War, religion and empire: the transformation of international orders*.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0), p. 97.

37) Daniel Philpott, "The religious roots of modern international relations." *World Politics* Vol. 52. no. 2 (2000), pp. 206-245.

38) Nexon, 2009, p. 179.

39) John M. Headley, "The Habsburg world empire and the revival of Ghibellinism," in David Armitage (ed.), *Theories of Empire, 1450-1800* (Aldershot and Brookfield, VT: Ashgate/Variorum, 1998), pp. 45-80; James Muldoon, *Empire and Order: The Concept of Empire, 800-1800* (Macmillan, 1999), pp. 114-138.

40) 카를은 막시밀리안 1세의 유언에 따라 동생인 페르디난트 대공과 함께 합스부르크 영지를 스페인(Casa Hispania)과 오스트리아 계열(Casa Austria)로 구분했다. 페르디난트 1세 때 중부유럽에서 광범위한 정치연합체와 통치체계를 마련하여 실질적인 합스부르크 군주정의 창시자로 평가된다. R. J. W. Evans, *The Making of the Habsburg Monarchy 1550-1700: An Interpretation* (Oxford, 1979), pp. 235-274; Paula Sutter Fichtner, *The Habsburg Empire: From Dynasticism to Multinationalism* (Florida, Malabar: Krieger, 1997), p. 7. 보헤미아, 헝가리-크로아티아 연합(union)의 등장을 출발점으로 한 합스부르크 제국사에 대해선 Robert A. Kann, *A History of the Habsburg Empire, 1526-1918* (L. A.: California Univ. Press, 1974), p. 27. 페르디난트 1세의 제국정책에 대해선 김동원, "페르디난트 1세와 제국의회"의 튀르크전

카를 5세는 1521년 보름스 칙령으로 루터에게 제국추방령을 내리고, 신교확산을 저지하려고 했으나 실패했다. 교회분열에 대해 1530년대까지는 공의회 소집 등을 통한 법적대응을 취했다. 신교진영은 명확한 저항권이 없는 상황에서 점차 합스부르크 왕조의 권력과 권위에 직접 도전하기 시작했다. 그렇지만 제국의 일반적 평화와 법질서를 유지하는 선에서 신교제후들은 ‘독일의 자유(German Liberty)’와 ‘명성’을 강조하면서 슈말칼덴 동맹(Schmalkaldic League, 1531)을 형성했다. 동맹은 황제와 제국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방어’를 목표로 했음을 강조했다.⁴¹⁾

그리고 황제의 제권이 가장 정점에 있고, 신교진영이 군비지출문제와 분열로 와해된 상황에서 슈말칼덴 전쟁(1546-47)이 발발했다. 황제는 “공적평화의 보존”을 위해 반란자들을 처벌하는 정치논리로 대응했고, 신교제국영방들은 군주들의 권리와 종교적 자유를 옹호했다. 황제가 잠정협정(1548)으로 제국의 종교평화를 회복하려고 했지만 수용되지 않았고, 카를 5세와 페르디난트 1세 사이에 계승문제가 야기된 상황에서 군주들의 불만은 프랑스 왕 앙리 2세의 지원을 받은 반란으로 이어졌다. 결국 파사우 조약(1552)에서 카를 5세의 보편제국 열망은 좌절되었고, 제국회의의 주도권과 종교문제의 해결이 페르디난트 1세에게 위임되었다. 동시에 제국영방들이 정치, 종교적 평화유지를 위한 문제해결의 주체가 되었다.

페르디난트 1세는 튀르크 대응을 위해 독일 제후들의 지원이 필요했고, 상당한 유연성을 보이며 제국의 안정화를 추구했기 때문에 이후 종교평화의 설계자로 부상했다. 황제는 제국적 보편주의가 한계가 있고, 제국을 세습 군주정화 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점을 깨달았다. 그러나 합스부르크 세습영지에선 가톨릭 정체성을 고착화하고, 지역통합을 추구하면서 정책에

쟁지원.” 『역사와 세계』 Vol. 37 (2010), pp. 259-293.

41) “This, our Christian League, is not intended to be against His Imperial Majesty, our most gracious lord, or anyone else, but only to sustain Christian truth and peace in the Holy Empire and the German Nation. It is meant, therefore, solely as a defense and protection for us, our subjects, and our relations against unjust coercion. Otherwise, each of us is willing to seek and accept the law's judgment.” “A. The First Agreement on the Founding of the Smalkaldic League, February 27, 1531”, p. 2. http://germanhistorydocs.ghi-dc.org/sub_document.cfm?document_id=4389 (검색일: 2016년 4월 4일).

서 지역적 차이가 있었다. 아우크스부르크 화의는 안정적, 영구적인 토대가 아니었고 제국의 각 영토 내에서 조항들을 적용할 때, 갈등과 타협의 양상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2) 아우크스부르크 화의(1555)를 통한 제국 정치, 종교질서 조정

제국도시 아우크스부르크에서 열린 제국의회에서 결정된 “아우크스부르크 제국종교평화(Augsburger Reichs- und Religionsfrieden)”는 신성 로마제국의 제국법에 포함된다. 아우크스부르크 화의에 대해선 “유럽” 안에서 제국질서를 약화시키고, 영토군주들의 주권과 영향력을 강화한 토대로 평가되어왔다.⁴²⁾ 한편으로는 아우크스부르크 화의를 “실패”로 규정하고, 30년 전쟁 발발의 인과적 연결고리를 강조하면서 지속된 교파 간 갈등을 강조해왔었다. 최근 역사학자들은 이와 같은 단순한 해석을 비판하고, 화의의 성패를 다시 조명하고 있다.⁴³⁾ 베스트팔렌 조약과 마찬가지로 아우크스부르크 화의도 “제국”의 관습법적 구조를 어떻게 수정했는지에 대해 초점을 두고 그 중요성과 의미를 평가해야 한다.

아우크스부르크 화의의 조항들은 1495년 영구평화조례와 이를 유지하기 위한 제국 및 지역수준의 여러 제도들의 역할과 직접적으로 연관된다. 기본적으로 제국개혁 내용 안에 종교문제의 해결을 포함시키면서 영구평화 원칙을 토대로 제국질서를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명확하게 제국의 “영구평화”를 다루고(9, 11, 12조), 이를 종교문제에 확대했다(13-14조). 조항들은 “일반적, 영구적인 평화(general, perpetual peace)”의 보존을 촉구하고, 쟁의, 전쟁, 구금, 도적질, 정복 등을 금지하고 법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내용이다.⁴⁴⁾ 화의는 이전부터 만들어져 온 탈-중심적 제국질서와

42) Krasner, 1999, p. 20.

43) Whaley, 2012a, pp.325-336, 339-371; Matthias Pohlig, “The Peace of 1555 - a failed settlement?” in Asbach and Schröder, 2014, pp. 193-204.

44) “The Religious Peace of Augsburg (September 25, 1555),” p. 1. Source of English translation: Emil Reich, trans., *Select Documents Illustrating Mediaeval and Modern History*. London: P. S. King & Son, 1905, pp. 226-32. revised and with additional articles by Thomas A. Brady Jr. http://germanhistorydocs.ghi-dc.org/sub_document.cfm?document_id=4386 (검색일: 2015년 9월 15일)

정치전통이 있어 황제와 제후들 사이에 정치적 타협이 가능할 수 있었다. 즉, 거버넌스가 제도화되는 중에 구성원들 간 세력균형과 교파적 균형을 하나의 축으로 포함시켰다.

화익의 핵심은 종교문제에 대한 결정을 각 영토군주에게 맡긴다는 것이며, 제국에서 루터파를 제 2의 정당한 신앙으로 수용했다는 것이다(15조). 각 영토군주들은 개신교 또는 루터파를 받아들이면서 교회문제의 정치적 관할, 즉 정치력의 지표를 영토군주들에게 넘겨주는 것을 승인했다. 논란이 되는 ‘개종권(ius reformandi)’은 실제 조약에서는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⁴⁵⁾ ‘통치자가 지역의 종교를 결정한다(cuius regio eius religio)’는 원칙은 1586년 이후 신학자, 법률가들 사이의 논쟁에서 등장했다. 군주들은 종교적 통합성을 정치적 안정성의 조건으로 보았기 때문에, 지역성직자들과 협력하여 영토 내에서 신앙을 강제하는 것을 시도하기는 했다. 하지만 조항의 목표는 영토군주들이 신민들의 신앙을 일방적으로 바꿀 수 있는 “자유”만 준 것이 아니라, 영토 내 종교평화의 수호자로서 선제 후, 군주, 영방들에게 “의무”를 부여한 양면성이 있었다.

아우크스부르크 화익은 1550년대 제국에서 신교파가 우위이고 가톨릭 영토에서 루터파가 소수인 교파적 상황만을 반영했다. 그래서 가톨릭은 군주들이 이단자를 축출할 수 있는 배타적 특권을 주장해왔고, 루터파는 이주나 숭배의 자유를 제시했다. 그러나 이후엔 교파 균형에 변화를 가져오는 가톨릭의 재부활과 배제되었던 칼뱅파의 도전이라는 불안정 요인이 나타났다. 1570년대 이후 가톨릭 부활 정책의 일환으로 가톨릭 군주들은 영토 내 루터파 확산을 막기 위해, 종교적 순응을 정치적 충성 지표로 강제했다.⁴⁶⁾ 그리고 정치적, 종교적 소수인 칼뱅파는 대외적인 신교 네트워크에

45) 화익의 협상 중에 설파된 “ubi unus dominus ibi una sit religio[Where there is one lord, there should be one religion]”라는 원칙은 교파의 현상유지 보존을 위한 목적으로 제시되었고, 이후 개종권으로 인식되었다. Thomas A. Brady, Euan Cameron, and Henry Cohn. "The Politics of Religion: The Peace of Augsburg 1555." *German History* Vol. 24 (2006), p. 86.

46) 제국 내 신교의 확산으로 루돌프 2세 시기부터 이너 오스트리아(Inner Austria) 지역에는 재가톨릭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충성스런 가톨릭 군주들에게 귀족화 등의 특혜를 부여하고, 신교파를 고립시켰다. Peter H. Wilson, *Europe's Tragedy: A New History of the Thirty Years War* (Penguin UK, 2009), p. 45, pp. 64-75.

기대며 제국 내 지위확보를 위한 다른 대안을 모색하려 했다.

‘교회 유보권(reservatum ecclesiasticum)’(18조)에 의해선 가톨릭 군주가 신교로 개종 시 성직과 교회재산을 가톨릭의 관할에 남겨두어야 했다. 이는 제국제도 안에서 정치적 다수인 가톨릭에게 유리한 조항이었다. 한편 ‘페르디난트의 선언(Declaratio Ferdinanda)’은 신교측에 대한 양보로서 성직군주들의 개종권을 상당히 제한했다.⁴⁷⁾ 그리고 영방들이 다른 신민들에게 종교를 강요할 수 없다는 조항과(23조), 24조의 ‘이주의 권리(ius emigrandi)’는 신, 구교를 믿는 신민들이 선제후, 군주, 영방들의 종교와 다를 경우 이주가 가능하다는 것으로 군주의 개종권을 제한했다.⁴⁸⁾ 아우크스부르크 화의는 제국기사들에게 적용되었으나(26조), 제국도시는 배제되었다(27조).⁴⁹⁾

화의 해석에 대해 마찰이 생긴 이유는 문제가 제국의 구성원들 간 대내 관할권과 정치적 영향력을 조정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성직제후와 제국교회(Reichskirche, Imperial Church)의 직속교회 재산과 관련되어 있었다.⁵⁰⁾ 신, 구교 제후들은 영토야심에 따라 교회재산확보를 위해 교회유보권을 두고 논쟁을 벌였다. 제국영방인 성직자들이 신교로 개종하면서 선제후, 제후들도 신교로 개종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는 제국제도 안에서 가톨릭 다수파인 상황을 위협했다. 그리고 루터파 제후의 통

47) 루터파에 속한 성직영토 내 제국기사와 영토도시들은 지위를 보존할 수 있고, 성직 주권자의 교파를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페르디난트의 선포 내용은 “The Declaratio Ferdinanda, 24 September 1555,” in Peter H. Wilson, *The Thirty Years War: A Sourcebook* (Palgrave Macmillan, 2010), p. 9. 이는 제국결정(imperial recess) 또는 제국대법원의 결정에 포함되지 못했다. 구교세력들은 선언의 법적효력을 거부했고, 내용은 제국의회의의 협의체들(colleges)과 마인츠 대제상에 공포된 종교평화 문서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48) Franz Brendle and Anton Schindling, “Religious War and Religious Peace in the Age of Reformation,” in Evans, Schaich and Wilson, 2011, p. 175.

49) 제국도시의 참사회(town council)에서는 그들의 권한을 강화하여 시민들에게 하나의 교파를 부과하는 것을 선호하기도 했다. 도시조항에 대해선 황대현. “특집: 서양사 속의 평화; 아우크스부르크 평화축제(Augsburger Friedensfest)로의 길-아우크스부르크 시의 30년 전쟁 극복과정과 동등권(Parität) 체제의 수립.” 『서양사론』, Vol. 108, (2011), pp. 45-74.

50) 신교들은 성직군주들이 개종권을 통해 세속군주들과 수가 동등해질 것을 고려했다. 개종을 통해 성직군주직도 함께 폐기하여, 신성로마제국 내 제국교회구조를 약화시키려는 것이었다. 하지만 페르디난트와 성직영방들은 제국교회를 보존하고자 했다. Brendle and Schindling, 2011, pp. 176-177.

치 지역 내 가톨릭이 소유한 교회재산에 대한 것이었다. 19조(1552년 파사우 협약 체결 시점까지 신교제후들이 점유한 교구, 수도원, 교회 재산들을 적법한 것으로 인정)에 대해 1552년 이전까지 군주가 교회재산으로 포함시키지 않은 경우, 이 재산들이 직속 또는 제국영방의 지위를 갖는지 여부에 따라 논쟁을 벌였다.

이러한 점들은 화의의 한계점 또는 모순으로 평가되었지만 협상을 통해 나온 문서내용은 의도적으로 모호한 부분이 있었다. 조항을 통한 권리나 규제가 엄밀하고, 명확할 경우 오히려 특정세력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해석되기 때문에 이러한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점차 조항들이 논쟁의 대상이 되었지만 그것이 정치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때는 관련 행위자들과 사안에 따라, 전례들을 참조하여 실제적으로 해결되었다.

16세기 후반부에도 교파균형의 변화와 갈등심화가 변수였지만 제국과 영토 안에서 평화를 유지하고, 두 교파세력들 간 평화적 화해를 촉진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또한 종교문제에 대해 성공적인 합의와 타협을 만드는 제국정치문화를 보존했다. 황제 페르디난트 1세와 막시밀리안 2세는 아우크스부르크 화의에서 확인된 대내 평화를 지속적으로 보존시키기 위해 노력했다.⁵¹⁾

4. 소결

신성로마제국은 단일한 행위자가 아니며, 황제와 선제후들과 성직, 세속군주들, 제국도시, 기사 등을 포함한 다양한 구성원들이 위계적인 서열 관계를 기반으로 유기적으로 제국을 구성하고 있었다. 제국 개혁 시기 조정된 제국제도들과 관습법적 구조는 상호보완적으로 신성로마제국의 법, 평화 체계를 강화했다. 또한 구성원들의 권력정치를 조정하고, 약소세력들을 보호하며 이들이 황제에 충성하고 공적평화를 유지시키는 제국질서에 의존하게 만들었다. 이에 따라 여러 대내외 갈등과 충격에도 불구하고, 공존과 타협을 추구하는 정치문화를 형성했고, 상징, 의례 등 비가시적인 측면도 거

51) Howard Louthan, *The quest for compromise: peacemakers in counter-Reformation Vienna*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6).

버너스 유지에 중요했다. 제국은 경직된 제도와 대내질서를 계속 고수하지 않고, 유연한 관습법적 구조를 유지하여 황제와 제국영방 어느 한 쪽으로 균형이 치우치지 않았다.

16세기에 들어 제국은 카를 5세 합스부르크 군주정 팽창과 종교개혁으로 인한 정치적 충격을 견뎠다. 제국 구성원들 사이의 갈등은 외부위협에 대한 대응문제로 더 복잡해졌고, 황제의 공적질서 회복 목표와 제권강화에 대한 견제를 하고자 신교군주들은 ‘독일의 자유’를 주창했다.

1555년 아우크스부르크 화의는 제국 차원에서 이전의 관습법적 구조를 회복하고, 제국 내 종교문제를 법적, 정치적으로 다룬 합의였다. 즉, 제국의 위계적인 모습을 전적으로 바꾸지 않았고, 제권과 영토권한의 균형을 맞춰 안정과 질서를 회복하려는 시도였다. 베스트팔렌 조약과 마찬가지로 조항들은 유럽 전반의 정치 또는 종교질서를 바꾼 것이 아니라, 제국 내부 사안들과 구성원들의 권리, 권한 및 관계를 조정하는 데 목표가 있었다. 16세기 말부터 아우크스부르크 화의의 해석을 둘러싼 구성원들의 갈등은 제국 내에 다시 긴장을 낳았지만, 축적된 제국의 관례, 법, 제도들은 정치적 협상과 질서회복의 토대였다.

III. 제국 내 세력균형의 위기 1: 30년 전쟁 (1618-1648)과 베스트팔렌 신화

1. 제국의 종교, 정치적 내전으로서 30년 전쟁

국제정치학계에선 30년 전쟁을 종결한 베스트팔렌 조약을 통해 단위와 질서에 대한 특정한 관념과 모델을 도출해냈고, 이는 30년 전쟁에 대한 전통적인 서사(narrative)와 역사기술(historiography)을 토대로 한다. 오시엔더, 넥슨, 테쉬케 등 신화 비판자들도 30년 전쟁에 대한 기존의 이해를 수정하고자 했다. 전쟁은 종교개혁의 여파로 합스부르크 군주정에 나타난 구조적 위기의 결과이자, 유럽 기독교세계에서 제국질서의 “종언”과 주권, 영토국가의 “탄생”을 낳은 전쟁이었나?

본 장은 30년 전쟁을 신성로마제국의 관습법적 구조의 위기에서 나온 갈등으로 보고, 그 서사를 다시 살펴보고자 한다. 30년 전쟁 전체를 유럽적 갈등의 일부로만 보는 국제전적 시각과 달리, “독일전쟁(German war)”으로서 제국 구성원들의 갈등구조에서 비롯된 내전적 측면에 주목하고자 한다. 베스트팔렌 신화와 연관된 전쟁의 성격을 평가하고, 이와 관련된 조약의 내용이 제국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살펴본다.

합스부르크 세습영지에서 비롯된 위기는 제국 거버넌스를 마비시키고, 내전으로 확산되었고, 구성원들은 제국 내외 다층적인 갈등관계에 놓이게 되었다. 제국 내 균형변화와 이해관계가 걸린 주변세력들의 개입에 따라 중부유럽에서 각 지역전략이 충돌하는 신성로마제국이 전쟁의 장이 되었다. 본질적으로 구성원들의 교파, 관할권, 권리, 영토, 가문 이익, 지위, 위신, 명예 등의 세부적인 균형에 대한 문제였다. 구성원들은 제국 틀이 존속하는 것에서 확보할 수 있는 이득을 취했고, 제국을 해체하거나 급격히 수정하려 하지 않았다. 평화협상에서 구성원들이 해결하려 한 문제의 핵심과 조항들도 이러한 맥락에서 해석되어야 한다.

1) 위기의 원인: 황제 리더십 약화와 제국영방들 간 갈등

30년 전쟁의 원인에 대해선 많은 견해가 있으나, 핵심적으로는 신성 로마제국의 구성원들 간 제국의 종교, 정치적 관습법적 구조에 대한 관점과 이해관계의 불일치에서 기인한다.⁵²⁾ 아우크스부르크 화의에서 타협한 관습법적 구조는 불완전하면서도 황제와 제국영방들의 결속을 축으로 교파갈등을 막는 유연한 특징이 있었다. 그러나 신, 구교 제후들 양쪽의 과도한 급진화와 황제의 리더십 약화는 위기를 가져왔다.

17세기 초까지 제국에 대해선 황제와 제국영방들이 제국의 핵심 기둥이며, 교파갈등을 초월한 공생관계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이 황제와 양 교파의 제후들에게 공유되고 있었다. 제후들 사이엔 제국 애국주의(Reichpatriotismus, imperial patriotism)가 나타났고, “제국의 몸체(corpus imperii)”에서 황제는 “수장(head)”으로서 “수족들(limbs)”인 선제후들과 제국영방들을 지탱한다는 인식을 유지했다.⁵³⁾ 구교제후들은 로마제국 계승자와 기독교세계의 수호자로서 황제의 지위를 인정한 제국관을 더 옹호했으나, 제국 내 합스부르크의 권력 남용에 대해선 비판적이었다.⁵⁴⁾

52) 30년 전쟁 원인론에 대한 연구사적 논의는 Peter H. Wilson, “Review Article: New Perspectives on the Thirty Years War,” *German History* 23, April 2005, pp. 237-61; 넥슨은 전쟁을 합성국가의 내부위기와 신구교간 갈등에서 전쟁이 촉발되었다고 본다. Nexon, 2009, pp. 265-88. 김준석은 제국 관습법적 구조(constitution)를 두고 황제와 제후들 사이의 힘의 균형배분의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벌어졌고, 이것이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주변국들이 개입했음을 지적한다. 김준석, 2012, p. 122. 최근 역사학계에서도 “신성로마제국의 관습법적 구조에 대한 갈등- 중부유럽의 정치, 종교동학의 균형 문제”이며, 유럽 국제정치가 연관되어 있지만 제국의 문제를 더 강조한다. Olaf Asbach and Peter Schröder (eds.), *The Ashgate Research Companion to the Thirty Years' War* (Surrey: Ashgate Publishing Company, 2014); Peter H. Wilson, *Europe's Tragedy: A New History of the Thirty Years War* (Penguin UK, 2009), p. 1; Peter H. Wilson, “The Thirty Years War as the Empire's Constitutional Crisis” in Evans, Schaich and Wilson, 2011, pp. 95-114. 크록스턴도 신성로마제국에서 거버넌스의 핵심은 종교이며, “국가에 대한 상충된 시각과 종교적 차이”를 원인으로 본다. Derek Croxton, *Westphalia: The Last Christian Peace Palgrave* (Macmillan, 2013), p. 36.

53) Dominic Phelps, “The Triumph of Unity over Dualism: Saxony and the Imperial Elections 1559-1619” in Evans, Schaich, and Wilson, 2011, pp. 190-191. 제국 애국주의의 등장에 대해선 Whaley, 2012a, pp. 462-476.

54) Peter H. Wilson, “Meaningless Conflict? The Character of the Thirty Years War,” in Frederick C. Schneid (eds.), *The Projection and Limitations of*

신교제후들도 아우크스부르크 화의와 제국의 관습법적 구조, 법, 규칙을 준수하고, 황제의 주권(majesty)을 인정하되, 동시에 신앙과 가문의 안보도 추구했다.⁵⁵⁾ 대표적으로 루터파 작센 선제후는 제국의 위계질서에서 선제후들의 우위와 역할을 강조했고, 교파 및 정치적 이익을 위해 집단 간 갈등 중재에 적극적이었다.⁵⁶⁾ 나아가 황제의 제국 내 주권행사와 리더십도 강조했다. 가톨릭이 우위인 상황에서 제국의 안정화를 위해선 신교출신 보다 합스부르크 출신인 황제가 적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⁵⁷⁾

그러나 1580년대 이후 세대교체가 된 제후, 신학자들은 아우크스부르크 화의를 저평가하고, 교파, 정치적으로 경직된 해석에 따른 정책을 추진했다. 실용적 태도를 가졌던 신, 구교 제국영방들의 연대약화로 여러 소규모 분쟁들에서 교파적 양극화가 심화되었다. 분쟁을 조정하는 제국대법원 등에서 다수파를 차지한 구교영방들이 종교문제 결정에서 다수결 원칙을 옹호함에 따라 신교영방들은 동등권 원칙으로 대항했다. 이러한 과정은 제국정치의 마비로 이어졌다.

위기가 무력충돌로 이어지게 된 이유는 대내문제들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황제의 리더십 요인에서도 찾을 수 있다. 황제는 신성로마제국의 최고 수장, 합스부르크 세습영지의 영토군주, 오스트리아 왕가의 구성원으로서 세 가지 역할을 수행해야 했다.⁵⁸⁾ 황제로선 제국 내 평화유지, 갈등해결의 권위를 보유하고, 구성원들과 합의 지향적 정치를 펼쳐야 했다. 동시에 가톨릭 군주이자 기독교세계의 수호자로선 아우크스부르크 화의 이후 신교에게 양도된 가톨릭 재산의 복원을 추진하면서도, 제국 내 평화를 위해 이전의 제국의 법, 제도를 유지해야 했다. 또한 영토군주로서 합스부르크의 방대한 세습영지에서 나오는 자원은 제권유지에 필수적이었다. 그런데 보헤미아를 포함한 세습영지의 신교확산은 완전한 세습군주정이 아닌 제국 내에서 황제의 영토군주로서의 입지를 흔들리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

Imperial Powers, 1618-1850 (Leiden: Brill, 2012), p. 23.

55) Phelps, 2011, p. 200.

56) Phelps, 2011, p. 185.

57) Phelps, 2011, pp. 192-193.

58) Christoph Kampmann, "Emperor," in Olaf Asbach and Peter Schröder (eds.), *The Ashgate Research Companion to the Thirty Years' War* (Surrey: Ashgate Publishing Company, 2014), pp. 40-41.

다.⁵⁹⁾ 이에 따라 황제는 권력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세습영지에서 반종교개혁 조치들을 추진했다.

특히 루돌프 2세(Rudolf II, 제위: 1576-1612) 치하에서 황제와 제후들 사이의 긴장은 오스트리아 영지와 제국 통치에서 간극을 낳았다. 루돌프 2세는 합스부르크 왕조와 제국문제의 해결을 위해 신민들의 가톨릭의 순응을 강제하며 정치적 권위를 회복하려 했다. 튀르크 전쟁(1593-1606) 동안에는 오토만 제국과의 성전을 헝가리의 재가톨릭화와 연관시켰다. 하지만 막대한 전비 부채는 오스트리아 세습영지 분할을 촉진시켰고, 이는 중앙정부와 지방귀족들 간 협상에 영향을 주었다. 황제 리더십의 위기는 합스부르크 지역에서 오히려 종교개혁을 확산시킨 계기가 되었다.⁶⁰⁾ 루돌프 2세와 마티아스(Matthias, 제위: 1612-1619) 사이의 형제분쟁(fraternal-quarrel)도 제국영방들을 강화시켰다. 루돌프 2세는 정치적 양보로 ‘황제의 칙서(Letter of Majesty)’를 반포하고 보헤미아, 슬레지엔을 비롯한 가톨릭 지역에서의 신교예배를 보장했다.

교파분쟁에서 제국의 법과 제도를 적절히 작동시켜야 할 황제와 제국영방들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1606년 이후 제국영방들 안에서 호전적 신, 구교 세력들이 증가하며 갈등이 심화되었다. 도나워비르트 분쟁(1605-7)과 클레브-울리히 위기(1609-10)에서 황제의 개입은 대다수 신교영방들이 황제 편에서 이탈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1608년 레겐스부르크 의회에서 1552년 이래 세속화된 모든 교회령의 회복이 천명되자 1608년 대다수의 루터파와 칼뱅파 영주들은 ‘신교 동맹(Evangelical Union)’을 맺었고, 이에 1609년 ‘가톨릭 동맹(Catholic League)’이 결성되었다. 이들은 자신들의 처우에 대한 불만을 호소하고 세력화하면서 제국의 “공적평화”의

59) 선제후는 가톨릭이 3명, 신교가 3명인 상황에서 7번째 선제후가 보헤미아 왕이었는데 보헤미아 왕은 선출직이었다. 보헤미아 왕이 신교가 되면 왕위와 함께 황제선출권도 합스부르크 가문에서 빼앗아 선제후단에서 신교가 4:3으로 앞설 것이었다.

60) 루돌프 2세의 종교정책이 보헤미아 내 비가톨릭세력에 대한 탄압을 더 강화해 완전히 제국을 무력화시켰다고 평가하는 쪽은 김장수, “합스부르크가문의 대보헤미아 정책과 보헤미아 귀족들의 대응책,” 『서양사학연구』 Vol. 28, 2013, pp. 1-39. 전임 두 황제의 경로를 이탈하지 않고, 1599-1600년 사이에 효과적으로 통치했다는 시각도 있다 Joachim Whaley, “The Holy Roman Empire of the German Nation: Imperial politics 1555-1618,” in Asbach and Schröder, 2014, p. 23.

수호에 기여한다는 정당성을 외쳤다.⁶¹⁾ 온건파들이 기존 제국제도를 통한 해결방식을 지지했기 때문에 이런 분쟁들은 즉각 전쟁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다수의 제국영방들은 평화유지를 위해 교파 간 협력을 유지하고, 급진파들을 저지하려고 했다.⁶²⁾

2) 보헤미아 반란과 제국 내전으로의 확산

하지만 오스트리아 세습영지인 보헤미아에서 발생한 종교적 위기는 왕위 선출과 관련해 제국 내 세력균형을 흔들면서 내전으로 확산되었다. 반란자들과 진압에 관여한 행위자들은 제국의 공적평화를 깨지 않으려 했고, 대내외에서 지지 세력을 확보하여 정당성을 얻으려했다.

마티아스 황제는 제권을 안정화하고, 합스부르크 지위 유지를 위해 티롤, 오스트리아 대공 페르디난트를 보헤미아 왕으로 임명했다. 페르디난트 2세는 예수회파의 조언을 받으며 세습영지에서 재가톨릭화 정책을 추진했고, 스페인은 페르디난트를 비밀리에 지원했다.⁶³⁾ 비가톨릭 세력에 대한 탄압정책이 본격화되자 보헤미아 신교 귀족들은 페르디난트 2세가 ‘황제의 칙서’에 반대된 정책을 취해 그들의 정치적 권리를 침해했다고 불만을 표시했고, 이는 프라하 창문투척사건으로 이어졌다. 신교세력들은 합스부르크의 반격을 막기 위해 외국에 지원요청을 하고, 제국에 대한 불만족, 항의의 표출로서 1618년의 반란을 일으켰다. 보헤미아 귀족들은 ‘30인 집행위원회(directors)’를 구성하고 헌법제정 및 군대보유를 선언했다.⁶⁴⁾ 1619년 8월

61) 양쪽은 제국법과 질서유지, 종교적 평화를 강조했는데, 신교동맹은 공적평화와 통합의 구축을 수호의 대상으로 보고 모든 영방들의 상호원조를 강조했다. 가톨릭 동맹은 이들이 “말썽꾼(troublemaker)”이라고 비난했고, 사익보다 공공의 선(Publicum bonum)을 강조했다. “The Protestant Union, 1608,” “The Catholic League, 1609,” in Peter H. Wilson, *The Thirty Years War: A Sourcebook* (Palgrave Macmillan, 2010), pp. 12-20, pp. 16-20. 두 동맹을 주도한 바이에른 공작과 팔츠 선제후는 문제해결과 정에서 자신들의 위신, 이익확대를 도모했다.

62) Wilson, 2009, pp. 260-265.

63) 오냐테 조약은 페르디난트 대공이 알자스 지방과 황제직속인 하게나우(Hagenau)와 오르텐부르크(Ortenburg)를 포기할 경우, 그의 보헤미아 승계를 스페인 왕 펠리페 3세가 인정한다는 것이었다. 페르디난트는 보헤미아의 국왕이자 신성로마제국의 황제로서 스페인에 협조하겠다는 것도 명시했다. “Oñate treaty” in Wilson, 2010, pp. 30-31.

64) 이는 보헤미아, 모라비아, 실레시아, 북부 및 남부 루사티아를 하나의 연방으로 만들려

21일 보헤미아, 라우지츠, 슬레지엔, 모라비아는 페르디난트의 왕위선출이 무효이며 군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선언했고, 팔츠 선제후 프리드리히 5세를 왕으로 선출했다.⁶⁵⁾ 이들은 반-합스부르크 노선을 지지하는 베네치아, 네덜란드, 잉글랜드 등의 신교세력들의 지원을 기대했으나, 국제적 신교연대에는 한계가 있었다.⁶⁶⁾

페르디난트 2세는 정당한 황제 계승자로서 입지확보가 우선이었고, 보헤미아의 적법한 왕으로 선출됨에 따라 제국의 권위로 신교동맹과 ‘반란자’들을 처단할 수 있었다. 프리드리히 5세는 보헤미아 왕위를 ‘황제’에서 빼앗은 것이 아니라 보헤미아 왕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오스트리아 대공’에게서 되찾아온 것이라고 주장했었다. 또한 보헤미아가 제국 경계 밖의 독립국이라는 점에서 외국 군주에 맞서 대외전쟁을 벌인 것이지 제국의 평화를 해친 것이 아니라는 논리를 펼쳤다.⁶⁷⁾

반대로 황제는 전쟁을 “공적이고 적대적인 반항 또는 반란”, “범죄”로 규정했고, “반란자들이 그들의 목적에 따라 특권(regalia)을 착복하고 정부형태를 새롭게 구축하여 ‘황제의 칙서’에서 허용된 종교의 수호의 목표와 수단을 과도하게 넘어섰다.”고 주장했다.⁶⁸⁾ 자신은 반란자들로부터 권리,

는 계획이었다. 보헤미아의 국왕은 권위, 위상이 크게 제한되었는데, 왕은 귀족동맹에서 선출되고, 의회의 동의 없이 선전포고를 하거나 외국으로부터 차관도입도 불가능했다(31-33조). 이들은 “종교의 수호”이자 신교에 대한 관용, 동등한 보호를 목표로 밝혔다(1-2조). “The Bohemian Confederation, 31, July 1619,” in Wilson, 2010, pp. 41-46.

65) 프리드리히는 5세는 자신의 왕위 선출의 적법성과, “자유, 특권, 황제의 칙서, 신교의 자유로운 행사, 정당한 행위를 지지하고, 부당한 폭력에서 이들을 보존할 것”을 설파했다. 그리고 보헤미아 왕국, 선제후가 제국의 일원이며, 만약 원조를 받지 못할 경우 제국으로부터 떨어져 외국의 손에 들어가게 될 위험을 경고했다. “Open letter from Frederick V regarding his acceptance of the Bohemian Crown, 7 November 1619,” in Wilson, 2010, pp. 50-51.

66) Brennan Pursell, “The Palatinate and its networks in the Empire and in Europe,” in Asbach and Schröder, 2014, p. 44. 네덜란드는 마우리츠파가 정권장악 이후 합스부르크를 약화시키기 위해 제국 내의 분란을 조장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었고, 재정적으로 프리드리히를 지원했다.

67) 그러나 반란자들이 페르디난트를 축출하고 프리드리히의 왕권을 주장하기 위해 제국과의 연계를 부정했지만 동시에 독일의 지원을 요구할 수밖에 없었다. 다수의 독일세력들은 합스부르크를 지원했다. R. J. W. Evans, *Austria, Hungary and the Habsburgs. Essays on Central Europe, 1683-1867* (Oxford, 2006), p. 84.

68) “Edict of Ferdinand II Annuling the Bohemian Election (January 19, 1620),” in Tryntje Helfferich, *The Thirty Years War: A Documentary History* (Hackett

자유, 특권과 평화를 빼앗겼고, 제국과 왕국의 권위 및 법에 따라 이들의 주장을 불법적이고 무효한 것으로 하여 무력사용을 정당화했다.⁶⁹⁾ 가톨릭 동맹, 바이에른 공작, 작센 선제후 등의 대표단들이 모인 뮐하우젠 회의에서도 황제는 “정당하고 적절한 수단으로 제국, 왕국, 토지를 보존하고, 제국의 위신, 주권, 그의 봉토, 권리, 정의 및 선제후들의 위신의 보호”에 도움을 주기로 했다.⁷⁰⁾ 모든 제국영방들은 공적질서의 회복을 위해 황제를 지원할 의무가 있었다.

양 진영의 논리를 보면 보헤미아 반란과 진압 자체는 제국질서의 급격한 변경을 도모하지 않았다. 합스부르크 제대로 얻지 못한 보헤미아는 1620년 화이트마운틴 전투에서 참패했고, 보헤미아의 왕위는 합스부르크 왕실로 귀속되었다.

3) 합스부르크 세습영지의 변환과 제권 강화에 대한 우려

무력을 통한 반란진압에 성공하면서 합스부르크의 권위는 세습영지와 제국 내에서 높아졌다. 하지만 황제와 제국영방들의 갈등을 제도적으로 봉합하는 데 불만족이 있었다. 황제가 질서를 일방적으로 복원, 확립하려는 시도는 제국 내외 이해당사자들을 자극했고, 제권확대 노력으로 인식되었다.

황제는 제국추밀원을 통해 반란진압에 대한 군사행동을 정당화했고, 반란자들에 대한 재산몰수와 처벌을 재판 없이 진행했다. 보헤미아와 오스트리아에서의 정치적 지지자들에게 몰수한 영지를 배분하면서 황제의 봉건적 권한을 강화했고, 가톨릭주의 정책을 추진했다.⁷¹⁾ 토지, 재산들을 충성

Publishing, 2009), pp. 39-46, p. 40.

69) “Edict of Ferdinand II Annulling the Bohemian Election (January 19, 1620),” in Tryntje Helfferich, 2009, p. 44.

70) “The Muhlhausen Declaration, 20 March 1620,” in Wilson, 2010, pp. 58-59.

71) “Counter Reformation: The ‘Reformation Mandate for the Austrian Lands, 31 August 1628,” in Wilson, 2010, pp. 73-74. 개정방지법과 그 여파에 대해선 김장수, 2013, pp. 387-389. 비를리는 페르디난트 2세, 3세의 합스부르크 영지에서 재가톨릭화 정책을 ‘교파적 절대주의(confessional absolutism)’의 구축이라고 평가한다. 이는 합스부르크 영지의 통합성을 구축하는 시도로서 일정부분 행정, 법적 중앙집권화, 영방에 대한 군주의 우위, 가톨릭주의의 설파로 이어졌다. Robert Bireley, “Confessional Absolutism in the Habsburg Lands in the Seventeenth Century,” in Charles W. Ingrao (eds.) *State and society in early modern Austria* (Purdue University

파에게 판매, 양도하는 것으로 제국의 경제, 재정적 약점을 보완하려 한 것이다.⁷²⁾ 또한 기존 합스부르크 영지, 특히 보헤미아의 신교 귀족들은 가톨릭 귀족들로 대체되었고, 사회경제적 엘리트들이 전면 교체되면서 제국제도 안에서 합스부르크 후견체제가 강화되었다.

황제가 바이에른 공작 막시밀리안 1세에 보상, 타협해준 것도 문제였다. 프리드리히의 왕위 수용에 불만을 가졌던 막시밀리안은 페르디난트 2세와 동맹을 맺고 프리드리히의 선제후 직함을 대가로 약속했었다.⁷³⁾ 팔츠 선제후의 직위가 바이에른 공에게 넘어간 것은 선제후 단(college)에서 5명의 가톨릭 선제후들과 2명의 신교 선제후들 간의 대립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신교 측과 외국 제후들도 강력히 반발했다.

남은 신교세력들이 니더팔츠 지역으로 후퇴하고, 패배한 프리드리히가 다시 동맹군을 모아 라인지역으로 갈등이 확산되었다. 작센 선제후와 같은 온건 신교파들은 제국 관습법적 구조에 대한 온건한 해석을 지지하면서 급진적 칼뱅파의 해석은 반대했다.⁷⁴⁾ 이들은 일방적인 황제권력의 강화를 저지하되, 1555년 아우크스부르크 화의가 회복된 제국질서의 강화를 기대했다.

제국영방들은 1629년 페르디난트 2세의 토지반환령(Edict of Restitution)을 제국 관습법적 구조에 대한 수정주의적 행보로 인식했다.⁷⁵⁾ 황제가 제권강화를 추구하고, 신교군주들을 억압한다는 불안감을 낳았다. 가톨릭세력과 막시밀리안 1세도 이러한 종교정책과 황제권력 강화를 우려했다.⁷⁶⁾ 신교교의 협력 하에 황제가 제국영방들과 협상을 중시하는 제국의

Press, 1994), pp. 36-53. 에반스는 신교를 불충의 세력으로 보고 정치적 통합성보다 교파적 통합성을 우선시한 입장으로 본다. R. J. W. Evans, *The Making of the Habsburg Monarchy, 1550-1700. An Interpreta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79), p. 68.

72) Kampmann, 2014, p. 45.

73) "The Treaty of Munich, 8 October 1619," in Wilson, 2010, pp. 56-58. "Deed of enfeoffment from Emperor Ferdinand II 25, February 1623," in Wilson, 2010, pp. 91-92.

74) Wilson, 2011, pp. 109-110.

75) 토지반환령은 가톨릭의 군사적 승리를 배경으로 하여 1552년 파사우 협약 이후 신교 측에서 접수한 모든 교회재산과 제국 직속 교회령을 다시 가톨릭교회에 반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1629년까지 여러 세속화된 영지에 적용되는 것이었고, 황제는 칼뱅파에 대한 불인정도 재확인 했다. "The Edict of Restitution, 6 March, 1629," in Wilson, 2010, pp. 91-98.

76) Marc R. Forster, "The Edicts of Restitution (1629) and the Failure of Catholic

정치문화를 벗어나는 것으로 보였다.

실제로 황제는 제국의 통합성 추구하고 제후들과 협력을 통한 “공적평화의 회복”이라는 목표를 버리지 않았다. 아우크스부르크 화의의 논쟁점에 대해 황제의 일방적인 해석을 강제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제국의 법률주의와 제국제도들의 복원을 지향했다.⁷⁷⁾ 합스부르크 세습영지에서 주권을 강화하려고 했지만, 제국전체를 절대적 권위에 종속시키고, 선제후, 제후들을 억압하면서 강력한 군주정으로 변화시키려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토지반환령은 황제와 협력했던 신교세력들을 돌아서게 해 군사, 정치적인 손실을 낳았다.

4) 북독일 지역 세력의 개입과 제후들의 입장

제국의 봉건적 위계관계에 포함되어 있던 덴마크, 스웨덴은 제국 내 문제와 별개로 이미 자국의 안보, 경제적 이익에 따른 전쟁근거를 고심하고 있었다. 1625년 덴마크는 북독일 영토에 대한 이익과 네덜란드에서 상업적 영향력 보존 및 확대, 스웨덴에 대항한 발트해 우위 수호 등의 목표를 추구했다.⁷⁸⁾ 덴마크의 왕이자 홀슈타인 공작인 크리스티안 4세는 독일 군주의 자격으로서 “제국 관습법적 구조와 독일의 자유, 권리를 보존”하기 위해 참전했다고 밝혔다.⁷⁹⁾ 크리스티안 4세는 니더작센 크라이스의 군사령관(Kreisoberst)으로서 집단안보 차원으로 개입한 방어적 목표를 강조했다.

헤이그 동맹에 독일영방들의 참여도 요청했으나, 실제원조는 미비했다.⁸⁰⁾

Restoration,” in Asbach and Schröder, 2014. 에반스는 이 조치를 황제의 ‘주권적 제국적 의지(the sovereign Imperial Will)’를 드러내는 것으로 본 반면, 브래디, 윌슨은 황제의 의지보다 호전적 가톨릭세력들의 우위로 완전한 제국 내 가톨릭화를 추진한 결과라고 본다. 종교정책은 신교의 몰살이 아니라 교회재산만을 확보하려는 온건 가톨릭 수도권, 주교구들의 법률주의에 기반한 제국 내 질서를 유지하려는 입장과 상충되었다. R. J. W Evans, “The Habsburg victorious,” in Geoffrey Parker and Simon Adams, *The Thirty Years' War* (Psychology Press, 1997), pp. 85-86.

77) Wilson, 2009, pp. 70-71.

78) Paul. D. Lockhart, “Denmark,” in Asbach and Schröder, 2014, pp. 65-75.

79) 덴마크 왕은 제국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 킬리 하의 바바리안 군대와 제국군의 위협에 대항하는 것이라고 명시했고, 아우크스부르크 화의를 따라 제국을 이전상태로 돌려야 한다고 밝혔다. “Letter of King Christian IV of Denmark (February 21, 1626),” in Helfferich, 2009. pp. 77-81.

앞서 발렌슈타인을 통해 제국군을 조직한 황제는 1620년대 말 강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덴마크와 신교 진영을 압도했다. 덴마크는 제국 관습법적 구조의 대내균형을 맞추려던 노력과 실질적 이익을 얻는데 실패했고, 뉘른베르크 회의에서 남부 작센 주교구의 권리를 포기하고 배상과 영토양도 없이 물러났다.⁸¹⁾

주변국들의 합스부르크 군주정에 대한 적대적 프로파간다는 실제 위협인식에 비해 과장된 점이 있었다. 우선 토지반환령에 대한 논쟁으로 1630년 레겐스부르크 선제후회의에서 선제후들은 발렌슈타인 해임을 황제에게 요구했고, 정치적으로 황제의 입지가 약해진 상태였다. 스웨덴은 개입 전 제권을 격하하며 자신의 위치를 강조하고, 신교보호를 위한 개입을 정당화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합스부르크 왕조를 전제(tyranny)로 지칭했다.⁸²⁾ 스웨덴의 개입 동기는 안보 및 국익의 수호, 발트해에서의 상업적 제국건설, 국제적 인정, 신교의 자유의 보호 등이었는데, 핵심목표는 안보였다.⁸³⁾ 스웨덴의 위협인식은 대내외적으로 주권이 안정적으로 승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폴란드 지기스문드의 왕위계승 주장과 합스부르크의 간섭우려에서 나왔다. 명목상 제국의 일원으로서 제후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실질적 대내주권을 가진 왕으로서 정체성 유지와 ‘명성(reputation)’을 더 강조하려 했다.⁸⁴⁾

덴마크와 마찬가지로 스웨덴도 제국 관습법적 구조의 문제를 근거로 정당전의 근거를 밝혔다. 왜냐하면 주변국들의 스웨덴 팽창의도에 대한 의

80) “The Treaty of the Hague, 29, November 25 1625,” in Wilson, 2010, pp. 92-94.

81) 덴마크는 홀슈타인 공작의 지위를 보존하되, 제국정부의 제권을 방해하지 않고, 주교구 등의 권리를 포기했다. 이에 따라 제국도 덴마크 왕국에 내정간섭하지 않을 것이나, 홀슈타인 등에 대한 제국의 봉건적 관할권은 유지했다. “The Peace of Lubeck, 22 May 1629,” in Wilson, 2010, pp. 97-99.

82) Erik Ringmar, *Identity, interest and action: a cultural explanation of Sweden's intervention in the Thirty Years War*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8), pp. 167-169.

83) 스웨덴 왕은 “향후 제국의 위협으로부터 발트해를 보호해야 하며, ‘안보’가 목표이며, 슈트랄준드와 다른 얻을 수 있는 지역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했다. “Gustavus Adolphus to Chancellor Oxernstierna, 12 May 1630,” “Internal debates: council minutes, 4 May 1630,” in Wilson, 2010, pp. 130-131.

84) Ringmar, 2008, pp. 111-121

심을 거두고, 신교리더의 역할을 맡는데 제국세력들의 지지를 얻어야 했다.⁸⁵⁾ 다양한 청중들을 겨냥한 전쟁선언문에서 스웨덴은 독일의 신교제후들에겐 제국의 “공적질서에 대한 위반자들”에 대한 국지적 군사행동의 성격을 강조했다.⁸⁶⁾ 종교적 동기만 강조하지 않고, 선제후들의 영향력의 약화와 제국 관습법적 구조에 대한 위협을 명시했다.

하지만 제국 내 동맹세력들이 군사적으로도 황제에 맞서도록 설득하는 데는 더욱 조심스러웠다. 구스타프는 대외적으로 황제를 적으로 지명하지 않고, “정당한 권위 없이 황제의 명령에도 반하는 발렌슈타인에게 대항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제국에 대해선 중립을 취했다.⁸⁷⁾ 왜냐하면 제국영방들이 황제를 반대하거나 전복시킬 의사가 없었고, 온건파 신교제후들의 목표는 스웨덴과 어느 정도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 황제와 타협하려는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신교수호라는 종교적 측면의 협력 동기는 사실상 약했기 때문에 북독일 지역 세력들과 제국제후들은 복잡한 이익계산과 정교한 정당전의 논리가 더 중요했다. 신교수호에 대한 프로파간다와 달리 신교제후들은 스웨덴 개입에 대해 즉각 지지를 보이지 않았다. 황제와 구교 선제후들은 제국에 대한 부당한, 적대적 공격으로 보고 신교영방들을 대신하는 스웨덴을 인정하지 않았다. 북독일 지역의 제후들은 황제와 직접 싸우는 것을 원치 않았고, 스웨덴이 승승장구하자 두려움을 느꼈다. 프랑스도 스웨덴이 라인 지역까지 확장해오자 경쟁의식을 느꼈고, 스웨덴으로부터 위협을 느끼는 독일 군주들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이들과 별도의 조약을 맺어 스웨덴을 견제하기도 했다.⁸⁸⁾

스웨덴은 브란덴부르크와 작센을 대표로 한 독일 제후들과의 동맹, 그리고 그 지휘권과 보상을 목표로 했다. 브란덴부르크 선제후는 스웨덴 왕

85) Piirimäe, “Sweden”, in Asbach and Schröder, (2014), p. 78; Pärtel Piirimäe, “Just War in Theory and Practice: The Legitimation of Swedish Intervention in the Thirty Years War,” *The Historical Journal*, Vol. 45, No. 03 (2002), pp. 499-523.

86) “The official explanation: The Swedish Manifesto, 1630,” in Wilson, 2010, pp. 122-130.

87) Piirimäe, 2014, p. 79.

88) Whaley, 2012a, p. 602.

이 제 3의 중립을 인정하지 않아 동맹에 참여하거나, 그와 전쟁을 치러야 하는 딜레마 상황에서 반강제적으로 동맹을 맺었다.⁸⁹⁾ 1631년 6월 이후, 킬리군의 공격에 대한 대응으로서 동맹을 거절하던 작센 선제후도 스웨덴의 동맹 진영에 참여했다. 작센은 황제를 압박하여 토지반환령을 철회하고 협상하려는 의사도 있었고, “제국 관습법적 구조와 종교적 평화”가 수호목적임을 밝혔다.⁹⁰⁾ 두 선제후는 하지만 동맹조약에서 황제, 제국에 대해 직접적으로 반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아 스웨덴과 제국에 대한 입장 차이가 있었다.

스웨덴-작센 군대는 브라이텐펠트 전투에서 황제군을 격퇴하면서 군사적 균형을 전환시켰으나, 신교동맹이라는 공통의 정체성에 따른 협력은 곧 리더십 경쟁으로 변모했다. 독일 신교군주들은 스웨덴의 안보, 전략적 고려에 따라 ‘헤일브론 동맹’에 참여하기도 했다.⁹¹⁾ 그러나 점차 확장되는 스웨덴의 발트 해 남부 연안지역에 대한 영토야심과 ‘보상’ 요구확대는 독일 제후들의 이해와 상충되었다.

물론 제국 북부의 행위자들이 발트해의 정치, 영토적 확대를 추구하고, 처음부터 팽창주의적 목표가 있던 것은 아니었다. 구스타프의 초기 목표는 유럽의 균형을 위해 제국 관습법적 구조를 수정하고, 신교진영의 리더

89) “Sweden’s attitude to neutrality: Gustav to Elector Georg Wilhelm of Brandenburg, June 1631,” in Wilson, 2010, p. 136. 스웨덴 왕은 포메라니아 공작과의 동맹체결, 전비부담 및 군사적 통제권의 양보와 같은 과도한 요구를 제시하면서 동맹을 요구했다. 작센 선제후는 제국군도 자신을 버린 상태여서 선택의 기로에 직면했다고 보았다. “Elector Georg Wilhelm to Count Adam von Schwarzenberg 5 July 1631,” in Wilson, 2010, pp. 136-138.

90) 동맹문서에서 요한 게오르크는 “신성로마제국의 관습법적 구조와 종교적 세속적 평화에 대항하여 킬리 장군이 우리의 무고한 영토와 사람들을 공격했으므로 스웨덴 군주인 구스타프 아돌프가 우리의 군대를 돕는다.”고 했다. 구스타프 아돌프는 “억압되고 파괴된 왕조, 종교적 관계에 대해 기독교의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개입했고, “신의 도움에 따라 그의 영토에서 공동의 적을 몰아내는데 대항하기를 약속”하며, 선제후의 직위, 관할권, 특권, 요새, 영토를 훼손하지 않는다고 했다. “기독교적 동맹(Christian alliance)”이라는 표현은 선제후 쪽의 문서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Treaty between Sweden and Saxony, 11 September 1631,” in Wilson, 2010, p. 139.

91) 작센과 브란덴부르크는 참여를 거부했으나, 계속 스웨덴의 동맹으로 남아있었다. “Negotiations for a Protestant alliance: Gustavus’s instructions for his envoy to Saxony, 11 June 1632,”; “Gustavus Adolphus’s memorandum for Oxenstierna’s negotiation with the imperial Estates at the meeting to be held at Ulm, 24 October 1632,” in Wilson, 2010, pp. 178-179.

십을 맡는 것이었다.⁹²⁾ 개입 후 강압과 회유를 통해 제국 내 독일 제후들과의 동맹을 확대하고 보상체계를 만들어 스웨덴 중심의 봉건적 위계질서를 형성하려 하면서 제한적 목표를 점차 확대했다.⁹³⁾ 뤼벡 조약으로 전쟁에서 빠진 덴마크는 스웨덴의 북독일 주둔을 견제하면서 황제와 제국영방들을 중재하려고 했다. 제국 내 주권, 종교 문제가 황제 또는 제국영방들 한 편으로 확고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이었다.

5) 제국 구성원들의 내전 해결 노력과 그 한계 : 프라하 회의(1635)

1630년대 이후에도 제국 내 행위자들과 참전한 외국세력들은 제국의 관습법적 구조의 회복을 목표로 했다. 갈등은 가톨릭 황제파와 이에 억압받는 신교파의 대항이라는 단순한 대립구조가 아니었다. 제국 내 구성원들은 전투 중에도 질서를 회복하고 내전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지속했다.

루터파 작센 선제후와 칼뱅파 브란덴부르크 선제후는 서로 협력하면서 신, 구교를 중재하고 황제와도 우호적 관계를 유지해왔고, 레겐스부르크 회의(1630)에서 토지반환령 철회, 기준연도 합의로 종교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가톨릭 군주들과 타협을 통한 평화적 해결에 한계가 있었고, 1631년 마그데부르크 점령 이후 신교군주들은 입장을 돌리게 되었다.

라이프치히 총회(1631), 프라하 회의(Peace of Prague, 1635)에서도 종교문제에 대한 평화적 해결이 지속적으로 모색되었다.⁹⁴⁾ 외국군의 개입과

92) "The 'norms for future action', 1631. as dictated by Gustavus to his secretary in May 1631," Wilson, 2010, pp. 131-132. 초기 제국 내 스웨덴의 목적은 "새로운 신교의 리더(New Evangelical Leader)"이고, 두 번째의 목적은 "신교영방들 간의 새로운 연합(league)과 연합의 리더"였다. 목표를 위한 수단으로서 "전쟁과 후견적 지위의 확립, 요새의 점령, 보상의 확정, 선제후, 공국들을 통한 자유로운 진입, 동맹확립"을 추구했다.

93) 구스타프는 일련의 사전 이후 정복권을 내세워 점령지역을 스웨덴의 봉토로 만들고, 제국의 관할권이나 경계 등도 무시하면서 영토들을 배분하고 조정했다. 또한 군사동맹을 그가 직접 통제하는 "정치동맹(corpus politicorum)"으로 바꾸려는 구상과 제국 내에서 황제와 동등하다는 인식을 드러내기도 했다. 1631년 말 선제후직을 노리는 헤센-카셀에게 3개의 성직제후령을 세속군주들에게 배분하고, 베스트팔렌의 교회령을 보상으로 주는 대신 중립을 얻어내는 것 등을 약속했다. Wilson, 2009, p. 482. p. 506.

94) "Treaty between Sweden and Saxony, 11 September 1631," Wilson, 2010, p. 139; "The Leipzig convention, March 1631," in Wilson, 2010, p. 119; "The

이들의 영토점령 및 파괴 등은 역설적으로 제후들 간의 연대 및 제국 애국주의도 촉진했다. 라이프치히 총회는 신교제후들끼리 스웨덴과 황제, 가톨릭 동맹에 대응하기 위해 소집되었다. 브란덴부르크 선제후는 평화적 해결 방식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방어적 측면에서 신교군대의 창설을 제안했다. 총회는 크라이스를 토대로 황제와 스웨덴 왕으로부터 독립적인 제 3의 세력을 형성하기로 하면서 “기본법, 관습법적 구조, 독일 신교영방들의 자유를 지지”를 주장했다.⁹⁵⁾

1635년 프라하 화의는 황제 측이 유화적 제국정책을 취하고, 평화적 교파질서를 회복하려는 제국영방들의 입장을 수용하려는 노력이었다. 황제는 제국의 기본법을 유지하고 제국영방들과의 협력을 다시 도모하며, 군사적 우위를 통해 외국군을 물러나게 하는 것이 목표였다.⁹⁶⁾ 제국의 전전상태 회복을 도모하며 선출조항 및 영방제후들의 자유와 영토주권의 권리를 인정하도록 했고, 제국의 법 및 제도를 유지하려고 하여 제국영방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었다. 사면조항이나 종교문제의 해결 등에서 황제가 자신의 특권을 행사하고 활용한 것은 맞지만 제국질서를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었다.

프라하 화의를 통해 황제의 지위가 강화되었고, 종교문제에서의 갈등이 부분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다. 독일제후들 간, 독일제후와 외국 간 동맹을 불허하여 바이에른은 팔츠 직위, 영토를 보존하는 조건으로 가톨릭 동맹을 해체했고, 헤일브룬 동맹도 공식적으로 해체되었다. 작센, 브란덴부르크 선제후가 황제가 제시한 조항을 수용했기 때문에, 황제는 전쟁의 핵심인 제국 내 종교, 정치적 갈등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이제는 외국왕조들이 적으로서 제국의 평화를 해쳤다고 보았다.⁹⁷⁾ 그리고 작센의 제국군 참여

Peace of Prague, 30 May 1635,” in Wilson, 2010, p. 194.

95) 이들은 레겐스부르크에서 합의한 비용을 분산하여 4만 명의 군을 소집하려 했고, “군건한 평화와 상호협약”을 구축하며, “제국의 기본법(fundamenta)와 제국법이 독일의 자유를 억압하지 않고”, 제국의 우호적, 평화적 타협을 지향하는 제 3의 중립세력을 만들려 했다. “The Leipzig convention, March 1631,” in Wilson, 2010, p. 119.

96) Martin Espenhorst, “The Peace of Prague - a failed settlement?,” in Asbach and Schröder, 2014, p. 287.

97) 프라하 화의에서 토지반환령의 중단을 잠정적으로 확인하고, 1627년을 기준연도로 확인했다. 칼뱅파는 여전히 지위를 확보하지 못했고, 작센과 다른 서명군주들만이 황제에 대한 반란과 외국의 원조를 중단하기로 합의했다. “The Peace of Prague (June 12, 1635),” in Helfferich, 2009, p. 165.

등으로 스웨덴을 제국 밖으로 몰아낼 수 있다고 기대했다.

이 시기 전쟁에 대한 세속적, 국제전적 평가가 증대한 이유는 황제를 비롯한 제국 구성원들이 외국군에 대항한 제국의 투쟁이라는 측면이 부각되었기 때문이었다. 또한 제국 애국주의가 중요한 통합의 이념으로서 다시 떠오르며 전쟁에 대한 행위자들의 프레임이 변화했다.

6) 제국 문제의 국제화와 내전 종결 실패

프라하 화의를 통한 내전 종결은 몇 가지 이유로 한계가 있었다. 첫째, 황제는 화의를 스웨덴, 프랑스가 수용할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이는 오판이었다. 양자는 제국 내부분제 해결을 전쟁을 지속시키는 근거로 삼을 수 있었다. 프랑스의 리슐리외는 스웨덴 등 합스부르크에 대한 대항자를 간접적으로 지원해왔고, 황제와 제국을 ‘적’으로 삼아 전쟁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합스부르크 제국의 약화를 위해 협력했던 동맹세력들의 약화로 프랑스의 “독일의 평화에 대한 보장자”로서 역할이 대두되었다.⁹⁸⁾ 프랑스, 스웨덴은 내부분제 해결에 불만족한 독일 군주들의 이익, 권리보존을 근거로 계속 제국과 연계를 지속했다. 북독일에서 스웨덴은 물러나지 않고, 프라하 화의를 거부했다.

리슐리외는 1635년 3월 전쟁결정 후 스페인령 네덜란드를 공격하면서 프랑스-스페인 전쟁이 발발했다. 프랑스, 스페인은 지역질서의 패권을 지향하며, 중부유럽에서 독일제국의 균형을 조정하려는 더 큰 전략적 목표를 갖고 있었다. 올리바레스는 네덜란드 전쟁에서의 승리가 최우선이므로 압도적 군사력을 기반으로 영예로운 화의를 도모하려 했다.⁹⁹⁾ 스페인은 스페인-오스트리아 가톨릭 동맹 수호를 강조했고, 제국 내 분란을 일으키는

98) 리슐리외는 이제 “스웨덴과 독일의 동맹세력들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면, 오스트리아 세력이 프랑스에게 오게 될 것이며, 프랑스가 개입하지 않아도 오스트리아가 계속 적대적일 것이고 프랑스를 무모하고, 약하고, 두려워한다고 판단할 것”이라고 보았다. “다른 군주들의 도움없이 프랑스 안에서 (합스부르크와) 전쟁을 지속하느니 남은 세력들을 도와 전쟁하는 것이 불가피하며, 비용문제보다 당장의 위기의 대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Advice of Cardinal Richelieu of France (after September 6, 1634),” in Helfferich, 2009, pp. 151-152.

99) Wilson, 2009, p. 555.

행위자가 프랑스라고 비난했다.¹⁰⁰⁾

프랑스는 네덜란드, 스웨덴과 군사동맹을, 사부아, 파르마 및 합스부르크에 반대하는 독일 군주들과 동맹을 맺었다.¹⁰¹⁾ 제국 전쟁에서 바이에른은 프랑스에게 독일영방들과 황제를 갈라놓고, 독일 서남부를 중립화하며, 오스트리아가 스페인 지원을 못하도록 관습법적 구조를 수정하는데 적절한 동맹파트너였다. 막시밀리안은 선제후 직위를 공고히 하고, 황제가 제국의 법적권리들을 위배하는 데 대한 우려, 스웨덴의 북부, 남부 팔츠의 보유 등을 견제하려 프랑스와 동맹체결을 결정했다. 하지만 끝까지 황제와 제국을 버리는 데는 동의하지 않았다.¹⁰²⁾

프랑스 왕 루이 13세는 1635년 4월 스페인에 전쟁선포를 할 때 황제에 대해선 전쟁선포를 하지 않았고, 오스트리아의 스페인 지원만을 저지시키려 했다. 리슐리외는 제국 군주들의 “평등(equality)”과 평화의 수호자를 자칭하며 패권으로 성장하고자 했고, “스페인”의 저지를 위한 정당전임을 강조했다.¹⁰³⁾ 제국 내 스페인의 가톨릭주의의 설파와 합스부르크 가문 연대는 지배를 위한 변명이라고 보았다. 전쟁선언문에선 제국의 관습법적 구조의 유지를 언급하고, 공식 개전이유로 스페인의 트리어 대주교-선제후의 구금을 강조했다. 이것이 “제국의 위신과 국제법에 반하는” 행동이므로 이에 대한 무력사용의 정당한 근거가 있음 주장했다.¹⁰⁴⁾

100) Randall Lesaffer, "Defensive Warfare, Prevention and Hegemony. The Justifications for the Franco-Spanish War of 1635 (Part I)," *Journal of the History of International Law* Randall Lesaffer, "Defensive Warfare, Prevention and Hegemony. The Justifications for the Franco-Spanish War of 1635 (Part I)," *Journal of the History of International Law* Vol. 8 no. 1 (2006) pp. 91-123.

101) 프랑스는 브라이자흐에서 스트라스부르에 이르는 라인 강 좌안을 받는 대가로 스웨덴을 동등한 동맹으로 승인하고, 보름스, 마인츠, 벤펠트를 내주고 스웨덴을 배제한 강화를 거부했다.

102) 뫼텐블로 조약(1631.5)을 통해 프랑스-바이에른은 8년 상호방어 동맹조약을 체결했다. 동맹조약으로 선제후 직위에 대해 프랑스가 보호의 의무를 갖게 되었다. Wilson, 2009, p. 464.

103) Lesaffer는 프랑스의 스페인령 네덜란드에 대한 공격과 전쟁을 ‘패권적 방어(hegemonic defense)’ 전략이라고 본다. 공격적인 행위를 적의 부정의에 대한 정당한 대응으로서 보이게 하는 방어적 전략이나, 실제로는 장기적인 공세전략이었다. Lesaffer, 2006, p. 103.

104) "French declaration of war against Spain, 19 May 1635," in Wilson, 2010, p. 217. 프랑스, 스페인, 황제 서로 트리어 선제후의 정당한 보호자 역할과 관할권을 주장했다. 황제가 제 1의 보호자로서 선제후와 봉신관계를 맺었다.

황제가 헤센-카셀, 팔츠와 보헤미아 반란자들을 포함해 다른 제국 내 반-황제파들에 대한 광범위한 사면을 제시하지 못한 것도 스웨덴, 프랑스 쪽으로 돌아서게 한 요인이었다.¹⁰⁵⁾ 신교 동맹을 이끌던 작센-바이마르 공작 베른하르트는 프랑스와 동맹을 맺고, 그는 프랑스군 원수로서 전쟁을 지속했다. 베른하르트는 프랑스로부터 프랑켄공국 및 하게나우, 알자스 방백령을 얻기로 약속했다. 반황제파였던 브라운슈바이크-뤼네베르크 공국도 스웨덴군과 협력하여 황제군에 맞섰다.

헤센-카셀 방백은 헤센-다름슈타트와의 경쟁 속에서 스웨덴에 협력했었다가, 그의 사후 여방백은 제국과 협상을 모색했었다.¹⁰⁶⁾ 신민들의 전시 동원에 대한 불만에도 불구하고, 여방백은 제국과 협상에서 칼뱅파의 루터파와 동등한 제국 내 법적 지위의 보호를 요구하면서 자신의 원칙을 고수하려고 했다. 협상이 실패하고, 프랑스는 헤센-카셀과 동맹체결을 성공시켜, 헤센군은 프랑스-스웨덴군의 전력에 도움이 되었다.

이를 보면 외부 행위자들이 애초부터 전략적, 일관된 목표로서 합스부르크에 대한 대항균형을 목표로 의도적으로 제국개입을 결정한 것은 아니었다. 외부 행위자들은 제국 내 균형변화가 가져올 자국의 왕조, 영토, 안보적 이익을 중시했으나, 제국 관습법적 구조의 문제 또는 취약한 상태 자체가 개입을 가능하게 한 조건이었다. 개입 후에서야 프랑스, 스웨덴은 보상, 배상, 사면 조건을 충족해야 평화를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페르디난트 2세는 계속 프라하 화의를 토대로 전쟁종결방안을 논의하려 레겐스부르크 선제후 회의(1636-7)를 소집했다. 선제후들은 스웨덴을 저지하기 위한 군사적 해법과 별도의 평화조약체결을 동시에 제안했다. 황제는 선제후들과 협의를 통해 페르디난트 3세(1637-57)를 차기 황제로 선출시키는데 성공했다. 새 황제는 군 지휘관을 독일인으로 임명하고, 관습법적 구조를 존중하며, 제국추방령 사용 시 선제후들과 합의해야 한다는 선출

105) 작센 선제후는 스웨덴과 협력할 수 있는 작센-비스마르, 헤센 카셀 방백, 뷔템베르크 등에 대해 사면을 제시하지 못해 프라하 화의를 실패로 보았다. 또한 황제가 이전의 '종교의 자유' 실천을 허용해주어야 한다고 설파했다. "Complaint of Elector John George of Saxony (March 15, 1636)," in Helfferich, 2009, p. 179.

106) "Letter from Amalia Elisabeth to Her Councilor Johann Vultejus, January 7/17, 1639," in Helfferich, 2009, p. 201.

조항의 제한을 수용했다.

새 황제 페르디난트 3세는 가톨릭주의에 입각한 성전보다 평화를 원했다. 하지만 제국영방들과 별도로 대내 문제에 관한 논의를 하고자 했고, 외국과 제국영방들 모두가 참여하는 평화협상을 반대했다. 1640-1년 제국 의회에서는 토지반환령 철회와 사면문제에 대한 양보를 고려하면서 더 온건한 관습법적 구조에 대한 해석을 수용했다.¹⁰⁷⁾ 하지만 “독일의 자유”에 관한 논쟁이 다시 점화되면서 문제해결이 어려워졌다.¹⁰⁸⁾ 새 브란덴부르크 선제후 프리드리히 빌헬름은 프라하 조약이 평화의 정당한 조건이 아니라고 보고, 스웨덴과 비밀협상으로 휴전조약을 맺었다. 제국영방들도 황제 리더십과 제국의회에 유용성에 의문을 갖게 되었고, 결국 내전 종결에 실패했다.

7) 소결

베스트팔렌 신화의 토대가 된 30년 전쟁에 대한 전통적인 서사들은 신성로마제국의 내적 갈등의 측면을 간과했다. 전쟁은 신성로마제국의 종교, 정치적 관습법적 구조에 대한 제국 구성원들의 이익충돌에서 발생했다. 아우크스부르크 회의 이후 갈등을 방지하던 합스부르크 황제의 리더십이 약화되고, 제국영방들 사이 교파적 분열이 심화되면서 질서보존 기제가 약화되었다.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세습영지의 문제였던 보헤미아 반란이 제국전체로 확산되며 내전이되었다. 반란세력 측과 황제 측은 제국의 관습법적 구조와 공적평화를 수호한다는 명목 하에 제국제후들과 외국에 정치, 군사적 지원을 구해 전투를 벌였다. 황제 중심의 군주제적인 제국질서 수정 위협으로 신교제후들과 연계한 덴마크, 스웨덴, 프랑스가 개입했다. 이제 내부 문제로서 해결하기 어려운 복잡한 종교, 정치적 갈등구조는 전쟁을 확

107) 황제는 사면조항을 양보하여 뷔템베르크와 헤센-카셀, 팔츠까지 포함시켰다. 또한 1627년을 기준연도로써 삼아 신교 행정구역이 영구적으로 주교구를 보존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이러한 프라하 조항의 수정은 베스트팔렌 조약에서 채택되었다. 1641년 제국결정에서 사법개혁 문제에 대해 바이에른, 마인츠, 콜로네 선제후들은 황제를 일방적으로 지지하지 않고, 군주, 도시들과도 협력하고자 노력했다. Wilson, 2009, p. 624.

108) Helfferich, 2009, p. 159.

대시켰다. 전쟁 중 제국의 위계성에 대해 인식은 외국 군주들, 그리고 동맹 파트너인 제국 구성원들이 각각 달랐고, 이는 전쟁 중 정치, 종교적 이익의 분화로 나타났다. 내전과 국제전적 성격이 혼합되었고, 개별 종교, 영토, 권력에 대한 이익이 다층적인 수준에서 부딪치면서 갈등이 심화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요인에 의해 제국의 위계적 관습법적 구조는 상당히 보존, 회복되었다. 첫째, 구성원들은 무력충돌 하에서도 법질서이자 공동이익의 틀로서 제국질서를 유지하려고 중재, 타협을 모색했다. 황제와 제국제후들 간의 내부 정치적 균형이 깨진데 대해, 황제는 제국의 통합(unity)을, 제후들은 ‘독일의 자유(German Liberties)’을, 그리고 교파 간 차이를 반영한 위계적 서열구조에서 균형을 조정하려고 했다. 둘째, 제국의 비주권적 상태에서 대외적 이익, 위신, 명성, 역할 등을 확보하려는 외국세력들이 개입했기 때문이었다. 두 합스부르크 세력은 제국의 현상유지를, 반대 진영은 합스부르크를 견제하면서 전쟁 목표를 충족하는 것이 전쟁 종결과 평화협상의 조건이 되었다. 이에 따라 일부는 제국 관습법적 구조를 수정하고 대내 균형 상태를 조정하고자 했지만 제국정체의 근본적 변환이나 위계성의 타파를 지향하지는 않았다.

2. 베스트팔렌 조약(1648)의 내용과 의미

본 장은 베스트팔렌 조약이 신성로마제국의 내부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중심으로 그 내용과 의미를 평가한다. 베스트팔렌 협상과 조약은 전쟁의 핵심 원인이었던 황제와 제국영방들의 정치적 균형과 종교 문제를 어떻게 조정하고, 이전의 관습법적 구조를 변화시켰는가? 협상에 참여한 제국 구성원들과 외국 대표들은 신성로마제국을 둔 협상 원칙, 목표, 방식이 각각 달랐다. 이들은 전쟁을 통해 변화한 행위자들의 지위, 권력, 영토의 현실적 배분상황을 반영해 재조정해야 했다. 중요한 점은 황제와 제국영방들의 목표가 이전의 제국질서를 회복하고, 또 다른 갈등과 내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이었다. 마찬가지로 외국세력들도 제국질서를 무너뜨리고, 완전히 영토 주권국가들로 이루어진 새로운 중부유럽 질서를 만들려고 하지 않았다. 제국 내 구성원들의 정치적 권리와 함께 종교, 사면, 직위, 영토 문제에서 각 집단들의 권리, 관할권, 영향력에 대해 세밀하게 조정했다. 마지막으로 제국 내의 세력균형의 유지가 유럽 세력균형의 문제와 어떻게, 왜 연관되었는지 논의한다.

1) 협상의 기본원칙과 방식 논쟁: 조화의 회복과 독일의 자유(German Liberties)

협상원칙과 참여방식을 둘러싼 논쟁은 행위자들의 제국에 대한 인식과, 질서조정 범위에 관한 차이를 드러냈다. 제국영방들의 협상 참여방식은 관습법적 구조에서 구성원들의 정치적 서열, 지위 조정과 관련된 문제였다. 헤센-카셀 방백, 프랑스, 스웨덴은 제국정치 결정에 대해 모든 제국영방들의 참여권(the right of suffrage)을 ‘독일의 자유’에 포함된 권한으로 요구했다. 스웨덴, 프랑스는 사면문제와 함께 제국영방들의 협상참여를 자신들의 영예, 위신과 관련된 문제로 보았다.¹⁰⁹⁾ 협상 목표는 서로 안보와 정당

109) 리슐리외는 영방들의 동의가 없는 상태의 조약은 불안정하고 황제에 의해 쉽게 위배될 수 있다고 보았기에 안보적 관점에서 참여를 요청했고, 독일제후들과 동맹을 중시했다. Christoph Kampmann, “Peace impossible? The Holy Roman Empire and the European state system in the 17th century” in Olaf Asbach and Peter

성의 관념에 부합하는 영예로운 평화(Pax Honesta, honorable peace)였다.

“제국 내 군주, 영방들이 황제와 공동으로 전쟁과 평화의 권리[*ius belli ac pacis*]를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프랑스, 스웨덴 왕은) 영방들과의 협의, 조언, 허락 없이 황제와 단독으로 협상하고 조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 대신 그들은 (영방들의) 자유의 유지와 보존을 확인할 때까지 무기를 들 것이다.”¹¹⁰⁾

황제는 이전 프라하 화의를 토대로 황제, 주요 선제후들, 일부 제국 영방들만 참여한 협상방식을 주장했지만 결국 이들의 제안을 수용했다.

황제의 최우선 협상목표는 “제국영방들과 수장이자 아버지인 자신을 결속시켜, 제국의 조화(*harmonia imperii* [*imperial harmony*])를 다시 회복하고, 오랜 신뢰를 복원”하는 것이었고, 제국영방들이 제기한 사면, 불만문제에서 양보를 통해 제후들과 협력하며 외국과 유리한 조건에서 협상을 하는 것이었다.¹¹¹⁾

제국영방들은 황제와 협상하여 ‘독일의 자유’를 수호하는 것이 목표였고, 이를 위해 외국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 자유는 여러 의미를 담고 있었다. 제국의 구성원들은 기존에 인정되어 왔던 ‘자유’를 법적, 정치적 권리로 보았지만 외부 행위자들은 황제로부터 대외적 독립성, 자율성을 갖되 자신들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종속성이 있는 상태로 보았다.¹¹²⁾

주요 협상 참여세력들은 제국 자체를 부정하거나 정체를 바꾸려는

Schröder (eds), *War, the State and International Law in Seventeenth Century Europe* (Farnham and Burlington, 2010). p. 205.

110) “Memorandum of What Krosigk Should Discuss with the French Legates Delegated to Munster Concerning the General Peace Treaty, December 27, 1643/January 6, 1644 Adolf Wilhelm von Krosigk,” in Helfferich, 2009, p. 213.

111) “Ferdinand III’s secret Instructions to Count Trautmansdorff 16 October 1645.” in Helfferich, 2009, pp. 233-240. 훈령해서 황제는 해결해야 할 문제 순서를 스웨덴 보상, 프랑스 보상, 스페인의 이익, 휴전 이전 협상 마무리, 군대 해산 문제, 합스부르크와 황제에 대한 보상문제로 제시했다.

112) Osiander, 1994, p. 70.

목표는 없었고, 기독교세계의 보편질서에 대한 관념을 완전히 버린 상태는 아니었다. 프랑스, 스웨덴은 합스부르크가 제권을 계속 보유하는 것만 막고자 했다.¹¹³⁾ 하지만 로마제국에 대한 기억을 바탕으로 제국으로 성장하려는 단위들이 계속 충돌했고, 기독교세계에 대한 보편군주정들의 투쟁은 17세기 후반까지 지속되었다.¹¹⁴⁾

2) 제국 구성원들의 정치적 권한 조정

베스트팔렌 조약은 ‘황제와 제국(Kaiser and Reich)’으로 불리는 황제와 제국영방들 사이의 세력균형을 조정했고, 외부세력들에 의해 부과된(imposed) 세력균형이었다.¹¹⁵⁾ 하지만 주권적 영토국가 단위들 중심으로 평면적이고 기계적으로 세력을 계산하여 권한이나 영토를 조정한 것이 아니었다. 선제후, 성직, 세속군주, 도시, 기사들을 모두 포함한 구성원들의 훨씬 복잡하면서도 매우 세부적으로 구체화된 정치적 균형을 조정해야 했다. 또한 황제와 제국영방들 간 관계는 여전히 인격화된, 개인적인 봉신관계로서 연결되어 있었다.

국제정치학자들은 IPM 65조, IPO 8조에 쓰인 ‘영토권(ius territoriale)’의 의미를 대내 최고성, 대외적 자율성을 포함한 근대적인 주권원칙으로 간주해왔다. 하지만 조약에서 합의된 제국영방들의 정치적 권한, 지위에 대해선 하나의 조항, 문장, 문구에서 포함된 단어만 보아선 안 되고 조약문의 전체 내용구조에서 살펴보아야 한다.

IPO 8조 1항은 제국영방들의 “오래된 권리, 특혜, 자유, 특권, 자유

113) Wilson, 2009, p. 728; Derek Croxton, "The Peace of Westphalia of 1648 and the Origins of Sovereignty." *The International History Review* Vol. 21, No. 3 (1999), pp. 569-591.

114) 부르크하르트는 17세기의 갈등의 원인을 단위들 간 평등성의 부재와 국가형성과정에서의 승인을 위한 투쟁에서 비롯되었다고 본다. 30년 전쟁에서 다원적 국가들의 “평등한 공존”이라는 평등성의 원칙을 발견하였으나, 18세기까지 유럽전체의 보편주의(universal claim)와 초국가적 정당성의 권위를 주장하는 단위들 간 투쟁이 지속되었다고 본다. Johannes Burkhardt, "Wars of states or wars of state-formation?" in Asbach and Schröder, 2010, p. 22.

115) A.J.P Taylor, *The course of German history: a survey of the development of German history since 1815*. Routledge, 2001. p. 16.

로운 영토권리”(libero iuris territorialis)를 재확인했고, “제국의 정치, 입법과정에 대한 참여(right of suffrage)와 전쟁 선포 및 조약체결 등에서 제국영방들의 조언과 동의를 구한다.”는 내용을 확인했다(2항). 이를 보면 영토권의 의미는 근대적 의미의 주권의 의미가 아니라, 제국과 황제로부터 인정되어온 제국영방들의 자율성의 범위에 대한 것이었다. 주요 제국 대내외 정책결정에 대해서도 황제가 제국영방들로부터 일방적인 구속 또는 정치력의 제한을 받게 된 것으로 볼 수 없다.

IPO 8조 2항, IPM 65조에 해당하는 동맹 체결권은 실제 제한적이고 모호한 내용이었다. 제국영방들 또는 외국과의 동맹체결이 “황제와 제국, 공적평화, 현 조약에 반하지 않는 한”이라는 조건은 전쟁 이전부터 있었던 권리를 재확인하되, 대외적 독립성을 더 제약하는 측면이 있었다. 황제는 프라하 회의에서 기존의 모든 연합, 동맹을 해체할 것을 요구하고, 중앙집권적인 군사체계를 확인하려 했는데, 베스트팔렌 조약은 이를 다시 원상태로 회복하는 것이었다.¹¹⁶⁾ 프랑스, 스웨덴은 동맹체결권을 ‘주권(rights of sovereignty)’으로 간주하고 선제후, 영방군주들과 전시 기간 동맹을 맺었던 것을 사후적으로 정당화했으며, 오스트리아를 견제하고 군주들의 필요한 새로운 안보적 권한으로서 제시했다.¹¹⁷⁾

조약은 기독교적, 영구적 평화. 제국의 기본법임과 동시에 전쟁종결 조약이 되었다.¹¹⁸⁾ 제국 관습법적 구조의 정치권한 조정에서 남은 논의사항(negotia remissa)은 다음 제국의회 개혁의제로 미뤄졌다. 이를 위해 6

116) 구성원들은 특히 주권보다는 저항권(Widerstandsrecht)의 권리로서 보았다. 황제는 제후들의 반란을 우려했고, 제후들은 전제적으로 행동하는 황제에 대항한 방어적 목적의 상호동맹을 체결할 권리로 고려했다. Ronald G. Asch, "Ius foederis re-examined, the peace of Westphalia and the constitution of the Holy Roman Empire." in Randall Lesaffer (ed.), *Peace Treaties and International Law in European History: From the Late Middle Ages to World War On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4), p. 334.

117) Croxton, 2013, p. 197. 프랑스는 ‘droit de souverainite’로서 모든 군주들, 영방들에게 동맹을 맺을 권리를 옹호했고, 스웨덴도 유사한 의미로 안보를 위한 외국과의 동맹체결의 자유를 정당한 특권으로 제시했다.

118) IPO 17조 2항. 조약 내용은 다른 법, 결정에 의해 침해되지 않고(3항), 위반자는 평화를 깨는 자로서 법의 무력으로 처단하고(4항), 평화수호의 보편적 의무(universal duty)에 따라 모든 당사자들이 종교구분과 관계없이 화의의 조항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이 확인되었다(5항).

개월 내 제국의회를 다시 소집하고, 제국의 대내질서에 관련된 주요 문제들을 다루기로 했다.¹¹⁹⁾ 하지만 이는 권고사항이었지 의무가 아니었다. 따라서 베스트팔렌 조약만으로 황제와 제후들 사이의 정치적 균형이 완전히 공고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베스트팔렌 조약이 법적 효력을 갖게 된 1653-4년 레겐스부르크 제국의회의 주요 결정들은 다음과 같다. “모든 선제후들, 영방들, 신민들, 시민들은 자신의 영토군주, 영주, 상위자가 제국요새와 필요한 지역을 점유, 유지하는데 협조해야 한다.”(180조)¹²⁰⁾ 이에 따라 성직, 세속군주, 제국도시는 제국 내에서 각자 자율적인 방어조직을 조직할 수 있었다. 제국전체에서 필요한 병력들은 각 크라이스의 선제후, 영방들이 결정하게 되었다(181조). 하지만 군사적 권한에 대한 조정들을 통해서 제국영방들이 상비군, 동맹체 결권을 갖춘 독립적인 주권을 확대하거나, 황제 중심 제국질서를 약화시킨 것으로 볼 수 없다.¹²¹⁾

또한 의사결정방식에 동등권 원칙이 반영됨에 따라 각 교파를 보호하기 위한 제국 영방들의 자유로운 참여권이 포함되었다. 그리고 제국의회 내 신교 협의체(Corpus Evangelicorum)와 구교 협의체(Corpus Catholicorum)가 만들어졌다. 새로운 제국군주직을 만드는 것은 제국의회의 승인이 필요하게 되었는데 황제의 제국 교회, 기사, 도시들에 대한 영향력은 지속되었다.

제국의회에서 제국영방들과 동일한 참정권(권리, 자유, 특권)이 제국 직속도시에도 인정되었다(IPO 8조 4항). 당시 신성로마제국 안과 유럽 내에서는 다양한 주권이론들이 발전 중이었다. 법적, 실질적으로도 제국 안에서

119) 의제는 황제 선출방식, 제국선출조항, 추방령(Reichsacht)이 적용된 제국영방들을 다루는 방식, 제국 크라이스의 회복, 제국대장의 복원, 제국영방들의 기입방식, 제국세의 경감, 제국대법원에 제공된 벌금, 정책 개정, 제국 위원단장의 업무와 의무 등 제국의 대내문제와 관련된 내용이었다.

120) “The ‘Youngest Recess’ [jüngster Reichsabschied] of the Imperial Diet of the Holy Roman Empire in 1654 (May 17, 1654)”
http://germanhistorydocs.ghi-dc.org/sub_document.cfm?document_id=3515
 (검색일: 2016-04-04)

121) 주요 영토군주들의 상비군 허용과 확보경쟁은 1660년대부터 본격화되었고, 전체 탈군사화 과정에서 영토 간 군사력불균형이 점차 심화되게 되었다. 하지만 1660년대 이후 조정은 기존 제국의 징집방식을 타협한 것이었고, 황제 중심의 군사적 독점하나 제국영방들이 주장한 자율적인 방식으로도 합의되지 않았다.

제후국들을 완전한, 분리 불가능한 영토, 주권을 가진 독립적 단위로 볼 수 없음을 시사한다. 이에 따라 베스트팔렌 조약은 내적으로 제국의 위계적인 구조를 다시 확인했다.

3) 종교문제 조정

오스나브뤼크 조약(IPO) 5조는 종교문제를 조정했는데, 제국 내 종교에 대한 불만(Grievances)이 현 전쟁의 주요 이유이자 원인이라고 명시했다. 중요한 대내문제였으나, 종교문제의 우선순위에 대해선 황제, 제후들, 외국 간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¹²²⁾ 제국 구성원들의 협상 목표는 제국 내 신, 구교의 공존과 관용의 토대를 다시 마련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아우크스부르크 화의의 모호한 조항들을 명확하게 하고, 신, 구교의 정치 및 경제적 권리에 대한 타협안을 만들어냈다. 오스나브뤼크 조약은 파사우 조약(1552)과 아우크스부르크 화의(1555)를 재확인했다(IPM 5조 1항, 45항). 하지만 개종권(ius reformandi)의 의미(30항)가 제국영방들의 종교문제에 대한 ‘주권적’ 권한을 강화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¹²³⁾ 아우구스부르크 화의에서 채택된 “지배자의 종교가 그가 지배하는 영토의 종교가 된다(cujus regio ejus religio)”는 원칙은 종교에 관한 영토군주의 권한이 이전에 관습법적으로 인정되어 온 것을 확장한 것이었다. 베스트팔렌 조약에서 이는 1624년 기준연도(Normalijahr)의 설정으로도 상대화되었다.¹²⁴⁾ 통치자가 개종하거나 또는 서로 다른 교파의 통치자가 공동

122) 프랑스는 종교문제해결을 부차적으로 본 반면, 스웨덴은 적극적으로 협상을 촉진, 중개하는 역할을 했다. 황제는 종교문제가 이미 프라하 화의에서 해결되었고 스웨덴, 프랑스로 인해 전쟁이 지속되었다고 판단했고, 제국영방들과 협력하여 외세를 몰아내는 것이 우선순위였다. 헤센-다름슈타트 조지 2세 방백도 외국에 대항한 제국의 단결을 위해 종교적 갈등합의가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Croxton, 2013, p. 53.

123) 조항은 종교문제를 영토군주의 공적권위의 문제에서 사적인 것으로 분리하고, 이러한 분리를 통해 개별 신민들에게 영토군주에 대항할 권리가 부여되었다. Benjamin Straumann, "The peace of Westphalia as a secular constitution." *Constellations* Vol. 15, No. 2 (2008), p. 182; Wilson, 2009, p. 759; Croxton, 1999, p. 575.

124) 기준연도에 대해 신고는 1618년을, 구교는 1627년을 제안했고, 작센 선제후는 타협으로 1624년을 제시하여 수용되었다. IPO 5조 2항에서는 “종교적 사안 및 이 사안과 관련된 세속적인 영역에서 일어난 모든 변화가 원상회복되는 소급시점은 1624년 1월 1

으로 다스릴 경우, 신민들의 신앙은 보장될 수 있었고(43항). 가톨릭 지역에서도 신교도들의 자유, 종교교육 및 예배의 권리를 포함한 종교적 자유가 인정되었다(28항).

그리고 루터교와 함께 칼뱅교의 법적 지위가 인정되었고, 종교의 자유(*autonomy*)에 속하는 내용들이 합의되었다. IPO 5조 50-1항은 종교 평화에 대한 문제제기나 모순된 해석의 도출을 금하고 있다. 그리고 이후의 문제는 제국제도를 통한 우호적 타협(*amicable composition*)으로 해결하기로 했고(50항), 동등권(*Paritat*) 원칙의 합의로 제국 내에서 교파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정치적 권리를 조정하는 데 기여했다. 이는 교파 간의 수직인 동등, 교대(*alternative*) 원칙, 분파분리(*itio in partes*) 원칙을 포함한다.¹²⁵⁾ 신교의 요구대로 제국의회 및 제국대법원의 구성 및 소송절차도 동등권 원칙이 적용되면서 제국의 새로운 법적 규범이 되었다. 아우크스부르크 등 신구교가 함께 공존하는 제국도시에도 이러한 원칙이 적용되었다. 종교의 자유 영역에선 개인이 거주하는 영토의 공식종교 이외의 종교로 개종한 일시가 기준연도 이전인 경우엔 자신의 종교를 유지할 자유가 부여되었다. 이는 교회건립과 공적 예배의 자유, 사적 종교적 예배의 자유(*exeritium privatum*), 가내 예배의 자유(*devotio domestica*), 이주권(*ius emigrandi*)을 포함한다.

이에 따라 종교문제에 대한 합의는 구성원들 간 무력사용을 저지하고, 법적, 제도적 틀 안에서 해결하는 공적평화 원칙과 제국의 관습법적 구조를 다시 확인했다.

일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 이전에 발생한 변동사항은 합법성을 유지했다. 5조 15항에서 교회유보권(아우크스부르크 회의 18조)은 새로운 기준연도에 적용되어 신교도들에게 확대되었다. 군주의 개종과 관계없이 구교, 신교의 교회재산들은 이전대로 남아있어야 했다.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가문의 세습영지들에 대해선 기준연도 규정에 구애받지 않고 재가톨릭화가 추진되었다(5조 17항)

- 125) IPO 5조 51-53항. 시참사회원직을 비롯한 모든 공직은 신, 구교 사이에서 똑같이 양분되어야 하며, 특정 공직이 홀수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 전임자의 교파와 반대되는 교파에 소속된 자를 공직에 임명하는 ‘교대’ 원칙, 교파문제와 관련된 사안은 다수결로 다루지 않고 신교와 가톨릭 참사의원들이 별도의 모임에서 분리표결을 실시하여 상호합의를 도출해낸다는 ‘분파분리’ 원칙이 도입되었다. 황대현, “서양사 속의 평화: 아우크스부르크 평화축제(Augsburger Friedensfest) 로의 길-아우크스부르크 시의 30년 전쟁 극복과정과 동등권(Paritat) 체제의 수립.” 『서양사론』 Vol. 108, (2011), pp. 45-74.

4) 제국영방들의 사면, 지위, 영토 조정

주요 선제후들뿐만 아니라 성직군주들, 자유시, 수도원, 기사 등을 포괄한 제국영방들의 지위, 관할권, 영토 등의 조정은 제국 내 세력균형을 구체적으로 변화시켰다.¹²⁶⁾ 참전한 제국영방들의 사면 문제와 제국영방들의 지위, 영토 조정은 프라하 회의에서처럼 기존의 제국 법, 제도 안에서 정치적으로 해결되지 않았다. 이는 외국에 대한 영토 보상(satisfaction), 배상(indemnity) 문제와 연계되었다.¹²⁷⁾

사면문제에서 황제는 양보를 제공했다. 오스나브뤼크 조약에서 팔츠는 운터 팔츠에서 8번째 선제후의 지위를 갖고, 오버팔츠는 바이에른에 양도되어 바이에른 막시밀리안 1세가 팔츠 선제후 지위를 얻게 되었다. 오버팔츠의 소유권과 팔츠 선제후 지위는 비텔스바흐가 빌헬름파의 남계가 단절될 때까지 바이에른 공국에 귀속되었다(IPO 4조 3항).

제국영방들은 외국에 대한 영토 할양에 대해선 관련된 군주, 도시들에 대한 보상과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회의 조건에 대한 행위자들의 입장, 전략은 다양했다. 막시밀리안 공작은 팔츠지역과 선제후직위의 영구 보존을 원했고, 프랑스에 대한 보상을 제공한 뒤, 가톨릭 중심으로 제국영방을 통합하는 것을 고려했다. 브란덴부르크는 포메라니아를 유지하고, 스웨덴에 대한 보상제공에 비판적이었고, 칼뱅파의 입장을 대변했다. 헤센-카셀도 칼뱅파 법적 지위 인정과 헤센-다름슈타트와 갈등에서 유리한 이익을 얻는 것이었다.

스웨덴에 대한 영토할양 문제에서 브란덴부르크와 황제 측과 협상이 이루어졌다. 브란덴부르크는 스웨덴-황제의 회유와 압력을 받고 영토를 내주어야 했다. 스웨덴은 제국의 봉신자격으로 서 포메라니아를 얻었으며, 브

126) 테쉬케는 베스트팔렌 조약은 국가들 간 조약이 아닌 사적군주들 간 조약이었고, 당시 영토는 행정적으로 단일한 지리적 영역이 아니라 상이한 영역의 지배 권리들의 집합(bundles of rights of domination)이었다. 즉, 도시, 교구, 영주권, 도로, 항구, 요새, 관할권, 등에 대한 특권, 권리, 소유권(regales)을 이양한 것이었다. Teschke, 2003, p. 239.

127) 스웨덴은 대한 전쟁노력에 대한 보상, 군대에 대한 금전적 배상과 독일제후들 자유의 회복을 영예(honour)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Resolution of the Regency rejecting the Peace, 1 August 1636,” in Wilson, 2010, pp. 211-212.

란덴부르크는 이에 대한 보상으로 동 포메라니아, 마그데부르크 대주교구, 카민, 하벌슈타트, 민덴 주교구 등 크기에서는 더 많은 영토를 받았다.¹²⁸⁾ 브레멘과 베르덴 주교구도 스웨덴에게 넘어갔지만 황제는 브레멘에 자유시 지위를 부여하여 스웨덴의 통제권을 인정하지 않고 도시 및 주변 주교구들이 자체적인 관할에 놓이도록 했다.¹²⁹⁾ 알자스를 둘러싼 프랑스와 제국의 영토할양에서 알자스 영방들은 이전에 보유했던 제국 안에서 누린 자치적 관할권을 모호하게 인정받았다.¹³⁰⁾ 보상, 배상 협상에서 관련된 제국영방들의 발언권은 각각의 지위와 전략적 중요성, 영향력에 따라 불균등하게 반영되었다.

제국 내 군사균형도 다시 조정되었다. 조약은 황제 이외에 어떤 군주들도 상비군을 유지할 수 없다고 명시했고, 제국 내 빠른 탈군사화의 과정으로 황제의 영향력이 회복될 수 있었다. 조약 체결 후 병력 해산은 스웨덴 및 주요 선제후들의 군대유지에 대한 보상비용이 지불되는 과정이 마무리되면서 진행되었다.¹³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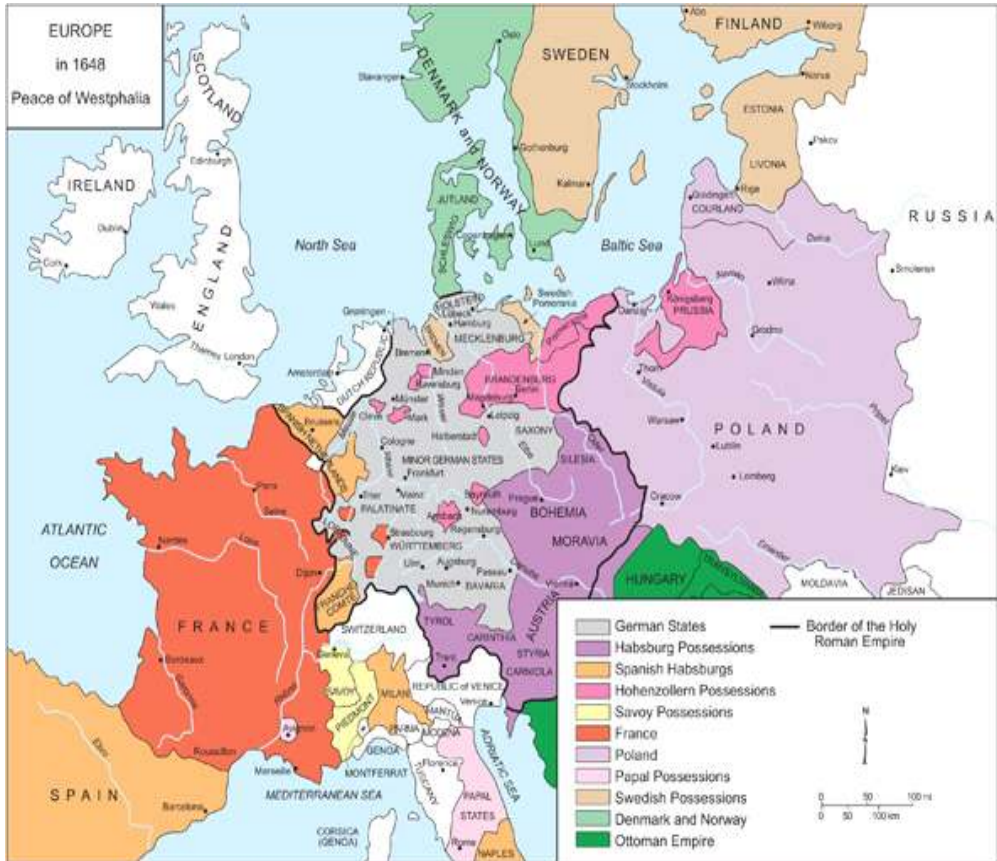
128) IPO 11조. Wilson, 2009, pp. 738-9. 스웨덴이 획득한 전체 영토는 16,271.5km², 브란덴부르크가 획득한 전체 영토는 29,908km²였다.

129) Croxton, 2013, pp. 264-265.

130) IPM 112조. 스트라스부르와 바젤의 주교구들, 다양한 대수도원장직(abbacies), 알자스의 10개 제국도시(decapolis)들과 남부 알자스의 귀족들은 제국의 직접관할(remained in immediate dependence upon the empire)에 남도록 한다.

131) 협상은 구체적인 철군일정을 확인하지 못했고, 이는 뉘른베르크 집행회의에서 다뤄졌다. 기준연도의 시행과 스웨덴과 헤센-카셀에 대한 배상금이 지불되어야 했다. 스웨덴은 북독일 신교들에게 의도적으로 기준연도 시행을 저지하며 배상금을 얻으려 했다. Wilson, 2009, pp. 791-2.

<그림 IV-1> 베스트팔렌 조약 이후 신성로마제국과 유럽의 영토 변화



5) 제국 내 세력균형과 유럽 세력균형의 연계

국제정치학자들은 베스트팔렌 조약에서 확인된 ‘유럽 세력균형’¹³²⁾의 의미에 대해서 주목해왔다. 하지만 제국 내 세력균형, 유럽 세력균형 보존은 대외정책의 목표, 이익이 된 것은 일부 행위자들에 의해서만 실천되었다. 마자랭, 살비우스와 같은 소수의 협상대표만 국익과 더불어 지역질서차

132) 이러한 해석은 키신저가 대표적이다. 테슈케는 제국, 왕국, 제후 등 여러 다원적 단위의 대표자들이 각 정치체의 ‘주권자’로 대표되었으나, 대내적으로 주권측면의 동질적인 단위들 간의 세력균형에 근거한 협상은 아니었다고 적절히 지적하였다. 이는 근대적 주권국가들 간 세력균형이 아닌 군주들 간, 즉 ‘왕조적 세력균형’으로 본다. Henry Kissinger, *Diplomacy* (Simon and Schuster, 1994); Teschke, 2003.

원의 세력균형을 고민했다. 1648년 이후 유럽정치의 운용원리 또는 국가들의 행위원칙, 규범으로서 세력균형은 루이 14세 프랑스에 대한 대응과정에서 나타났다.¹³³⁾

프랑스, 스웨덴은 신성로마제국의 전후질서를 보장하는 측면에서 제국 내 균형을 조정하여 관습법적 구조를 부분적으로 변화, 유지시키는데 관여할 권한을 얻었다.¹³⁴⁾ 제국의 위계질서의 현상유지 또는 정치적 균형의 보존은 유럽 세력균형에 핵심이 되었다. 하지만 이후 유럽정치의 변화와 각국이 지향하는 세력배분상태에 따라 제국의 대내 정치적 균형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그 방향과 전망은 여전히 모호했고 유동적이었다.¹³⁵⁾

이후에도 제국 구성원들 간 견제와 협력, 갈등이 만들어내는 독일 문제는 주변국들이 주시할 사항이 되었다. 하지만 1648년 이후 주변국들의 야심과 제국에 대한 대항균형으로 제국이 분열되고, 지속적인 약화의 경로로 갔다고 평가하긴 어렵다.¹³⁶⁾ 왜냐하면 주변국들은 제국의 약점을 이용하면서도 급격한 세력 약화나 불안정한 상황을 피하려 했다. 30년 전쟁의 경험으로 제국에 개입한 행위자들의 상호견제, 균형의 매커니즘이 작동했다. 중부유럽에서 제국의 약화로 다른 위협세력이 성장해서 유럽이 불안정해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작동했다.

133) 유럽정치에서 세력균형에 대한 논의는 Peter Krüger and Paul W. Schroeder (eds.), *The transformation of European politics, 1763-1848 : episode or model in modern history?* (Münster: 2002), Section I. 참조.

134) 제국영방들이 분쟁을 3년 이내에 평화적으로 해결하지 못할 경우 이러한 개입의 근거가 주어졌으며, 피해당사자의 초대를 필요로 했다. 마자랭의 세력균형 외교는 Derek Croxton, *Peacemaking in early modern Europe: Cardinal Mazarin and the Congress of Westphalia, 1643-1648*.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1996), p. 275.

135) 스웨덴, 프랑스 각각 영토보상과 후견체제 구축은 잠재적으로 제국 내 영향력 행사를 위한 것이었으나, 주변국들의 제국문제, 제국정책은 시기적인 위협인식과 능력의 범위에 따라서 변동되었다. 이에 대해선 본 논문 4장 참조.

136) Heinz Duchhardt, "The Peace of Westphalia: A European Peace," in Asbach and Schröder, 2014. p. 312.

6) 소결

베스트팔렌 조약의 핵심내용은 신성로마제국의 대내 문제와 질서를 조정하는 데 있었고, 주권국가들로 이루어진 새로운 유럽질서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었다. 협상과정에서 행위자들은 여러 개별 목표와 이익을 추구했지만, 제국 구성원들은 한 몸체로서 제국의 ‘조화’를 목표로 황제와 제국영방들의 결속을 통해 제국 관습법적 구조를 존속시키려는 목표를 공유했다.

또한 대외적으로는 합스부르크 황제와 독일 제후들의 제국 내 세력균형에 개입해, 비정상적인 주권상태로서 제국을 유지시키려는 노력이 있었다. 베스트팔렌 조약 보장자인 프랑스, 스웨덴은 유럽질서의 조정과 세력균형 상태를 고려하여 어느 한 세력이 제국 내 영향력을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것을 막고, 다른 정체로의 변환을 주시했다. 제국 내에서 황제가 가진 상위의 권한을 인정하고 제국영방들의 자유를 보존하기 위해 제국정치에 개입할 근거를 만들고, 대내 균형 조정을 통해 유럽 세력균형을 조정하는 체제를 만들었다. 제후들의 무제한적인 주권 혹은 완전한 대내적 최고권과 대외적 자율성의 주권을 확인하지 않았다. 종교문제에 대한 해결도 제국의 기존 공적평화 원칙을 확인하되, 신구교의 공존과 균형의 장치를 마련했다. 무력 충돌의 결과로 합의된 사면, 지위, 영토 문제에서 구체적인 세력균형을 조정하면서 구성원들이 각각 지향하는 제국의 형태를 만들고자 했다.

따라서 신성로마제국 안에서 등장한 질서와 국제정치학계에서 논의하는 ‘베스트팔렌 체제’는 완전히 다른 정치구조였다. 베스트팔렌 조약 이후 제국은 여전히 주권국가도, 느슨한 형태의 연합도 아니었고 다양한 성격의 단위들이 공존하는 불평등한 위계질서였다. 제국이 존속하면서 유럽적으로는 주권국가들로 이루어진 무정부상태의 체제를 만들지 않았다. 조약의 원칙과 내용들은 유럽 수준에서가 아니라 제국의 축적된 정치관계, 문화에서 보면 상당히 연속적이었다. 새롭게 합의한 영역에서도 대내외의 정치동학에 따라 구성원들의 권한, 영향력 등의 범위가 변화될 가능성이 있었다. 17세기 중후반 이후 여러 행위자들 간의 새로운 행동원칙과 관계를 만들 수 있는 준거점이 되었으나, 완전히 새로운 근대 유럽질서 또는 주권, 국가체제를 등장시킨 토대로서 간주하기 어렵다.

IV. 유럽 세력균형의 위기 1: 양면 전쟁과 제국의 회복, 1648-1740

본 장은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 이후 1740년대까지 신성로마제국의 제국질서가 ‘유럽체제(System of Europe)’¹³⁷⁾ 안에서 회복할 수 있었던 대내외적 요인을 검토한다. 17세기 중후반부터 18세기 초까지 장기화된 전쟁이 빈번해지고, 주권을 확보해나가는 왕조적 국가들과 ‘보편군주정’을 지향한 세력들의 서열경쟁이 심화되면서 국제정치적 원리로서 세력균형의 원칙이 등장했다.¹³⁸⁾ 국제정치학자들이 말하는 유럽의 ‘베스트팔렌 체제’가 ‘주권’과 ‘세력균형’을 핵심 축으로 평화를 유지하려고 했다면, 그 안에서 신성로마제국은 어떻게 질서를 유지했는가?

베스트팔렌 조약 이후에도 대내적으로 합스부르크 황제와 중견, 약소 세력들을 포함한 제국 구성원들은 대내외 문제를 대응하는데 있어 제국의 틀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인식했고, 이를 강화하려는 노력을 전개했다. 대외적으로 루이 14세의 프랑스와 오스만 튀르크로부터의 외부 위협에 대응하면서, 오스트리아와 독일 제후들을 포함한 제국은 개별적, 집단적인 지정학적 역할을 강화했다.

137) 17세기 후반부터 ‘유럽체제’라는 언어가 사용되기 시작했다. 대표적으로 1713년 위트레히트 조약협상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영국 정치인 볼링브로크 경(Henry St John, 1st Viscount Bolingbroke)은 위트레히트 합의를 “system for a future settlement of Europe,” 또는 “general system of power in Europe”로 지칭했다. 제국체제와 유럽체제의 연관성에 대한 고찰은 Heinz Duchhardt, “International System and Imperial System in the ‘Short’ Eighteenth Century: Two Worlds?” in Evans and Wilson, 2012, pp. 367-372.

138) 테쉬케는 1688년 명예혁명으로 근대적 자본주의 국가가 된 영국을 제외하고, 전근대적인 절대주의화 되는 단위들의 왕조-지정학적 경쟁이 진행되는 기간으로 보았다. Teschke, 2003. 오시엔더, 류스미트는 17세기 후반부터 18세기 초 절대주의 단위변환과 대내, 대외적 주권의 확립으로 유럽질서의 조직원리가 변화하는 시기이며, 1713년 위트레히트 조약을 중요한 기점 중 하나로 평가한다. Osiander, 1994, pp. 327-328. Reus-Smit, 1999, 120. 세력균형 원칙은 약소, 중소국가들의 생존, 독립과 주권을 인정한 근대적 세력균형이 아니었고, 강한 왕조국가들이 약소국들을 약탈, 교환, 분할 등으로 몰락시켜 팽창의 수단으로 삼는 ‘왕조적(dynastic) 세력균형’ 또는 ‘약탈적(predatory) 세력균형’의 시기였다. Schroeder, 1996; Martin Wight, “The Balance of Power,” in H. Butterfield and M. Wight (eds), *Diplomatic Investigations* (London: George Allen & Unwin, 1966), p. 156.

유럽 안에서 대내외적으로 주권성을 확보해나가는 단위들과 달리 신성로마제국은 내적으로는 비주권적인 위계질서를 유지했고, 이러한 ‘제국’으로서 정체성 유지는 중요 회복요인이었다.¹³⁹⁾ 합성적, 제국적 성격을 보유한 제국이 존재함으로써 유럽체제의 모습과 국제정치의 양상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대내외적 주권이 중첩, 분리된 상태의 황제와 다양한 제국영방들 전체를 포함한 세력균형이 유럽 수준에서 고려되어야 했다. 제권의 존속은 주권적 상호인정에 따른 무정부질서보다 보편군주정이 주도하는 패권질서로 회귀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기도 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소(小) 체제로서 제국 안의 균형 보존이 유럽의 세력균형과 평화의 핵심으로서 인정되었다는 것이다.

1. 제국-위계 보존의 대내외적 요인

30년 전쟁 후 제국의 핵심 문제는 공적평화를 보존시키는 법, 평화, 방어체제의 유지였고, 위계질서 안에서 구성원들의 세력균형을 적절하게 조정하는 것이었다. 1653-4년 열린 레겐스부르크 제국의회는 “평화와 법의 안정화를 위해, 신성로마제국은 모든 대외세력으로부터 보호되고, 그 미약한 평화 상태를 유지해야”하는 원칙과 이전 칙령들을 재확인했다.¹⁴⁰⁾ 제국의 위계성을 유지시킨 대내적 요인은 몇 가지 부분에서 드러난다.

첫째, 제국영방들은 관습법적 구조 안에서 불균등한 권한, 권리만 추구할 수 있었다. 일례로 1640년대 이후 황제의 권력범위를 고정시키려 한 영구 선출조항 마련에 대한 논쟁에서, 몇몇 신교군주들은 이 초안 작성에 직접 관여해야한다고 주장했다.¹⁴¹⁾ 하지만 황제와 선제후들은 그들의 특권적 지위를 보존하기 위해 군주들의 제안을 무시했다. 상위의 지위에 있는

139) 17세기 후반 오스트리아를 포함한 신성로마제국의 회복과 그 수단, 범위, 좌절과정에 대해선 Wilson, 1998, pp. 22-24; Wilson, 2004, pp. 306-319.

140) 178조. “The ‘Youngest Recess’ [jüngster Reichsabschied] of the Imperial Diet of the Holy Roman Empire in 1654 (May 17, 1654)” p. 1.
http://germanhistorydocs.ghi-dc.org/sub_document.cfm?document_id=3515
 (검색일: 2016-04-04)

141) Gross, 1975, pp. 303-304.

제국영방들은 자신들의 위계질서를 쉽게 바꾸려고 하지 않았고, 이는 제국의 관습법적 구조의 현상유지에 기여했다.

둘째, 영토군주들이 신민, 귀족들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해갔지만 완전한 대내 주권을 확보한 것은 아니었다. 상위의 제국 수준에서 영토주권에 대한 한계가 있었다. 영토군주(territorial-princely, Landes-fürstlich) 또는 영토주권자(territorial-sovereign, Landes-herrlich)의 최고권위 또는 특권도 “제국과 황제의 주권(sovereignty of the German Empire and Imperial Majesty)”에 의해 부여되고, 그 행사도 제국의 법, 규제에 의해 제한되었다.¹⁴²⁾ 헤센-다름슈타트 방백은 “(신성) 로마제국 주권(Roman Imperial Majesty)은 제후들과 신성제국의 모든 영방들 우위의 최고 권위(superior authority)”이며, 부국(fatherland)인 제국에 대한 충성을 강조했다.¹⁴³⁾

새 황제로 선출된 레오폴드 1세(Leopold I: 1658-1705)는 1658년 선출조항에서 제국영방들의 영토 내 권한, 지위를 더욱 구체화했다. 제국 영방들의 “위신, 권리, 특권, 관습” 등을 확인하고, 영토신분의회(Land-Ständen)가 과세를 부과하고, 영토군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과세를 관리하는 행위를 금지했다.¹⁴⁴⁾ 또한 신민들이 군주에 대항하기 위해 제국대법원에 직접 제소하는 것을 금지했다. 즉, 군주들의 영토주권의 세부 내용을 강화해준 것은 제국과 황제의 주권과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보완적이었다.

셋째, 황제가 합스부르크 영토군주로서 권력자원과 리더십을 회복하면서, 제국정치를 이끌어 나갈 수 있었다.¹⁴⁵⁾ 합스부르크가에 제권 유지는

142) 독일제후, 영주들의 행정에 관한 “독일군주국(Deutscher Fürsten-Staat)”이라는 책을 쓴 제켄도르프(Veit Ludwig von Seckendorff)가 대표적이다. “Veit Ludwig von Seckendorff, Excerpts from *Teutscher Fürsten-Staat* (1656)” pp. 2-4. http://germanhistorydocs.ghi-dc.org/sub_document.cfm?document_id=3521 (검색일: 2016-04-04)

143) “Landgrave George II of Hesse-Darmstadt, Political Testament (June 4, 1660)” p. 2. http://germanhistorydocs.ghi-dc.org/sub_document.cfm?document_id=3522 (검색일: 2016-04-04)

144) “Electoral Agreement of King and Emperor Leopold I (July 18, 1658)” http://germanhistorydocs.ghi-dc.org/sub_document.cfm?document_id=3516 (검색일: 2016-04-04)

145) 페르디난트 3세와 레오폴드 1세는 합스부르크 영지에 가톨릭주의 정책을 취하면서 세습군주로서의 지위를 강화했다. R. J. W. Evans, *The Making of the Habsburg*

계속 중요했고, 황제는 교회, 귀족과의 재협상을 통해 세습영지에서 후견체제를 강화하며 제국 내 권력 하부구조를 확장했다. 이에 따라 왕가의 이익과 동시에 제국이익을 도모했는데, 특히 레오폴드 1세는 약소 군주, 백작, 제국도시 등 제국 내 약소세력들의 지지를 회복했다. 이 점은 선제후 및 강한군주들 중심으로 제국을 연방적 성격으로 바꾸려는 데 저항하며, 황제와 나머지 약소세력들이 제국의 위계적 특징을 보존하게 했다.¹⁴⁶⁾

30년 전쟁 직후 제국의 현상유지를 지향한 프랑스, 스웨덴의 정책도 1660년까지는 계속 추진되었다. 유럽정치의 향방은 핵심 축인 프랑스-스페인의 전쟁이 지속되면서 불확실성이 남아있었고, 프랑스의 승리로 끝난 피레네 조약(1659)에서야 결정이 되었다.¹⁴⁷⁾ 마자랭은 베스트팔렌 조약의 보장자인 프랑스가 제국 내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고 보았고, 전쟁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라인 지역 독일 군주들을 포섭하면서, 스페인을 지원할 수 있는 오스트리아를 견제하는 정책을 고수했다. 이는 마인츠 선제후와 목표를 일치시켰고, 합스부르크가 출신의 새 황제의 제국적 의도를 견제하기 위해 라인동맹(Rheinische Allianz, 1658)이 결성되었다.¹⁴⁸⁾ 제국영방들의 안보보장과 ‘독일의 자유’ 보존이 프랑스의 안보와 제국 내 영향력 확대에 중요하다는 전략이 유지된 것이었다.¹⁴⁹⁾

Monarchy 1550- 1700: An Interpretation. (Clarendon Press, 1984)

146) Whaley, 2012b, p. 8.

147) 볼링보르크는 유럽사의 시기구분에서 베스트팔렌 조약보다 피레네 조약을 중시한다. 오스트리아 가문을 약화시키고, 부르봉의 우위를 구축하려는 앙리 4세, 리슐리외, 마자랭의 지속된 외교는 베스트팔렌 조약과 피레네 조약을 통해 완성되었고, 스페인의 쇠락과 프랑스의 부상을 확인하는 조약이었다. Henry St John, Lord Viscount Bolingbroke, *Letters on the Study and the Use of History* (1752) (London : Printed for T. Cadell, 1770), pp. 23-25.

148) 제국의 마인츠 선제후 쾰른(Johann Philipp von Schönborn)이 협상을 주도했다. 쾰른은 제 3세력에 의한 공격으로부터 동맹구성원들을 보호하고, 황제가 프랑스-스페인 전쟁에 관여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라인지역 군주들은 프랑스 군대를 영토에 통과시키지 않기로 합의했다. 제국 공위기(Interregnum) 동안 마자랭은 황제가 프랑스에 대항해 스페인을 돕지 못한다는 선출조항 13조를 삽입시켰다. 마인츠 선제후, 콜로네 선제후, 팔츠-뉘베르크, 브레멘-베르덴, 브룬스윅-뤼네부르크 공작, 헤센-카셀, 프랑스가 1658년 참여했고, 이후 트리어 선제후, 브란덴부르크 선제후가 가입했다.

149) 신성로마제국에 대한 정책은 Georges Livet, "Louis XIV and the Germanies." in Ragnhild Marie Hatton (ed.), *Louis XIV and Europe* (Palgrave Macmillan, 1976), pp. 60-81.

그러나 프랑스의 정책이 오스트리아의 위협을 저지하려 제국의 관습 법적 구조를 활용하던 것에서, 양자, 다자동맹을 통한 질서유지 정책으로 변화하면서 라인동맹은 약화되었다. 피레네 조약을 통해 프랑스와 합스부르크의 전쟁 위협이 감소하면서 라인동맹의 전략적 중요성도 약화되었다. 결정적으로 1667년 프랑스가 스페인령 네덜란드를 공격한 것(상속전쟁, War of Devolution)은 라인동맹에 참여한 군주들의 평화유지 목표 및 이익과 상충했다.¹⁵⁰⁾ 프랑스로부터 안보위협을 느낀 독일 군주들은 다시 제국 대내 외의 평화 조정자인 황제에게 기대게 되었다.

2. 튀르크, 프랑스의 위협: 집단안보의 문제

1660-70년대 튀르크, 프랑스 위협이 고조된 것은 제국의 결속력과 기능을 회복하는데 기여했고, 신성로마제국은 유럽정치에서 지정학적 역할을 강화했다.¹⁵¹⁾ 프랑스와 튀르크의 밀약으로 인한 동서 양면의 대외위협에 대해 제국영방들은 제국과 황제에게 보호를 요청했다. 제국제도를 통해 황제와 제국영방들 사이 정치적 상호작용이 다양하게 진행되었고, 제국 보존을 위한 공동이익을 수렴했다. 하지만 황제가 제국정치를 다루고, 제후들로부터 공동행동을 이끌어내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튀르크의 위협에 대해 황제는 유럽 군주들의 지원을 요청했고, 독일 군주들은 황제를 “기독교적 독일 제국(Christian German Reich)”에 대한 보호자로서 지지했다.¹⁵²⁾ 튀르크 전쟁(1663-4) 직전 상비군을 보유한 몇몇 영토군주들과 라인동맹의 존재로 인해 제국방위 및 징세 문제는 해결되지

150) 1665년 9월, 스페인 펠리페 4세 사망으로 그의 딸과 결혼한 루이 14세는 ‘브라반트 권력이양법’에 따라 스페인 합스부르크가에 저지대 지역을 넘기라고 요구했다. 스페인이 이를 거절하자 루이 14세는 스페인 북부의 전략적 요충지들을 장악했다. 프랑스와 조약으로 마인츠, 쾰른, 팔츠, 브란덴부르크는 호의적 중립을 유지했고, 오스트리아-프랑스는 스페인에 대한 비밀 분할조약에 합의하여 오스트리아는 스페인을 돕지 않았다. 아헨조약으로 부르군트는 스페인에게 반환되었으나, 공식적으로 플랑드르 요새들은 프랑스가 가져가게 되었다.

151) 레오폴트 1세 시기 제국과 영토군주들의 전쟁 대응에 대해선 Peter H. Wilson, *German Armies: War and German Society, 1648-1806* (London: UCL Press, 1998) ch. 2-3 참조. Whaley, 2012b, pp. 81-85.

152) Whaley, 2012b, pp. 28-29.

않은 상태였다. 이에 1663년 레겐스부르크 제국의회는 전시기간 황제에게 재정적으로 원조하고, 3만 명의 제국군(Reichsarmee)을 징집하는데 합의했다.¹⁵³⁾ 이후 정례화 된 제국의회는 전쟁선포, 전비조달에 관한 대외정책결정에서 역할을 확대했다. 영구의회(Perpetual Diet, Immerwährender Reichstag)가 된 것은 제국 내부균형 조정을 위한 정치적 결과물이었고,¹⁵⁴⁾ 중소제후들이 강력한 제후들에게 원조, 중재를 구하고, 황제와 유럽대표들도 제국정책을 펼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제국의회는 상호이익을 논의하는 공적담론과 의사소통의 장이었다.

튀르크 위협에 대한 집합적 협력과 달리, 프랑스 부상에 대해선 제국구성원들의 입장이 복잡해졌고, 황제 정책에 반대하는 군주들을 제약하고, 공동행동을 위한 합의를 얻어내는 것이 쉽지 않았다. 1670년 6월 도버밀약으로 루이 14세는 프랑슈 콩테(Franche-Comté)와 스페인령 네덜란드 사이 신성로마제국의 봉토인 로트링겐(Lothringen, 불어: Lorraine)을 병합했고, 1672년 영국과 함께 네덜란드를 공격했다(네덜란드 전쟁, 3차 영국-네덜란드 전쟁). 프랑스에 협력한 윈스터, 콜로네 선제후도 이에 참여했다. 네덜란드 오랑 공 빌럼 3세(Willem III, 1672-1702)는 총독(Stadtholder)을 맡아 전쟁에 대응하고자 했고, 브란덴부르크 선제후 및 독일 군주들의 협력을 요청했다.¹⁵⁵⁾ 브란덴부르크 선제후는 네덜란드, 신성로마제국, 프랑스 사이에서 실리적으로 움직였다.¹⁵⁶⁾

153) 그러나 브란덴부르크, 작센, 바이에른은 병력파견에 반대하면서 오스트리아와 별도협상으로 추가보상을 얻어내려 했다. 라인동맹은 6,000명의 병력을 파견했고, 32,000명의 독일병력, 51,000명은 오스트리아인, 9,000명은 헝가리인 병력이 소집되었다.

154) 영구의회의 발전, 기능, 역할에 대해선 Karl Härter, "The Permanent Imperial Diet in European Context, 1663-1806" in Evans and Wilson, 2012. pp. 115-135.

155) Derek McKay, "Small-power diplomacy in the age of Louis XIV: the foreign policy of the Great Elector during the 1660s and the 1670s," in Robert Oresko, G.C. Gibbs and H.M Scott (eds.), *Royal and Republican Sovereignty in Early Modern Europe: Essays in Memory of Ragnhild Hatton* (Cambridge, 1997), p. 207.

156) 1672년 프랑스가 클레베 영토를 노린 것은 제국에 대한 위배라고 보았고, 선제후와 네덜란드에 대한 안보위협이었다. 이에 1672년 5월 네덜란드를 지원했으나 전쟁기여에 대한 마찰로 네덜란드가 보조금을 중단하자 1673년 6월 다시 루이 14세와 따로 조약을 맺었다. 선제후의 중립을 유지하는 대가로 프랑스가 점령한 클레베, 마르크의 요새와 팔십만 리브르의 보조금을 받았다. 1673년 말, 1674년 선제후는 다시 황제, 네덜란드, 스페인 동맹에 참여했다. Wouter Troost, "William III, Brandenburg and the

빌럼 3세는 30년 전쟁 시기 주창된 ‘독일의 자유’의 ‘자유(Libertat)’ 언어를 “유럽의 자유(European Liberty)의 회복과 보존”으로 확장하여 설파했다.¹⁵⁷⁾ 루이 14세가 점차 제국에 위협적이게 되자, 제국 내 균형 보존이 유럽 평화의 핵심으로서 강조되었다. 황제도 초기 루이 14세와 약속하여 불개입을 약속하며 수동적이었고, 일부 제후들도 프랑스를 지지했었으나, 점차 적극적으로 참전했다.¹⁵⁸⁾ 황제는 네덜란드, 로트링겐 및 독일 군주들과 방어동맹을 맺고, 스페인과 함께 본격적으로 프랑스에 대항했다. 1672년 황제는 브란덴부르크 선제후와 동맹을 맺고, 마인츠, 브란덴부르크, 헤센-카셀 등과는 브룬스윅 연맹(Brunswick Union)을 맺었다.¹⁵⁹⁾

하지만 외부 위협에 대한 대응에는 제국의 두 가지 취약성으로 인해 어려웠다. 첫째, 제국정치에 프랑스가 개입이 용이했고, 둘째, 제후들의 동맹체결권이 제약이 되었다. 제후국들 간, 제후국들과 외국 간 동맹 체결이 제국, 황제와는 대항하지 않아야 한다는 애매한 베스트팔렌 조약 조항으로 인해 안보, 생존을 추구하는 개별목표들과 계속 긴장관계가 있었다. 또한 독일 군주들은 강력한 황제를 두려워하면서도, 충분히 제국을 방어할 능력을 갖추기를 바랬다. 즉, 제후국들과 마찬가지로 황제도 제국 내외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보여야 했다.

그러나 나이메헨 조약(Peace of Nijmegen, 1679)에서 제국은 전략적 요충지와 북부 라인지역의 방어막을 상실했고, 조항들에 대한 불만족과 프랑스에 대한 입장 차이로 제후들은 더 분열되었다. 프랑스는 베스트팔렌 조약에서 모호했던 알자스의 법적 지위를 이용하여 알자스 제국 도시들과 프랑슈 콩테 전체를 흡수했다. 베스트팔렌 조약을 재확인 했지만 프랑스는 프라이부르크와 브라히자흐의 요새를 얻고, 대신 필립스부르크 요새를 양보

anti-French coalition”, in Israel, Jonathan I. *The Anglo-Dutch moment: essays on the Glorious Revolution and its world impact*.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3. p. 305.

157) Wout Troost, “‘To restore and preserve the liberty of Europe’: William III’s idea’s on foreign policy,” in Onnekink, David, and Gijs Rommelse (eds.), *Ideology and foreign policy in early modern Europe (1650-1750)*. Ashgate Publishing, Ltd., 2011. pp. 283-304.

158) Wilson, 1998, pp. 44-57

159) 제국도시, 약소제후국들을 포함한 말보르크 동맹(Marienburg alliance, 1671-2)과 달리 무장군주들로 이루어진 연맹이었다. Wilson, 2004, pp. 176-177; Whaley, 2012b, p. 35.

했다.¹⁶⁰⁾ 또한 프랑스에게 스페인령 네덜란드, 생토메르, 캄브레, 샤를루아, 프랑슈 콩테가 양도되어 프랑스의 북부국경이 획정되었다.

네덜란드가 프랑스와 따로 조약을 맺게 되면서 브란덴부르크는 서부 포메라니아를 상실했다. 황제도 선제후의 부상에 위협을 느껴 베스트팔렌 조약을 다시 인정해 스웨덴의 영토보유를 다시 확인했다. 네덜란드로부터 방기된 선제후는 프랑스에게 위협을 느꼈지만 영토 확대를 기대하면서 프랑스와 동맹을 모색했다. 여기에 1679년 덴마크-스웨덴의 반 프랑스 동맹은 프랑스와 브란덴부르크 동맹을 촉진했다. 이처럼 제국 구성원들의 입장이 나뉜 것은 프랑스 부상에 대한 평가가 달랐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제국 내 지위 및 세력배분상태에서 각자의 위치에 대한 고려 때문이기도 했다. 프랑스의 부상에 편승정책을 취한 팔츠, 작센, 바이에른은 1679-80년 루이 14세를 차기 황제로도 고려했다. 제국 내에선 팔츠-뉘부르크, 뷔템베르크, 하노버, 오스나부르크 등은 중립 또는 전술적 지지를 보이는 세력들과 반-프랑스파로 구분되었다.¹⁶¹⁾

3. 제국 방어 체제 개혁과 양면 전쟁 대응, 1680-1699

전쟁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제국의 관습법적 구조 개혁(Reichsreform)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가 활발해졌다.¹⁶²⁾ 이는 대외정책결정의 대표, 제국방어체계, 제후들의 실질적 권한 조정 문제, 제국 내 황제의 역할과 통치권의 범위 등 관습법적 구조에 대한 실천적 의제들을 포함했다.¹⁶³⁾ 황제와 제국영방들의 봉건적 위계성이 존속하고, 실질적 주권과 연관된 제국 영방들 선제후, 군주들, 약소 세력들의 영향력 차이가 심화됨

160) 제국과 스웨덴, 제국과 프랑스의 조약으로 이루어진 나이메헨 조약은 윈스터와 오스나부르크 조약을 새로운 평화의 토대(fundamentum)이자 규범(norma)으로 합의했다. 그러나 조약 전체가 아닌 관련된 부분만 지칭했다. Heinz Duchardt, "The Peace of Westphalia: a European peace," in Asbach and Schröder, 2014, p. 312.

161) Whaley, 2012b, pp. 32-33.

162) Härter, 2013. pp. 122-124.

163) 여러 개혁의제들과 논의들은 교파적 통합, 관습법적 구조 내 정치적 권한 문제와 군사, 경제개혁 등을 포괄했다. 상세한 개혁 프로젝트들과 그 지적배경에 대해선 Whaley, 2012b, ch. 10 참조.

에 따라 이들의 균형을 조정해야 했다.

또한 제국 관습법적 구조, 법을 다루는 공법(ius publicum)을 다루는 공법학(Reichpublizistik)이 발전했다. 이론가들은 단순히 보댕 식의 분리불가능한 주권론을 기반으로 제국 내 주권소재지(locus)를 결정하기 보다 더 복잡하고 정교한 이론적 논의를 전개했다. 제국은 황제의 권력이 완전한, 단일한 최고통치권을 보유한 만큼 주권적이지 않고, 제국영방들도 나름대로 권한, 권리들을 확대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봉건적 위계질서가 남아있는 비정상적인 단위였다.¹⁶⁴⁾ 따라서 제국을 귀족정이나 제한 군주정, 절대 군주정, 연합 등으로 지칭할 수 없다고 보았다. 또한 제국영방들의 ‘질투(jealousy)’와 ‘부러움(envy)’에서 촉발된 ‘모방(emulation)’과 불화가 만들어내는 제국의 내적 취약성에 대해 지적했다.¹⁶⁵⁾ 불안정한 유럽 정치 상황에서 전면 개혁 또는 재건을 도모하지 않는 한 신성로마제국은 현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평가되었다.¹⁶⁶⁾

1680-2년 황제, 제국영방들이 제국의 방어체제를 재정비한 것은 제국의 회복에 중요한 모멘텀이 되었다. 방어체제 개혁의 핵심은 황제 중심의

164) 라이프니츠는 구체적으로 제국 내 황제와 제후들의 주권이 양립가능하며, 기독교공화국과 보편교회의 수호자이자 최고 수장으로서 황제의 역할을 인정했다. 황제는 봉건적 상위권을 보유하며, 절대적 권력을 양도하지 않고, 제후들은 황제에 대해 예, 충성과 봉신의 의무를 다해야 하는 봉건적 의무가 있었다. 하지만 황제는 제후국들의 입법권, 사법권, 조세징수권, 전쟁과 평화에 관한 권한들은 인정해야 했다. 또한 법적, 권력적으로 불평등한 상태의 영방제후들의 위치와 독립성을 조정하려는 시도로 주권을 더 세 부적으로 구분했다. 선제후들 및 강력한 영토군주들은 ‘suprematus’를 보유하며, 반면 약소한 영방들은 사법권과 대내적 주권, ‘superioritas territorialis’를 보유한다고 보았다. Gottfried Wilhelm Leibniz, “Caesarinus Furstenirs(1677)” in *Leibniz: Political Writing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8), p. 112. 황선혜, “라이프니츠의 정치적 형이상학과 국가건설전략.” 『정치사상연구』 Vol.10. No. 2 (2004), p. 198.

165) 제국영방들의 동맹체결권은 사익에 따른 독자적인 정책을 취하게 하고, 외국의 이익에 따라 “독일을 주조할(mould) 가능성 및 공동행동을 어렵게 하는 정책”이 시행될 위험이 있었다. Samuel von Pufendorf, Edmund Bohun trans, Michael J. Seidler (ed.), *The Present State of Germany* (Indianapolis: Liberty Fund, 2007), p. 183. p. 207.

166) 푸펜도르프는 “독일제국의 기형적 상태는 너무나도 단단하므로 국가전체가 파괴되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왕국의 상태로 되돌릴 수 없다”고 하면서 다른 정체로의 변환이나 개혁은 대외적 위협 속에서 불필요한 혼란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Samuel von Pufendorf, Jodocus Crull trans, Michael J. Seidler (ed.), *An Introduction to the History of the Principal Kingdoms and States of Europe* (Indianapolis: Liberty Fund, 2013), p. 4.

상비군을 마련할 것인지, 또는 안보를 위임한 군주들의 무력사용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에 대해서였다. 제국전쟁헌법(Reichskriegsverfassung, 1681)에서 황제는 제국의회(Reichstag)의 동의를 얻어 직접 지휘하는 제국군 창설 법안을 마련했다.¹⁶⁷⁾

방어개혁은 강한 영토제후들만이 아니라 약소세력들을 포함하여 위계 질서를 유지했다. 당시 친제국적인 군주들이 황제를 지지했고, 황제는 약소 영방들의 네트워크를 제국 서부, 남서부로 확장하며 안보역할을 수행하고자 했다. 그러나 군사적 효율성과 결속력 증대에는 한계가 있었는데, 1660년대 이후 상비군을 보유한 군주들이 제국군에 불참하거나, 브란덴부르크, 작센 등은 자체적으로 군사지휘권을 유지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어체제는 재통합전쟁(War of Reunions, 1683-84)¹⁶⁸⁾과 1683년 6월 빈을 봉쇄한 튀르크 군에 반격하는 과정에서 제국의 지정학적 역할증대에 공헌했다. 대 튀르크 전쟁(1683-1699)은 오스트리아, 교황청, 폴란드-리투아니아 연방, 베네치아 공화국, 러시아 차르국들이 참여한 신성동맹(Holy League, 1684)이 주도했는데, 제국영방들이 참전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 오스트리아는 제국에 자원을 요청했고 “제국 애국주의(patriotism)”에 따른 의무로 설파했다.¹⁶⁹⁾ 1686년 신성동맹이 튀르크로부터 부다(Buda)를 재정복했고, 합스부르크는 헝가리를 복속했다. 1687년 헝가리-크로아티아 영방들은 이전의 자치, 저항권을 버리고, 합스부르크를 헝가리의 세습군주정으로 인정하고 레오폴드의 후계자

167) “The Imperial War Constitution [Reichskriegsverfassung] (1681-82)” http://germanhistorydocs.ghi-dc.org/sub_document.cfm?document_id=3578
제국의회는 전쟁의 규모와 성격에 맞춰 필요한 총 병력수를 결정했고, 각 크라이스에 일정 수의 병력이 할당되었다. 크라이스는 병력동원, 무기, 식량보급 등의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는데, 이는 동원과 보급의 업무를 지역적으로 분산시켜 황제권력이 강화되는 것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의도였다. 제국군 기본 병력 수는 4만 명(기병 12000, 보병 28000)명이었다. 필요에 따라 2배수나 3배수로 증원될 수 있었다.

168) 루이 14세가 스페인령 네덜란드에서 스페인, 신성로마제국에 대해 벌인 전쟁이다. 네덜란드 전쟁 후 프랑스는 황제를 위협으로 생각했고, 루이 14세는 튀르크를 끌어 합스부르크 영지에 공격하도록 했다. 폴란드의 소비에스키 왕도 원조를 못하게 하고, 트란실바니아와 헝가리 군주들이 술탄을 돕도록 조장했다. 이를 기회로 루이 14세는 스트라스부르를 점령했고, 룩셈부르크를 봉쇄했다. 터키 전쟁 중이었던 황제는 스페인, 프랑스와 레겐스부르크 휴전조약(Truce of Ratisbon, 1684)을 맺을 수밖에 없었다.

169) Whaley, 2012b, p. 44.

인 요제프를 새 왕으로 인정했다.¹⁷⁰⁾ 이에 따라 1688년 합스부르크는 전체 헝가리와 트란실바니아를 통제할 수 있었고, 카를로비츠 조약(Treaty of Karlowitz, 1699)에서 이를 확인했다.

동시에 루이 14세는 재통합정책 등을 통해 군사적 패권과 보편군주정화의 야심을 추구하고 있었다. 브란덴부르크는 1683년까지 프랑스와 반프랑스 동맹 사이에서 계속 고민했고, 1684년 이후에야 네덜란드, 영국과 협력했는데, 이들 국가들도 대외정책을 둔 내부논쟁이 격렬히 이루어졌다. 루이 14세가 1685년 낭트칙령을 폐지하고 공세적인 재가톨릭화를 추진한 것은 결정적으로 신교세력에 대한 종교적 위협으로 간주되었다. 빌럼 공작은 반-프랑스 세력균형을 구축해 프랑스의 계속된 영토요구와 신교억압에 대항하려 했는데, 오스트리아, 브란덴부르크, 다른 독일 영토군주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다.

레오폴드 황제는 브란덴부르크, 네덜란드, 스페인, 스웨덴, 작센, 팔츠 등을 포함한 아우크스부르크 동맹(League of Augsburg)을 형성했고, 팔츠 선제후령에 대한 루이 14세의 권리 주장을 철회하고 라인지역의 방어를 위해 나섰다. 영국의 명예혁명을 성공시킨 윌리엄 3세는 유럽평화의 회복과 자유의 증대라는 목표 하에 반 프랑스 동맹을 강화했다.¹⁷¹⁾ 프랑스에 대해선 제국의회가 공식 전쟁선포를 했고, 프랑코니안, 부르군트, 북부라인 크라이스 등이 대거 참여했다. 베스트팔렌 조약의 복원과 프랑스가 재통합 정책으로 빼앗아간 영토반환을 요구하면서 대항균형에 나섰다.

동서 양면전쟁은 제국에 두 가지 여파를 낳았다. 먼저 황제와 제국 영방들 사이 연대가 발생했고, 레오폴드는 1690년 요제프를 차기 황제로 선출시키는데 성공시키면서 안정적인 계승을 성공시켰다. 그러나 제국영방

170) Charles, W. Ingrao, *The Habsburg Monarchy 1618-1815*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0), p. 84.

171) Wouter Troost, "William III, Brandenburg, and the Construction of the AntiFrench Coalition, 1672-88." in Jonathan I. Israel. *The Anglo-Dutch moment: essays on the Glorious Revolution and its world impact*.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3. pp. 299-334. 영국의 안보와 유럽 신교의 자유를 위한 명예혁명의 종교적 성격을 강조하는 쪽은 Andrew Thompson, "After Westphalia: Remodelling a Religious Foreign Policy." in David Onnekink (ed.), *War and Religion After Westphalia 1648-1713* (Routledge, 2009), p. 61.

들의 전쟁부담으로 인한 갈등과 제후들의 서열경쟁은 더욱 심화되었다. 주요 제후들은 루이 14세의 회유와 위협 속에서 황제로부터 자신의 전략적 지위를 높이며 전쟁기여를 대가로 권한, 지위를 얻어내려 했다.

황제는 주요 선제후 가문들의 경쟁을 이용해 자신의 권위를 구축하면서 “분할과 지배(divide and rule)” 전략을 통한 상호견제 구도를 만들었다.¹⁷²⁾ 대표적으로 브란덴부르크의 견제를 위해 하노버에 정치적 충성과 군사지원을 구했고, 선제후 직을 대가로 제공했다.¹⁷³⁾ 또한 합스부르크에 불만을 가진 세력이었던 바이에른과는 불안정한 협력관계를 유지했다. 바이에른 선제후는 오스트리아를 견제하려 네덜란드 전쟁에서부터 프랑스의 원조를 받으며 제국의 전쟁노력을 지원하지 않아 왔는데, 황제는 이를 막으려 바이에른을 포섭하려 했다.¹⁷⁴⁾ 이에 따라 루이 14세가 북독일 제후들을 중립적 제 3세력으로 만들려했던 정책은 실패했다.

라이스윅 조약(Treaty of Ryswick, 1697)은 루이 14세의 보편군주정 위협을 전면에 대두시켰고, 합스부르크는 더 이상 위협이 아닌 지정학적 변동을 가져왔다. 조약 체결 과정은 신성로마제국의 모호한 주권과 영토와 관련한 문제가 미해결되었음을 보여주었다. 독일 제후들은 협상에 타국들과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하려 했으나, 황제와 영국, 네덜란드, 프랑스는 이를 거부했다. 즉, 위계성이 남아 ‘황제’가 계속 제국을 대표하는 특권을 유지했고, 제후국들의 대외적 주권 인정엔 한계가 있었다.

조약에서 프랑스는 콜로네 선제후에 대한 간섭, 팔츠 선제후령에 대한 영토요구를 철회했고,¹⁷⁵⁾ 알자스 전체와 스트라스부르를 계속 보유하되,

172) 레오폴트는 브룬스윅-뤼네베르크의 아우구스투스(Ernest Augustus) 공작을 프랑스, 튀르크에 대한 전쟁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선제후 직으로 격상시켰다. 하지만 1692년 제국의회에서 이를 반대하여 1708년에 가서 공식적으로 승인되었다.

173) 레오폴트는 브룬스윅-뤼네베르크의 아우구스투스(Ernest Augustus) 공작을 프랑스, 튀르크에 대한 전쟁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선제후 직으로 격상시켰다. 하지만 1692년 제국의회에서 이를 반대하여 1708년에 가서 공식적으로 승인되었다.

174) 1685년 막스 에마누엘과 레오폴드의 딸인 마리아 안토니아를 결혼시켜 선제후가 오스트리아 상속의 기반을 갖게 했다. 그리고 1683년 헝가리 회복과 9년 전쟁의 원조와 충성의 대가로 1691년 스페인령 네덜란드의 총독으로 임명되었다. 바이에른의 황제에 대한 지지는 루이 14세가 선제후의 형제인 요제프 클레멘스를 콜로네 선제후로 반대하여 1687-8년 프랑스의 접근을 거부한 것이 원인이 되기도 했다.

175) 1688년 1월 프랑스는 스트라스부르 주교를 친프랑스인 콜로네 선제후-대주교의 부대(주교)로 임명되게 했다. 이로써 대주교령, 콜로네 선제후령을 프랑스의 영향권 하에 두

점령 지역이었던 프라이부르크(Freiburg), 브라이자흐(Breisach), 필립스부르크(Phillipsburg), 케흘(Kehl)은 제국에 반환했다. 대신 로렌 공작령을 요제프에게 돌려주기로 했다. 그러나 황제는 라인지역 방어를 완전히 안정화시키지 못해 제국영방들이 불만족했다.

이제 루이 14세의 프랑스는 제국에 대한 위협만이 아니라 유럽 수준의 문제가 되었다.¹⁷⁶⁾ 루이 14세는 일련의 전쟁에서 승리한 오스트리아가 곧 자신을 공격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러한 위협인식과 방어적 동기에서 나온 일방주의(unilateralism)적 대외정책은 유럽 국가들의 두려움을 완화시키지 못하고 안보딜레마를 심화시켰다.¹⁷⁷⁾ 유럽 역내 행위자들 간주권적 범위에 대한 상호인정과 내정불간섭 원칙이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프랑스의 패권적 시도에 대한 의구심은 더욱 확산되었다.

4. 유럽 세력균형과 오스트리아-신성로마제국의 회복

신성로마제국은 스페인 왕위계승전쟁에서 루이 14세에 대항하면서 제국적 정체성과 지위를 회복할 수 있었다. 스페인 왕위계승문제가 유럽에 대두된 후, 1, 2차 스페인 분할계획에선 영국, 프랑스, 신성로마제국 모두를 만족시키는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¹⁷⁸⁾ 루이 14세의 야욕은 정치, 종교적인 관용과 관련된 “유럽의 자유”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되었고, 영국, 네덜란드는 유럽 세력균형의 회복을 위해 1701년 신성로마제국과 동맹을 맺고

려고 했고, 황제와 브란덴부르크 선제후가 반발하면서 전쟁 원인이 되었다.

176) 루이 14세의 팽창에 대한 경계는 스페인 왕위계승 전쟁 발발 전후로 증대되었다. François Fénelon, “Sentiments on the Balance of Europe,” in François Fénelon, *Two Essays on the Ballance of Europe*, (London: n.p., 1720), p. 13. 전제주의, 종교적 불관용, 경제적 후진성의 특징을 가진 보편군주정으로서 프랑스에 대한 영국 내 담론은 Charles Davenant, *An essay upon universal monarchy*[1701] p. 293-4.

177) J. A. Lynn, *The Wars of Louis XIV, 1667-1714* (London, 1999). pp. 37-41.

178) 스페인 왕위계승 문제는 1660년대 대두되었는데, 후계자가 없던 스페인 카를로스 2세를 이어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가 또는 부르봉 가문의 후보자가 스페인 왕위를 계승할 경우, 유럽 내 거대 제국이 탄생할 가능성이 있었다. 1, 2차 분할조약 협상에 대해선 Frederik Dhondt, “From Contract to Treaty. The Legal Transformation of the Spanish Succession 1659-1713.” *Journal of the History of International Law* Vol. 13. No. 2 (2011), pp. 347-375.

반-프랑스 연합을 구축했다.¹⁷⁹⁾

레오폴드 1세 황제는 제국의 전략적 우선순위와 합스부르크의 이익을 동시에 수호하고, 제국에서 프랑스의 영향력을 제거하는 것이 목표였다.¹⁸⁰⁾ 그리고 스페인에 대한 자신의 계승 권리와 이탈리아에서 제국적 종주권을 보호하려고 했다.¹⁸¹⁾ 황제뿐만 아니라 선제후들을 포함한 제국영방들도 프랑스를 저지하기 위한 제국의 대의를 지지했다. 헤센-카셀 다름슈타트, 팔츠, 뮌스터, 바덴을 포함한 약소 군주들은 제국의 영토였던 알자스, 로렌을 회복하여 영토를 얻고 싶었고, 제국 서부국경인 라인지역의 강력한 배리어의 구축을 원했다.

그러나 일부 전략적 이익을 추구한 선제후, 군주들은 영국-네덜란드 동맹군에 직접 가담하기도 하면서 보조금을 얻고 대외적 지위를 높이는데 목적이 있었다. 하노버 선제후는 영국 앤 여왕의 후계자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하려했고, 작센의 아우구스투스 2세는 폴란드의 왕으로서 스웨덴의 카를 12세에 맞서 대 북방전쟁에서의 지위를 확립하려고 했다.¹⁸²⁾ 브란덴부르크 선제후 프리드리히 3세는 ‘프로이센의 왕(King in Prussia, 프리드리히 1세)’으로 격상되어 대동맹에 막대한 병력을 보였고, 이러한 선제후-왕들도 베스트팔렌 조약에 따라 제국에 반하는 대외정책을 쉽게 펼칠 수 없었다.

179) 헤이그 동맹은 카를로스 2세가 유언에서 지명한 루이 14세 손자 앙주 공 펠리페 5세(Phillip V)를 스페인 왕으로 인정하나, 신성로마제국에게 이탈리아의 스페인 영토를 할양하고 스페인령 네덜란드에 신성로마제국 군대를 주둔하게 하여 프랑스 세력 확대를 막게 하는데 합의했다. Ingrao, 2000, p. 108.

180) 제국영방들은 이탈리아를 통해 공동안보의 부담을 덜고자 했고, 황제의 이탈리아에서 영향력 확보는 스페인 보유지를 상속할 수 있는 권리강화와 연결되어 있었다. 이탈리아, 스페인문제, 스페인 네덜란드, 헝가리 반란(1703) 등의 여러 문제에서 제국의 우선순위에 대해 영국과 네덜란드는 프랑스, 스페인과의 전쟁이 중심이므로 동맹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대내적으로 독일의 제후들 중의 일부는 이를 ‘오스트리아의 전쟁’으로 보고 전쟁 연루를 피했다. Wilson, 2004, p. 316.

181) 레오폴드 1세는 1660년대부터 적극적인 이탈리아 정책을 추진했고, 1696년 재봉토화를 추진했다. 제국추밀원을 통한 제국의 느슨한 권위 행사가 지속되었고, 나폴리, 투스카니, 밀란, 사보이 등 소 봉신국가들도 여전히 오스트리아를 보호자로 생각했다. 제국 이탈리아는 제국의 위계성과 특권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지역이었다.

182) 작센 아우구스투스 2세 선제후는 1697년 폴란드-리투아니아의 왕으로, 프리드리히 3세(1688-1713) 하노버 선제후 게오르크 루이스(1698-1727)은 1714년 영국의 왕으로 즉위했다. 이는 제국 내 신교 협의체(corpus evangelicorum)가 영향력을 갖는데 도움이 되었다. 작센 선제후는 폴란드 왕이 되기 위해 가톨릭으로 개종했지만 신교단체의 수장으로서 직책을 계속 보유했다.

새 황제로 선출된 요제프 1세도 스페인 왕위계승 전쟁 과정에서 제후들을 단합시키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1703년 헝가리 반란과 1707년 대 북방전쟁(The Great Northern War, 1700-1721)이 연관되면서 전쟁수행 역량이 분산되기도 했다.¹⁸³⁾ 하지만 황제의 권위를 통해 곧 합스부르크를 견제하는 행위자들을 통제할 수 있었다.¹⁸⁴⁾ 황제는 프랑스-바이에른 군을 격퇴하고, 프랑스에 협력한 바이에른, 콜로네 선제후에 대해 제국의회를 통해 추방령(Reichsacht)을 내려 정당성과 위계성을 보였다. 그리고 오스트리아만이 아닌 약소제후들의 이익과 안보보장을 중시했다.¹⁸⁵⁾ 남부, 중부독일의 중소 제후들이 형성한 노들링겐 연합을 두고선 긴장관계가 있었지만, 황제는 이들과도 외세로부터 제국을 보호하고, 제국제도를 지지하는 데서는 협력했다.¹⁸⁶⁾

이탈리아에서 벌어진 튀린 전쟁에선 오스트리아와 제국의 권위와 특권적 위치를 강화할 수 있었다. 사보이의 활약으로 제국군은 이탈리아의 스페인 보유지만이 아니라 나폴리, 시실리를 얻었고, 부르봉 편에 선 이탈리아 군주들의 토지도 몰수했다. 북부 이탈리아의 재봉건화와 제국추밀원의 권한 확대에 대해선 선제후들, 군주들도 지지했다.¹⁸⁷⁾ 이에 따라 요제프 황제 시기의 제국은 세력과 영토 확대에서 최전성기를 누렸다.

그러나 요제프의 사망으로 카를 6세(Karl VI, 재위: 1711-1740)가 제위에 올라 두 합스부르크 가문의 통합에 따른 보편군주정화 위험이 있었다.

183) 헝가리에서 라코츠키는 전시 분란 속 프랑스의 원조를 노리면서 반란을 일으켰다. 라코츠키는 트란실바니아의 독립과 국제적 지위인정을 요구했는데, 영국과 네덜란드는 당면한 전쟁에 집중하도록 헝가리와 황제의 중재를 시도했으나, 요제프는 비타협적인 모습을 보였다. 헝가리 의회는 1707년 공식적으로 요제프를 헝가리 왕에서 축출했다. 결국 요제프는 베스트팔렌 조약 이후 쉴레지엔에서 진행한 재가톨릭화 정책을 전복하고, 헝가리에서의 세습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헝가리를 헝가리 왕국의 법에 따라 지배하는 것을 허용했다.

184) Charles Ingrao, *In Quest and Crisis: Emperor Joseph I and the Habsburg Monarchy* (West Lafayette, 1979), pp. 39-40.

185) Wilson, 1998, pp. 125-126; Whaley, 2012b, p. 111.

186) Roger Wines, "The Imperial Circles, Princely Diplomacy and Imperial Reform 1681-1714," *The Journal of Modern History* Vol. 39 No.1 (1967), pp.13-29; Wilson, 1998, pp. 192-201. 노들링겐 연합은 안보적 방어목적이 컸고 강력한 군주들의 야심과 거리를 두었다. 연합은 초기엔 황제의 후견적 지위임을 표시했지만 '오스트리아 군주'에 대한 견제를 표현하면서 '제국'의 대의를 더욱 강조했다.

187) Whaley, 2012b, p. 112.

영국, 네덜란드는 평화를 위해 아메리카에서의 무역이익 보존을 목표로 프랑스와 협상에 참여했으나, 1차, 2차 평화협상을 거치면서 점차 대동맹진영의 이익이 분화되었다. 영국과 프랑스가 주도하여 전쟁을 종결한 위트레히트 조약(Treaty of Utrecht, 1713)은 “유럽의 세력균형”을 구축했다. 프랑스와 스페인 두 왕조의 결합을 저지하는 것이 핵심이었으며, 해외 제국으로 팽창하는 제국들의 식민지에 대한 이해관계와 세력균형을 타협했다.¹⁸⁸⁾

뒤이어 카를 6세는 프랑스와 라슈타트 조약(Treaty of Rastatt), 바덴 조약(Treaty of Baden)을 맺고 타협했는데, 이는 신성로마제국의 관습법적 구조 문제는 다루지 않았고, 참전한 제국 구성원들의 서열, 지위의 조정만 확인했다. 루이 14세는 바이에른 선제후의 지위회복과 영토보상을 요구하면서 카를 6세의 황제 지위를 인정하지 않으려 했다. 황제는 결국 바이에른과 콜로네 선제후의 복위를 허용해야 했고, 제국 내부 균형을 완전히 자신의 의사대로 조정하지 못했고, 다시 프랑스의 개입을 허용했다 황제는 참전한 행위자들에 대한 보상으로 아마데우스 2세 사보이 공작을 시실리 왕으로 격상시켰다. 프로이센은 유럽체제의 일원이자 프랑스, 스페인으로부터 왕의 지위를 인정받았다. 오스트리아는 나폴리, 밀란, 만투아, 롬바르디아, 스페인령 네덜란드 등을 얻었고 제국과 유럽에서 강대국 지위와 영향력을 계속 보존할 수 있었다. 하지만 독일 제후들에겐 라인지역 제국방벽을 만들지 못했다는 점에서 만족스럽지 못했다.¹⁸⁹⁾

188) 조약문은 “유럽의 세력균형”을 명시했고, “유럽의 안보와 자유는 프랑스와 스페인이 하나의 왕에 의해 통합되는 것을 용인하지 않는다.”고 기술했다. Treaty of Peace and Friendship between Great Britain and Spain, signed at Utrecht, 13 July 1713 Art. 2. in Clive Perry (ed.), *Consolidated Treaty Series*, Vol. 28 (N.Y.: Oceana Publications, 1969), p. 295. 사보이-스페인 간 조약 3조에서도 세력균형을 언급하고 있다. 필리프 5세가 스페인의 왕으로서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대신 프랑스 왕위를 물려받지 못하게 되었고(2조), 부르봉 왕조도 스페인의 왕위계승을 포기한다고 명시했다. Treaty of Peace between Savoy and Spain, signed at Utrecht, 13 July 1713 CTS, Vol. 28, p. 269. Dhondt, 2011, pp. 19-20; Randall Lesaffer, “The Peace of Utrecht: The European Balance of Power. A Comment from the Perspective of International law.” Paper for the conference in Utrecht titled ‘100 Years Peace Palace and 300 Years Peace of Utrecht’, 2013.

189) 제국은 브라이차흐, 프레이부르크, 케슬, 라인 동쪽 프랑스 요새들의 파괴를 확인했다. 또한 팔츠-뉘베르크 선제후에게 이양했던 북부 팔츠의 반환을 약속하였다. 노들링겐 연합은 전쟁에서 구성원들의 생존을 달성했다는 것 이외에 추가적인 이득을 얻지 못했다. 연합은 알자스와 메츠, 툴, 베르딩을 요구했고, 로레인은 프랑스-콩테 및 다른 영

대 북방전쟁에서도 제국제후들의 영토와 대외적 지위에 관한 야심이 부딪쳤으나, 황제와 제국영방들의 노력으로 북부의 세력균형을 회복할 수 있었다. 전쟁은 러시아가 반-스웨덴 동맹을 주도하고, 대외적 지위를 확대하려는 작센-폴란드, 브란덴부르크-프로이센, 하노버-영국, 덴마크가 가담하여 발트해에서 영토 확대를 모색하면서 발발했다. 스웨덴 왕 카를 12세는 작센-폴란드를 주적으로 보고 베스트팔렌 조약을 근거로 신성로마제국에 개입했다. 하노버, 프로이센 등은 제국 관습법적 구조와 그 보장자로서 스웨덴의 역할을 인정했고, 북독일 제국의 통합성을 유지하고자 노력했고, 주요 강국들의 갈등에 연루되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러시아의 표트르 대제가 카를 12세를 몰아내며 북독일과 발트해로 확장하자 네덜란드, 하노버-영국, 제국이 우려하게 되었고, 제국 차원에서 내부 질서유지를 위해 군사개입을 결정했다. 제국의 이익에 반해 외세와 협력한 메클렌부르크 공작에게 추방령을 내렸고, 황제는 평화조정자로서 역할을 수행했다.

전쟁의 결과, 발트 해에서 스웨덴 패권이 하락하고 제국정치 내 스웨덴의 영향력이 사라지게 되었다. 니스타드 조약(Treaty of Nystad, 1721)에서 스웨덴의 영토는 승전국들에게 양도되었는데, 발트해 동부 영토를 러시아에게, 프로이센에게는 포메른 남부를, 하노버-영국은 브레멘-베르덴이 양도되어 이들의 영토 확대의 계기가 되었다. 이후 러시아-프로이센은 동맹을 통해 폴란드 대내 문제에 개입하여 작센 베티나 가문의 세습화를 저지하는데 협력했다. 그리고 하노버와 브란덴부르크가 스웨덴과 작센의 약화로 인한 북부 제국의 정치적 영향력을 대신 이어받게 되었다. 물론 여전히 약소 세력으로서 제국의 신교진영과 황제를 지지하고 해양세력들의 지원을 통한 대외적 지위 인정과 역할 보존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결과적으로 연관된 두 개의 전쟁들을 통한 제국의 변화를 살펴보면, 첫째, 하노버-영국, 작센-폴란드, 브란덴부르크-프로이센 등 선제후들이 외부영토를 다스리는 왕이 되면서 황제와 이들 간 정치적 관계는 더 복잡해졌다. 군주-왕들은 지배 영지 내에서 왕가의 이익과 제국이익을 조화시키는

토들을 방어목적에서 요구했으나 제한적으로만 달성했다. 왜냐하면 프랑스도 역으로 제국방벽이 아닌 제국과 프랑스의 방벽이라고 강조하면서 주변국의 정당한 요구를 자국의 이익에 맞추어 정당성을 설파했기 때문이었다. Osiander, 1994, p. 144.

데 내부의 고민이 있었고, 황제 역시 이들의 주권확보 노력과 모험주의로 인해 제국정치를 관리하는 것이 어려워졌다. 반면 주요 제국영방들 간, 영토 간 세력격차가 심화되면서 제국 내 약소, 중견세력들은 지역동맹, 연합 등 비공식적인 안보역할을 유지하며 제 3세력으로 계속 성장하고자 했다.

둘째, 서유럽, 북유럽의 세력 균형과 영토조정을 통해서 제국 내부의 거버넌스엔 큰 변화가 없었다. 황제와 주요 선제후, 군주들을 매개로 유럽 지역문제에 제국이 연루되었고, 내부 상속, 계승분쟁도 국제화되어 외국의 개입으로 마무리되었다. 강한 제후국들은 외국 왕들과 실질적으로 대등한 교섭행위자였지만 여전히 유럽정치에 참여하기 위한 능력과 권한에도 한계가 있었고, 국제법적, 대외적 지위에서 주변국들과 완전히 동등한 수준의 주권을 인정받지는 못했다.¹⁹⁰⁾ 점차 제국영방들 간 지위, 서열 경쟁도 심화되면서 이들은 황제와 외국 군주들 사이의 갈등에 개입해 대내, 대외적 주권범위를 협상, 양보하는 게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5. 오스트리아의 제국, 유럽전략의 한계, 1713-1740

카를 6세 통치 시기 오스트리아 중심의 제국과 유럽전략의 실행은 역설적으로 오스트리아와 제국을 약화시켰다.¹⁹¹⁾ 황제는 제국 내 상속문제와 가문 간 분쟁을 제국추밀원과 같은 제국제도를 통해 해결하면서 관습법적 구조를 유지, 안정화하는데 기여하기도 했다.¹⁹²⁾ 그러나 광범위한 합스부르크 영토를 방어하고, 신성로마제국을 관리하는 문제, 그리고 유럽세력들에 대해 오스트리아의 긍정적 역할과 필요성을 계속 인식시키는 노력은 서로 긴장관계를 만들면서 더욱 어려워졌다.

190) Heinz Duchhardt, "International Relations, the Law of Nations, and the Germanies: Structures and Changes in the Second Half of the Seventeenth Century" in pp. 298-311. in Charles Ingrao, (ed.) *State and Society in Early Modern Austria* (West Lafayette: Purdue University Press, 1994)

191) Wilson, 1998, p. 204.

192) 황제는 제국추밀원을 통해 여러 제국도시들을 관리하고, 메클렌 부르크, 팔츠-하노버 분쟁 등을 해결했다. Leopold Auer, "The Role of the Imperial Aulic Council in the Constitutional Structure of the Holy Roman Empire", in Evans, Schaich and Wilson, 2011, pp. 72-73

황제는 합스부르크 세습영지의 보존과 제국의 통합성 유지를 목표로 했고, 이를 위해 국본조치(Pragmatic Sanction)를 대내외적으로 승인받는 것이 최우선이었다.¹⁹³⁾ 오스트리아는 튀르크 전쟁(1716-1718) 승리를 통해 네덜란드와 이탈리아 및 동부에서 영토를 확대하며 역대 최대 지역을 지배하게 되었지만 영국, 네덜란드를 포함한 주변국들의 의구심을 잠재우지 못했다.¹⁹⁴⁾ 이후의 대외정책은 세습영지에서의 권리와 이탈리아의 종주권을 수호하는 것이 핵심이 되었다.

하지만 1714년 이후 스페인이 위트레히트 체제에 도전하면서 오스트리아로부터 이탈리아를 회복하려 시도했다. 이에 영국, 프랑스, 신성로마제국, 네덜란드는 4국 동맹을 형성하여 스페인에 대응했고, 사보이의 참여로 전쟁을 벌였다(War of the Quadruple Alliance, 1718-1720). 황제는 이탈리아에서 스페인-오스트리아 갈등에 영국과 프랑스가 관여한 것을 국본조치의 국제적 승인의 기회로 삼았다. 헤이그 조약(1720)에서 스페인 필리프 5세는 이탈리아의 권리를 포기했으나, 오스트리아로부터 파르마 공작령을 자신의 아들인 카를에게 넘기게 했다. 카를 6세는 사보이로부터 시실리를 얻고, 사르디니아 왕국을 얻었다.

1720년대까지 주변국들은 오스트리아의 보편군주정화에 대한 우려했고, 프랑스의 플뢰리 추기경은 이탈리아에서 합스부르크를 약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했다. 제국 내 합스부르크 영향력 강화에 대한 우려로 영국-프랑스는 하노버 조약(1725)을 맺고 계속 협력을 유지해나갔다. 카를 6세는 스페인으로부터 상속권리를 철회하는 대신 국본조치를 승인받았다.

하지만 1730년대에 프랑스가 다시 영향력을 회복함에 따라 영국-프랑스 협력이 약화되었고, 영국은 프랑스 저지를 위해 다시 오스트리아를 지지하는 정책으로 돌아섰다. 영국은 오스트리아령 네덜란드에서 오스텐드 컴

193) 부르봉, 스페인-합스부르크의 계승 및 분할문제가 국제화된 것을 보고 황제도 왕조의 상속법보다 대외적 승인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했다. 1720년 오스트리아, 보헤미아 영방이 국본조치를 승인하고, 1721년 크로아티아, 1722년 헝가리 의회가 승인했다. 1724년 카를 6세는 제국 영토에도 국본조치를 공표했으나 바이에른, 작센 선제후는 거부했다. 1732년 제국의회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194) 1716-18년 오스트리아는 튀르크에 대한 전쟁 승리로 베오그라드, 바나트, 왈라키아 일부를 획득함에 따라 영국이 위협을 느끼게 되고 오스트리아-영국 관계가 악화되면서 다시 상대적으로 프랑스와 영국이 가까워졌다.

퍼니(Ostend Company) 이슈를 협의하고, 1731년 오스트리아와 다시 동맹을 체결하고 국본조치를 승인했다.

하지만 이후 황제의 대외정책은 역설적으로 제국정치를 소홀히 하게 되었고, 오스트리아의 자원을 고갈시키면서 1730년대 오스트리아와 제국의 약화를 두드러지게 했다. 폴란드 왕위계승전쟁(1733-38)에서 오스트리아는 국본조치를 승인받고 제국과 유럽에서 강대국 지위를 안정화하는 것이 목표였다. 폴란드 문제는 오스트리아, 러시아, 프랑스, 스페인의 지정학적 완충지였고, 라인지역과 이탈리아의 영향권 그리고 합스부르크의 제국 내 위치와도 연관되면서 유럽의 지정학적 구조를 뒤흔들 수 있었다. 프랑스는 계속 제국과 이탈리아에서 오스트리아의 성장을 저지하는 것이 목표였고 스페인, 사르디니아와 협력했으며, 오스트리아, 러시아는 폴란드에서의 현상유지를 위해 작센 후보자를 지원하면서 전쟁에 참여했다.

폴란드 왕위계승전쟁에서 제국은 영국의 도움을 받지 못한 채 프랑스와 다시 전쟁을 벌였으나 패배했다. 또한 바이에른 선제후도 프랑스와 비밀조약을 맺어 제후들의 지원을 저지하고, 프랑스와 대항하는데 소극적으로 참여했다. 카를 6세는 프랑스로부터 국본조치를 인정받았지만, 프랑스, 스페인에게 상당한 양보를 해야 했다.¹⁹⁵⁾ 빈 조약에서 폴란드 왕위는 작센 아우구스투스 3세에게 돌아간 대신 프랑스가 지지한 후보자에게 로렌 공작령을 넘겼고, 나폴리, 시실리를 스페인의 카를로스 대공에게 양도했다. 대신 프란츠 슈테판이 파르마, 투스카니를 얻고, 마리아의 남편으로서 차기 황제의 후보자의 지위를 확인받았다.

또한 오스트리아는 러시아에게 국본조치를 승인받는 대가로 러시아-튀르크 전쟁에도 참여했다. 하지만 튀르크의 방어로 1739년 프랑스의 중재하에 별 소득 없이 화의를 맺었다. 오스트리아는 일련의 전쟁을 통해 재정-군사적인 약점을 노출했고, 부채의 축적으로 거의 파산에 직면했고, 독일 제후들이 지원한 지원군에 지불조차 할 수 없었다. 또한 오스트리아 군대의

195) 이탈리아 종주권에 대한 스페인-오스트리아 갈등도 제국법, 봉건법 적용이 아닌 국제적 동의(convenience)가 기준이 되었다. Frederik Dhondt, "Legal discourse between integration and disintegration: the case of the peaceful succession struggles, 1713-1739." *European Traditions: Integration or Disintegration* (2013), pp. 159-174.

약점과 실패를 노출시켰고, 황제의 대외정책은 제국정치에서도 불안요소들을 만들어 냈다. 제국영방들은 오스트리아의 문제에 제국이 연루된다는 우려를 갖게 되었고, 제국전체의 이익이 도모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¹⁹⁶⁾

오스트리아와 제국의 이익 분화가 심화되던 중 카를 6세의 사망은 제국 내 균형에 변동을 가져왔고, 독일문제를 유럽 전면에 대두시켰다. 합스부르크 주도의 방어와 통치의 취약성이 두드러진 가운데 황제가 제국에서 바이에른, 브란덴부르크, 작센 등 야심적 선제후들을 관리하지 못한 점은 1740년대의 위기로 이어졌다. 또한 주변국들은 중부유럽에서 제국 내 세력 균형이 자국과 유럽체제의 평화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었다. 프랑스의 재부상과 오스트리아의 약화, 식민지에서의 스페인, 영국, 프랑스의 경쟁과 같은 유럽의 세력균형도 유동적이게 되면서, 제국에서 오스트리아와 독일 제후들에 대해 어느 정도 협력 또는 견제해야 하는지 문제는 유럽 세력균형과 연관된 문제로서 지속되었다.

6. 소결

베스트팔렌 조약을 통해 제국의 관습법적 구조의 내부 균형은 유럽 세력균형과 밀접하게 연관되었다. 18세기 중반까지 신성로마제국은 유럽의 세력균형체제 안에서 제국으로서 대내적 위계성을 회복할 수 있었다. 하지만 완전히 황제 주도의 제국-주권 확립으로도 이어지지 않았고, 제국 내 영토주권을 확보해나가는 구성원들이 성장하면서 협력과 갈등의 양상을 만들어냈다. 계속적으로 제국의 관습법적 구조 안에서 황제와 제국영방들 간 대내 균형을 유지하는 문제가 존속했다.

대내적으로 제국 중견, 약소세력들이 제국제도와 정치에서 권리, 이익을 보존하기 위해 제국의 틀을 강화하려 했고, 레오폴트 1세 합스부르크 황제의 리더십 회복은 이에 기여했다. 제국의 관습법적 구조를 연속적으로 보존하려는 조치들은 제국의 정체에 대한 이론적 논쟁과 양면전쟁에 대응하기 위한 실질적 방어개혁의 문제에서 비롯되었다. 제도개혁은 단순히 황

196) Aretin, 2011, p. 35.

제와 군주들 사이의 주권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제국의 위계성을 보완하면서 구성원들 간 변화하는 정치적 균형을 세부적으로 조정했다.

대외적으로 제국은 튀르크, 프랑스의 증대되는 위협에 대응하는 전통적 역할을 고수하며 자신의 제국적 정체성을 강조했다. 또한 패권으로 부상하는 루이 14세를 견제하면서 오스트리아는 기존 강대국으로서 영향력 보존을 원했고, 영국, 네덜란드와 함께 유럽 세력균형의 한 축을 담당했다. 하지만 유럽 세력균형의 조정에 참여하는 과정은 매끄럽지 않았고, 오스트리아와 독일제후들 사이 긴장관계와 통합되지 못한 취약성은 존속했다.

18세기 초까지 오스트리아의 이탈리아에 대한 제국적 종주권 및 범위가 확대되었고, 주요 선제후, 군주들은 대외전쟁에 참여하며 지위상승을 노렸다. 제국영방들 간의 경쟁은 황제와 외국세력 사이에서 대내외 주권범위를 협상, 양보하는 게임을 만들어냈다. 제국 내외 세력균형이 변동하는 과정에서 오스트리아가 영향력을 보존하기 위한 정치과정은 더 복잡해졌는데, 황제의 제국과 유럽전략의 한계는 지속적인 오스트리아와 제국의 회복, 강화를 어렵게 했다.

V. 제국 내 세력균형의 위기 2: 오스트리아-프로이센의 갈등, 1740-1763

18세기 중반 이후에도 중부유럽에서는 여전히 ‘국가들’ 간 갈등이 아닌, 위계적인 제국질서를 배경으로 황제와 여러 제후국 및 주변국들이 개입한 전쟁이 벌어졌다. 본 장은 1740년대 오스트리아 왕위계승 전쟁¹⁹⁷⁾부터 7년 전쟁이 종결되는 1763년까지 ‘제국’ 보존의 논리와 ‘국가’ 생존과 발전을 추구하는 논리가 신성로마제국 안에서 충돌하면서 만든 위기와 그 대응 과정을 살펴본다.

오스트리아의 약화를 틈타 성장한 브란덴부르크-프로이센의 부상은 제국에 이전과 질적으로 다른 충격을 가했다. 여러 야심적인 제후들의 경쟁으로 황제와 주요 선제후, 제후들, 약소세력들 간의 내부 세력균형의 문제는 더 복잡해졌다. 프리드리히 2세는 기존 제국질서의 규칙을 깨고, 제국 내 균형과 유럽 세력균형을 흔들었다. 오스트리아 황제가 제국 내에서 완전한 주권을 확립하지 못하고, 제후들이 단합하지 못한 상태로서 제국의 취약성은 제국정치와 유럽정치의 핵심 문제였다.

1740년대 이후에도 제국의 위계질서는 계속 보존되었다.¹⁹⁸⁾ 제권과 영토를 두고 벌어진 오스트리아 왕위계승 전쟁의 결과, 프로이센이 경쟁자들 속에서 부상하고 동시에 제국과 유럽의 세력균형의 회복을 위해 오스트리아를 생존할 수 있게 했다. 제국의 보호막 안에서 주요 영토들은 대내개혁을 진행했다.¹⁹⁹⁾ 제국영방들은 제국의 현상변경보다는 현상유지를 지지했

197) 주로 독일에서 1740-63년의 전쟁을 1-3차 ‘슐레지엔 전쟁’으로 부르거나 ‘오스트리아 계승 전쟁’, ‘7년 전쟁’으로 지칭한다. 프리드리히 2세는 “7년 전쟁사”를 따로 저술했다. 심즈는 오스트리아 왕위계승 전쟁(War of Austrian Succession)보다 ‘제권계승 전쟁(War of the Imperial Succession)’으로 지칭해야 한다고 본다. Simms, 2013, p. 97. 브라우닝은 슐레지엔이 갈등의 장이자 국가이성의 대상이었다는 점에서 ‘슐레지엔 전쟁’이 적절하다고 본다. Reed Browning, "New Views on the Silesian Wars." *The Journal of Military History* Vol. 69, No. 2 (2005), p. 527.

198) Whaley, 2012b, pp. 347-351.

199) ‘절대주의(absolutism)’는 제국수준이 아닌 독일 영토 안에서 진행되었고, 17세기부터 18세기 중후반부 계몽-절대주의의 등장 시기까지 장기적으로 나타난 변화였다. 독일영토들의 변화는 Wilson, 2004, pp. 364-377; Whaley, 2012b, 187-344.

고, 평화를 유지하고자 했다. 그러나 전쟁을 통해 나타난 오스트리아-프로이센 이중구도(German dualism)는 양자관계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제국의 위계질서를 재조직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외교혁명과 7년 전쟁은 오스트리아가 제국과 유럽 내 강대국 지위를 유지하고, 프로이센이 국가이성을 추구하면서 발생했다. 주변국들은 제국 내 세력균형의 보존이 유럽평화에 핵심이라는 합의 하에 개입하면서, 제국은 가까스로 전전상태를 회복했다.

1. 제국 내 세력균형 변동과 프로이센의 부상

1740년대 초 신성로마제국 내 균형이 흔들리게 된 것은 단순히 오스트리아의 약화와 브란덴부르크-프로이센의 예외적 부상(Rise of Prussia) 때문만은 아니었다.²⁰⁰⁾ 18세기 초부터 브란덴부르크, 작센, 하노버, 바이에른 선제후들의 경쟁은 제국정치를 불안정하게 했고, 베스트팔렌 조약 이후 제국 관습법적 구조는 이러한 경쟁을 촉진하면서도 제어하는 특징을 가졌다.

제국의 선제후이자 국가인 브란덴부르크-프로이센은 작센-폴란드, 하노버-영국과 북독일 지역에서 경쟁해왔다. 프리드리히 2세는 신성로마제국이 이상하고, 모호하고, 주권적이지도 제국적이지도 않고,²⁰¹⁾ 선제후, 약소군주들의 “상호 균형과 질투(reciprocal equilibrium and mutual envy)” 속에서 오스트리아의 전제주의, 팽창을 저지하기 위해 세력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라고 파악했다.²⁰²⁾ 이러한 제국에 대한 판단과 유럽정치에서 기회를 포착한 프리드리히 2세는 자국영토를 확대할 가능성을 포착했다.²⁰³⁾ 이

200) 브란덴부르크-프로이센의 부상조건에 대해선 Wilson, 2004, pp. 319-325. 프로이센의 대내, 대외정책에 대한 최근의 연구는 Philip G. Dwyer, *The rise of Prussia 1700-1830* (Routledge, 2014).

201) Christopher M. Clark, *Iron kingdom: the rise and downfall of Prussia, 1600-1947* (Harvard University Press, 2006), p. 243.

202) “왕, 선제후들, 군주들은 다양한 이익을 추구하며 분화된 채 각각 상호균형을 유지하고 있으나 오스트리아의 전제주의(despotism)에 종속될 위험이 있다”...“선제후들, 군주들이 통합하면 제국의 정부형태는 바꾸지 못하나, 황제의 야심을 충분히 저지할 수 있고 제국 내 군주들의 상호균형과 서로 간의 시기가 오스트리아의 팽창을 저지할 수 있다.” Frederick II, Thomas Holcroft trans. *Posthumous works of Frederic II. King of Prussia: History of My Own Times Vol. I* (1789), p. 50.

러한 원칙은 오스트리아, 영국, 프랑스가 실천해오던 강대국 권력정치의 방식과도 다른, 부상하는 약소국의 입장에서 실천하는 국가이성의 논리였다.

이는 주변 강대국들의 이익을 위해 약소국의 이익이 희생당하거나 무시당한 것에서도 비롯되었다.²⁰⁴⁾ 선제후는 제국 구성원으로서 인정받아야 할 권리가 훼손되었다는 점을 주장했다. 브란덴부르크 가문은 국본조치를 인정하는 대가로 베르그(Berg) 공국을 상속받도록 약속받았으나, 주변국들은 프로이센의 권리를 제대로 인정해주지 않았다.²⁰⁵⁾ 이러한 프리드리히의 인식과 함께 군사, 정치적 조건들은 여러 야심적 선제후-국가들 중에서 브란덴부르크-프로이센의 기회주의적 성장을 가능하게 했다.

2. 오스트리아 왕위계승전쟁: 영토와 제권을 둘러싼 갈등

프로이센의 슐레지엔 공격으로 촉발된 오스트리아 왕위계승전쟁은 영토를 넘어 제권을 둘러싼 전쟁이었다. 합스부르크 중심의 제국질서를 수정하려는 프랑스, 바이에른, 작센이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그에 비해 프리

203) Frederick II, 1789, pp. 79-80. 프랑스-영국 상호경쟁 상태, 오스트리아의 전쟁 자원 소진과 카를 6세 사망, 프로이센의 군사적 우위 등을 언급한다.

204) Volker Press, "Austria and the Rise of Brandenburg-Prussia." In *State and Society in Early Modern Austria*. Edited by Charles W. Ingrao, 2003, p. 306. 프리드리히 2세는 유럽 세력균형체제의 열강들의 각축 속에서 약소국의 부상이 가능하고, 강대국과 약소국 군주의 이해정책에 차이가 있음을 지적했다. 프리드리히 마이네케, 『국가권력의 이념사』 이광주 옮김. (한길사, 2010), pp. 484-487. 한편으로 강대국을 지향하는 군주는 속임수만 지속하는 소군주의 정책만 취해서도 안 되며, "강대국 군주는 프루덴스(prudence)와 가식(dissimulation), 영예의 추구(love of glory)가 깃들어 있고", 시공간, 대상 인물, 시점 등 상황변화에 따라 호전적이기도, 평화적이기도 한 전술적 변환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Political Testament of Frederick II (1752)", in C.A. Macartney, (ed.), *The Habsburg and Hohenzollern Dynasties in the Seventeenth and Eighteenth Centuries, in Documentary History of Western Civilization*. (New York, Evanston, and London: Harper & Row, 1970), p. 345.

205) Frederick II, 1789, p. 83. 요제프 1세 시기까지 합스부르크는 브란덴부르크-프로이센의 왕권을 인정하고 호헨졸레른 가문의 권력 고착화를 저지하려했지만 직접적 마찰은 없었다. 하지만 카를 6세가 프랑스 및 해양세력들과 올리히-베르그 계승에서 프로이센을 배제하여 프리드리히 빌헬름 1세는 배신감을 느꼈고 프랑스 쪽으로 기울어졌다. 1739년 4월 프랑스는 비밀조약에서 브란덴부르크의 베르그 공국의 소유권을 인정해주었고, 선제후는 오스트리아를 신뢰할 수 없고, 자신들의 지위를 축소시키려고 한다고 보았다. Ingrao, 2002, p. 152; Clark, 2006, pp. 190-191.

드리히 2세는 제한적 목표로서 슐레지엔을 두고 오스트리아와 협상하려는 의도가 있었다.²⁰⁶⁾ 하지만 오스트리아는 제국 내 자신의 지위와 국본조치의 정당성을 해치는 것으로 보고 ‘제국’의 관점에서 선제후의 도전을 대응하고자 했다.²⁰⁷⁾ 프랑스 및 주변 제후들의 지원을 받은 바이에른은 오스트리아를 약화시킬 기회로 보았고, 제권에 도전했다. 하노버-영국은 대외정책에 대한 내부 논쟁 끝에 중립을 선택했다.²⁰⁸⁾ 오스트리아를 지원하면 프로이센 또는 프랑스가 하노버를 공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조지 2세는 바이에른 선제후의 황제선출을 지원하고 하노버를 중립화하도록 했다.

이 시기 제권이 합스부르크에서 바이에른의 비텔스바흐 가문으로 넘어간 것은 제국의 관습법적 구조 상 중대한 변화를 가져왔다.²⁰⁹⁾ 바이에른은 합스부르크 가문이 보유했던 제국제도나 제국영방들과 구축해 온 후견 네트워크가 없었고, 정치적, 군사적 자원의 부족으로 제국 내에서 완전한 리더십을 구축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황제 카를 7세(Karl VII, 재위 1742-1745)가 프랑스에 정치, 군사적 의존을 확대하고, 성직영방들을 세속화하려는 조치 등은 제국정치의 약화를 가속화했다.

206) 프리드리히 2세는 작센을 견제하려는 전략적, 군사적 목표로 슐레지엔을 노렸는데, 점령이 성공하면 오스트리아와 협상을 통해 구매할 의사를 갖고 있었고, 이를 위한 외교적 노력들을 경주했다. Frederick II, “Notes to Himself on the Invasion of Silesia (1740)”, p. 2.

http://germanhistorydocs.ghi-dc.org/sub_document.cfm?document_id=3547 (검색일: 2016년 4월 4일). 프리드리히는 슐레지엔에 대한 양보대가로 심지어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러시아와 해양세력의 동맹도 제안했고, 합스부르크 가문을 지원하고 유지할 것임을 약속하면서 회유했다. Michael Anderson, *The War of Austrian Succession, 1740-1748* (London, 1995), pp. 69-70.

207) 마리아와 몇몇 수상들은 국본조치에 대한 위배와 더불어 슐레지엔 일부 영토를 양보하여 프리드리히 2세가 곧 전체를 요구하게 될 것을 우려했다. “Maria Theresa’s Political Testament 1749-50”, p. 3. http://germanhistorydocs.ghi-dc.org/sub_document.cfm?document_id=3533 (검색일: 2016년 4월 4일).

208) 영국의 정책결정에서 프로이센 부상으로 인한 위협인식이 실제적이었다고 보는 견해는 Jeremy Black, “Hanoverian Nexus: Walpole and the Electorate.” in Brendan Simms and Torsten Rott (eds.), *The Hanoverian Dimension in British History: 1714-1837*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7), p. 23. 월폴이 하노버 선제후령에 부정적 태도를 가졌다는 견해와 달리, 하딩은 양자 관계를 일인군주연합(Personal Union)으로 간주해 온 월폴이 1720년대 이후 영국의 대외정책을 주도하며 하노버에 동정적이게 되었다고 한다. Nick Harding, *Hanover and the British Empire, 1700-1837* (Boydell & Brewer, 2007). p. 77, p. 199.

209) Whaley, 2012b, p. 317. pp. 373-375; Wilson, 2004, p. 327.

오스트리아는 제국 내에서 입지가 축소되었지만 헝가리와 동맹세력 등의 지원을 얻어 다시 회복할 수 있었다. 프리드리히 2세는 제국에서 작센, 바이에른, 프랑스의 영향력 확대를 우려했고, 더 이상의 연루를 피하기 위해 오스트리아의 프랑스 견제 역할을 인정하면서 동맹을 버리고 오스트리아와 타협했다.²¹⁰⁾ 프로이센은 오스트리아와 별도의 예비강화조약(브레슬라우 조약, 1742)과 베를린 평화조약(1742)을 맺어 슐레지엔 북서부의 양도를 확정했다. 영국은 제국 내 세력균형, 오스트리아 중심 국본조치를 유지하고 하노버 안보와 프랑스 견제를 위해 국본조치군(pragmatic army)을 형성하여 적극적으로 개입했다. 국본조치군은 “독일과 유럽의 균형회복”을 위해 오스트리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중부유럽에서 프랑스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고자 했다.

즉, 오스트리아의 동맹들과 적들이 오스트리아를 다시 지지하게 된 계기는 취약성과 동시에 전략적 중요성 때문이었다. 당시 영국의 팜플렛 저자는 이를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독일정치의 특수한 행운(a felicity peculiar to German Politicks)으로 인해, 그들의 덜 강력한 주변국들[영국]은 자신의 편을 위해 싸우면서 동시에 그들을[군주들]을 위해서도 싸우기 위해 돈을 지불했다.”²¹¹⁾

18세기 초까지 동맹국인 영국은 대내 상황으로 인한 부담에도 불구하고 제국과 유럽 세력균형에서 오스트리아의 역할을 인정하여 오스트리아가 생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다. 비판자들은 영국이 대륙세력에 대한 보조금 정책으로 유럽 세력균형보다 “독일 세력균형”에 더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국부고갈과 과세부담, 공공부채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

210) 프리드리히는 바이에른, 작센의 팽창, 프랑스의 영향력 확대를 더 우려했고, 클라인-슈넬렌도르프 조약(Klein-Schnellendorf Treaty, 1741)을 맺고 전쟁에서 일시적으로 후퇴했다. 그는 독일 내 프랑스의 영향력이 너무 커지기를 막고, 마리아에게 숨 쉴 공간을 주어 프랑스 견제를 위해 합스부르크 세력을 살려둘 필요가 있었다고 회고했다. Frederick II, 1789, pp. 93-94.

211) *German Politicks, Or, the Modern System Examined and Refuted* (London: Printed for Jacob Robinson, in Ludgate-Street. 1744), pp. 6-7. p. 27.

다.²¹²⁾ 이런 어려움에도 영국의 정책결정자들은 신성로마제국의 분열 상황에서 프랑스가 영향력을 확대하지 못하게 제국의 균형을 회복하는 것이 “유럽의 균형을 안정적으로 달성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오스트리아를 중심의 제국질서 유지가 계속 중요하다고 평가되었다.²¹³⁾

하지만 프로이센이 1744년 프랑크푸르크 동맹으로 보헤미아를 공격하며 전쟁을 재개했다.²¹⁴⁾ 그 배경은 국본조치군 개입에 대한 불만, 러시아 군사개입 우려, 작센과 사르디니아, 오스트리아의 협력으로 인한 안보불안이었다.²¹⁵⁾ 프리드리히 2세는 전쟁선언문에서 제국의 평화와 질서를 다시 회복하려는 것임을 정당화했고, 이는 대외적 명성과 군주들의 협조를 얻어 제국의 규범을 따르는 모습을 보여주려는 정치적 목적 때문이었다.²¹⁶⁾ 하지만 프리드리히 2세가 다른 신교세력들과 제국에 대한 관점을 공유하지 않았고, 신교세력 리더십을 주장하는 작센, 하노버와 경쟁관계에 있어 이들의 지원을 얻기는 힘들었다.²¹⁷⁾ 1745년 마리아는 프로이센에 맞서려 영국, 작센, 네덜란드와 동맹조약을 맺고 “독일의 평화(pacification of Germany)”를 지지한다면서 대응했다.²¹⁸⁾

212) “오스트리아는 야심적인 주변국들의 접근으로부터 독일의 약소 군주들의 지배영역을 유지, 보존해왔으며...프랑스는 야심, 권력욕, 열망으로 주변국의 평화를 위협해왔고, 이에 따라 여러 세력들은 오스트리아와 제국과 협력하도록 하였고, 유럽 내의 주요 세력들의 중요한 문제로서 전반적인 제국에서도 이 가문의 세력을 지지, 유지하는 것이 관심이 되었다.” *A letter to a certain Foreign Minister* (London: printed for M. Cooper, 1745), p. 13.

213) “오스트리아는 야심적인 주변국들의 접근으로부터 독일의 약소 군주들의 지배영역을 유지, 보존해왔으며...프랑스는 야심, 권력욕, 열망으로 주변국의 평화를 위협해왔고, 이에 따라 여러 세력들은 오스트리아와 제국과 협력하도록 하였고, 유럽 내의 주요 세력들의 중요한 문제로서 전반적인 제국에서도 이 가문의 세력을 지지, 유지하는 것이 관심이 되었다.” *A letter to a certain Foreign Minister* (London: printed for M. Cooper, 1745), p. 13.

214) 프랑크푸르트 동맹은 1. 카를 7세, 브란덴부르크-프로이센, 헤센-카셀 및 팔츠 간의 동맹조약, 2. 바이에른-브란덴부르크-프로이센 간 조약, 3. 프랑스-브란덴부르크-프로이센의 공격동맹 조약이었다. 첫 번째 조약은 국본조치 이전의 장자상속법 보장과 독일제국의 평화복원이 주요 내용이었다. 프랑스는 라인동맹(1658)의 선례를 따라 비밀조약으로 동맹에 참여했고, 프리드리히는 보헤미아 공격과 슐레지엔 인접영역을 약속했다.

215) Anderson, 1995, p. 129.

216) Wilson, 2008, pp. 348-349.

217) 신교세력들은 법적으로 규정된 기독교 교파들의 공존체계를 수호하는 혼합 군주정으로 인식했고, 제국개혁을 옹호하면서 ‘독일의 자유(German liberty)’를 보호하는 법, 제도적 안전망 강화에 관심이 있었다. 하지만 프리드리히 2세의 제국 내 행위는 이와 같은 제국의 제도에 위협적인 측면이 있었다. Clark, 2006, pp. 217-29.

제권을 둘러싼 갈등은 카를 7세가 사망하고 뤼벤 조약(1745)에서 바이에른-오스트리아가 타협하면서 마무리되었다. 프로이센은 베를린, 드레스덴 조약(1745)에서 프란츠 1세를 새 황제로 인정하고, 오스트리아로부터 슐레지엔 영토 획득을 확정하고 타협했다.²¹⁹⁾ 오스트리아는 슐레지엔 상실을 대체하려 이탈리아 지역에서 보상을 노렸고, 영국의 원조를 요청해 이탈리아, 저지대 지역에서 전쟁을 지속했다. 하지만 영국은 하노버 방어, 프랑스 약화, 유럽의 세력균형 보존을 목표로 달성하는데 동맹국인 오스트리아의 이익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

엑스-라-샤펠 조약(Treaty of Aix-la-Chapelle, 1748)은 영국, 프랑스가 협상을 주도했고, 이탈리아, 저지대 그리고 중부유럽의 세력균형에 대해 타협했다.²²⁰⁾ 조약은 신성로마제국 문제에 대해선 거의 다루지 않았고, 제국 내 안정적인 대내 균형을 만들지 못했다. 오스트리아는 조약과 주변국들에 대해 불만족했고, 강한 제후들을 견제해왔던 중견, 약소 제후들이 약화되면서 위협에 노출되었다. 또한 개별 제국영방들 간 갈등관계가 심화되었다. 전쟁으로 선제후들 간 영향력이 변화했는데 바이에른은 몰락했고, 작센과 하노버도 전쟁 기여에도 불구하고 안정된 안보를 확보하지 못했다. 이러한 고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스트리아, 프로이센은 내부 개혁을 진행하고, 제국과 외부의 지원세력들을 찾으려 대외정책의 방향을 수정했다.

218) Whaley, 2012b, p. 356.

219) 오스트리아와 브란덴부르크-프로이센은 합스부르크의 소유지를 제외하고 양국의 영토를 상호보장하기로 합의했다. 작센은 별도조항에서 영토를 반환받았으나 백만 크라운의 배상금을 지불해야 했다. 슐레지엔에 대한 영유권 일체를 포기하고 프로이센에게 오데르 강 세관을 포함하여 뤼르스텐베르크와 쉴도를 양도하고, 자국 내 신교도들에게 베스트팔렌 조약에서 합의한 종교적 관용을 약속했다.

220) 프랑스는 오스트리아령 네덜란드를 오스트리아에 반환하고, 네덜란드는 배리어 요새들을 반환했다(6조). 영국은 이전의 왕위계승과 선제후로서의 제국 내 보유지를 인정받았다(19, 20조). 오스트리아는 슐레지엔 상실을 대신하여 합스부르크 영토의 보존과 국본 조치의 승인, 프란츠의 황제 인정, 투스카니의 소유권을 확인받았다(21조) 하지만 파르마, 피아첸차, 구아스탈라 공국을 카를로스 3세 스페인 국왕에게 양도했고, 카를로스 3세는 이를 다시 그의 동생 펠리페에게 양도했다(5조). 그리고 밀란을 사르디니아 국왕 카를 엠마누엘 3세 사보이 공작에게 할양해야 했다(7조). 프로이센은 국제적으로 슐레지엔과 글라츠의 영토병합을 승인받을 수 있었다(22조). *The definitive treaty of peace and friendship between His Britannick Majesty, the Most Christian King, and the States General of the United Provinces : concluded at Aix la Chapelle the 18th day of October N.S. 1748* (London: Printed by Edward Owen in Warwick-Lane, 1749)

3. 오스트리아, 프로이센의 대내개혁과 외교혁명, 1748-1756

전쟁은 제국의 대내 균형을 완전히 바꾸었다. 프로이센은 새롭게 획득한 쉘레지엔을 수호하고 안보를 위해, 오스트리아 전후 군주정의 생존과 제국 내 전통적 지위 회복, 쉘레지엔 재탈환을 위해 내부 개혁과 대외정책 노선을 수정했다.

오스트리아의 가장 큰 취약점은 방대한 영토를 중앙집권적 체계가 없이 통치해야 했고, 전쟁자원 및 재정확보에서 제국과 해양세력 등의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것이었다.²²¹⁾ 오스트리아는 동맹국에 연루되거나 의존하지 않는 자체적 힘과 대외적 자율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깨닫고, 이를 보완할 방안을 모색했다.

황제는 프랑스 대항과 제국의 통합성을 위해 프리드리히 2세와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지만, 마리아는 프리드리히 2세를 합스부르크 영지 전체에 대한 영토야심을 가진 ‘적’ 또는 반항적 제후로서 인식했고, 복수를 최우선 순위에 두었다.²²²⁾ 이를 위해 1차 테레시안 개혁(1749-56)에서 재상 하우비츠를 중심으로 군사, 관료적 효율성 증대를 위한 포괄적 개혁을 시행했다.²²³⁾ 개혁의 핵심은 정치, 재정능력의 중앙집권화와 사법영역의 분리였다.²²⁴⁾ 마리아는 이전 합스부르크 지배자들이 행한 가톨릭교회와 귀족 주도의 지역영방들에 대한 과도한 양보를 문제로서 지적하고, 새로운 관료 세력들을 중심으로 한 개혁을 옹호했다.²²⁵⁾

221) 오스트리아가 전쟁의 종결 이전부터 대내개혁을 시행한 것은 제국의 원조 없이 향후의 전쟁을 수행해야 하는 능력의 한계 때문이었다. 또한 영국의 전통적 동맹의 지원이 미약했고, 제국제후들이 프로이센을 지지하거나 제국에 대항할 경우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중립화는 하나의 대안이었다. Peter H. Wilson, "The Empire, Austria, and Prussia." in Peter H. Wilson, (ed.), *A companion to eighteenth-century Europe* (John Wiley & Sons, 2009), pp. 260-275.

222) Whaley, 2012b, pp. 381. 마리아는 프로이센과 투르크를 같은 ‘적’의 위치에 나열하고 있다. "Maria Theresa's Political Testament (1749-50)" pp.13-14.

223) Ingrao, 2002, pp. 159-166; Michael Hochedlinger, *Austria's Wars of Emergence: War, State and Society in the Habsburg Monarchy, 1683-1797* (Pearson Education, 2003), pp. 267-71.

224) Hamish M. Scott, "Reform in the Habsburg Monarchy, 1740-90," in Hamish M. Scott (ed.), *Enlightened Absolutism: Reform and Reformers in Later Eighteenth Century Europe* (London: Macmillan, 1990), pp. 149-155.

프리드리히 2세는 쉘레지엔 영토를 고수하고 안보를 확보하려는 방어적인 입장이었고, 주변국들을 잠재적인 적으로 평가했다. 1752년 작센, 폴란드령 프로이센, 스웨덴령 포메라니아 등 프로이센의 “팽창(aggrandizement)”을 위한 조건과 수단을 고려하기도 했다.²²⁶⁾ 하지만 자신의 적들과 전쟁재개는 성급하다고 보았는데, 동맹인 프랑스 등은 준비가 덜 된 상태였고, 쉘레지엔 정복으로 프로이센에 대한 유럽의 “시기(envy)”와 경계가 팽배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상황을 더 주시할 필요가 있었다.²²⁷⁾ 따라서 우선 대내 통제력을 확보한 주권자의 내치와 외교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강화하려 했다.²²⁸⁾ 그리고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이후 유럽의 강대국 중의 하나로 발돋움 하는 것을 조심스런 목표로 제시하면서, 일시적 안정화 기간을 틈타 자국의 사법, 입법, 상업 등 부문에서 개혁을 감행했다.²²⁹⁾

또한 1748년 이후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은 제국의 관습법적 구조를 활용하는데 있어서도 경쟁했다. 양자는 여러 구성원들에게 지지를 얻고, 행위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황제는 제국의 위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국도시, 제국교회, 제국기사 등과 관계회복을 지향했다. 군주들은 기사단의 폐지를 요구했는데, 기사 협의체는 전통적 합스부르크 후견체제를 유지하는 역할로서 계속 중요했기 때문에 황제는 이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²³⁰⁾ 프로이센은 이러한 오스트리아의 제국정책을 견제하고,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과 지원세력을 확보하려고 했다. 1750년대엔 제국에서 종교불만과 약소군주들의 정치적 권리 조정문제에서 신, 구교 갈등이 확산되었다.²³¹⁾ 제후들은 종교문제를 해결하는데 제국제도를 우회하고 신교 협의

225) “Maria Theresa’s Political Testament (1749-50)” pp. 97-132.

226) Frederick II, 1752, p. 340-343.

227) Frederick II, 1752, p. 336.

228) Frederick II, 1752, p. 333.

229) 이를 위해선 “훌륭한 군주, 군대의 규율, 경제조정과 전쟁수행을 위한 자금, 프루덴스(prudence), 분명한 목표” 등을 확보한 국가가 되어야 했다. Frederick II, 1752, p. 344.

230) Johann Stephan Pütter, *An Historical Development of the Present Political Constitution of the Germanic Empire*. Vol. 2. (T. Payne and son, 1790). Book XIII, chap. 1. p. 74.

231) 프로이센의 제국정치에 대한 참여는 Peter H. Wilson, “Prussia’s Relations with the Holy Roman Empire, 1740-1786.” *Historical Journal* (2008), p. 344.

체(Corpus Evangelicorum)에 문제를 전가했고, 프로이센은 이를 통해 리더십을 확보하려고 했다.

한편 주변 강국들이 제국 내 중소군주들에게 후견지위를 제공한 것은 오히려 제국에서 안정적인 제 3세력을 형성하지 못하게 했다. 특히 작센 폴란드는 중요 완충지대였고, 계승문제에 대해 영국, 프랑스, 러시아, 오스트리아가 계속 주시해왔다. 작센은 강국들의 외교적 지원을 얻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외정책을 통해 안보를 보장하는데 실패했다. 작센은 프로이센의 주적인 오스트리아와 러시아에게 공격루트를 제공할 수 있어 프로이센의 잠재적 정복 대상으로서 계속 위협받는 상태에 있었다.

프로이센, 오스트리아의 갈등이 고조되던 중 1756년 외교혁명은 제국 내외 행위자들 사이에 1748년에 합의한 세력균형을 유지 또는 변경할 것인지, 제국의 최종상태(end-state)에 대한 이해관계의 차이에서 발생했다.²³²⁾ 특히 황제 선거계획 실패는 제국정책에 대한 영국과 오스트리아의 입장 차이를 드러냈다.²³³⁾ 피트는 “신성로마제국의 개입이 영국의 정책에 유용하다”고 판단하고 선거계획을 시도했고, 영국의 이익이 유럽의 세력균형 지탱에 있으며, “네덜란드, 독일제국의 국가들”의 동맹과 “제국의 법”, “독

232) 외교혁명의 계기와 범위에 대해선 프랑스-오스트리아 접근(rapprochement), 오스트리아-영국 동맹 이익 차이, 프로이센 성장으로 동반된 제국 내외 세력균형 변화에 대한 주변국들의 인식과 전략적 우선순위의 차이 등이 제시되었다. William J. McGill, "The roots of policy: Kaunitz in Vienna and Versailles, 1749-1753." *The Journal of Modern History* Vol. 43, No. 2 (1971), pp. 228-244; Ingraio, 2000, p. 173; Jeremy Black, "Essay and Reflection: On the 'Old System' and the 'Diplomatic Revolution' of the Eighteenth Century." *The International History Review* Vol. 12, No. 2 (1990), pp. 301-323; Karl W. Schweizer, "Lord Bute, Newcastle, Prussia and the Hague Overtures: A Re-Examination," *Albion: Quarterly Journal Concerned with British Studies*, Vol. 9, No. 1, (1977), pp. 72-97. 하지만 프랑스-오스트리아 동맹 형성에서도 전통적인 불신구도가 존속하고 있었다. Kirsten L. Cooper, *A Rivalry Ended? France and Austria during the Diplomatic Revolution and Seven Years War 1756-1758*, Ph. D. Dissertation, Emory University, 2012.

233) 뉴캐슬은 신성로마제국의 법, 제도적 체계에서 선출문제의 복잡성과 프랑스의 제국 내의 잔여적인 역할을 간과했고, 오스트리아에 대한 이해도 부족했다. 이러한 동맹 간의 이해 및 협의의 한계는 역설적으로 구체제 와해에 기여하게 되었다. D. B. Horn, "The Origins of the Proposed Election of a King of the Romans, 1748-50," *English Historical Review* (1927), pp. 361-370; Reed Browning, "The duke of Newcastle and the imperial election plan, 1749-1754," *Journal of British Studies* Vol. 7, No. 1 (1967), pp. 28-47.

일정체의 활력 회복(restore the vigour of the Germanic body)”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²³⁴⁾ 반면 선거계획에 소극적인 오스트리아는 제권을 안정화하여 정치적 입지를 공고화하는 것보다 군주정의 안보를 더 우선시했다.

오스트리아, 러시아는 프로이센을 약화시켜 제국 내에서 현상변경을 노렸다는 점에서 이익이 일치했다. 프랑스는 프로이센을 약화시키는 것보다 영국을 저지하고자 했고, 전략적으로 취약한 하노버를 공격하려했다. 이에 쉘레지엔 보유와 안보 확보를 추구한 프로이센과 하노버의 안보를 우려하여 제국의 현상유지를 지향한 영국의 이해가 부합했다.

웨스트민스터 조약²³⁵⁾과 베르사유 조약²³⁶⁾을 통한 동맹 전환은 프랑스와 신성로마제국의 전통적 적수관계(rivalry)와 제국정책을 바꿨다는 점에서 “혁명적”이었다. 외교구도에서 합스부르크와 프랑스의 대결 속에 영국, 네덜란드, 오스트리아가 협력해 온 구체제(Old System)가 무너지고, 신

234) Simms and Riotte, 2007, p. 36.

235) 조약은 “유럽과 독일의 전반적 평화를 보존”하고 외국의 독일공격에 대항해 협력할 것을 명시하여 영국은 프랑스, 프로이센으로부터 하노버 안보를, 프로이센은 러시아로부터 안보를 보장했다. 1조는 상호 우호와 불가침을 확인하고, 2조에서 외국이 독일을 공격할 경우, ‘독일의 안정(tranquility of Germany)’을 위해 협력함을 확인했다. 비밀 조약에서 독일에 대한 중립조항을 확인했다. The Anglo-Prussian Treaty of Westminster, in C. Parry (ed.), The Consolidated Treaty Series (New York, 1969), XL, pp. 297-298.

236) Convention of neutrality signed between Her Majesty th Empress-Queen of Hungary and Bohemia and His very Christian Majesty. 웨스트민스터 조약을 따라 아메리카에서의 영국-프랑스 간의 갈등에서 오스트리아, 독일의 중립을 확인했다. 프랑스는 영국과의 사적인 갈등에 어떤 세력도 연루되길 원치 않으며, 저지대 지역 및 오스트리아에 개입하지 않기로 했다. Treaty of defensive union and friendship signed between Her Majesty the Empress-Queen of Hungary and Bohemia and His very Christian Majesty. 다른 하나는 상호 방어동맹으로서 베스트팔렌 조약을 확인하고(2조), 유럽 내 상호영토보유와 국본조치를 확인했다(3-4조) 오스트리아는 식민지 전쟁에서 중립을 유지하고, 프랑스가 대륙세력에 의해 공격 받을 때만 원조의 의무가 있었다. 프랑스는 유럽 내 오스트리아에 대한 공격에 원조할 의무가 있었다. 양자는 서로 24000명의 병력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6조) 이 점에서 비대칭적 동맹의 성격을 가졌는데 이는 합스부르크가 네덜란드를 프랑스에게 위임하고, 프로이센에 집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Appendix II. Treaty of Conventions of May 1, 1756 in François-Joachim de Pierre de Bernis, *Memoirs and Letters of Cardinal de Bernis*, Katharine Prescott Wormeley trans. (New York : Collier 1901), pp. 321-333. 베르니는 베스트팔렌 조약의 토대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수정하여, “유럽평형”의 토대를 놓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래서 리슐리외의 의지를 받아, 프랑스의 정책원칙을 깨지 않고 프로이센을 오스트리아로 대체했다고 평했다. Bernis, 1901, p. 233.

성로마제국은 전통적인 공동의 적(프랑스)을 상실하여 제국 전체 단합의 토대가 약화되었다. 프랑스는 베스트팔렌 조약의 보장자로서, 영국은 해외 식민지 갈등에서 제국을 중립화하려는 이해관계가 있었지만 오스트리아-프로이센 갈등을 제어하지 못했다. 이제 제국이익과 오스트리아, 프로이센의 이익은 명확히 구분되었고, 제국 구성원들도 양자를 구분된 정치단위로 인식했다.

4. 7년 전쟁(1756-1763)

7년 전쟁은 오스트리아 왕위계승전쟁의 연장선상에서 발생했고, 프로이센의 방어적 동기에서 나온 예방적 선제공격(preemptive)과 오스트리아가 이전의 제국질서와 쉘레지엔을 회복하려 한 공세전략이 부딪쳤다.²³⁷⁾ 프랑스, 영국은 외교혁명을 통해 제국의 갈등과 유럽갈등을 분리하고, 제국의 현상유지를 고려했지만 독일세력의 갈등을 저지하는데 실패했다. 유럽과 식민지 및 여러 유럽세력들을 포함한 “지구적” 전쟁은 중부유럽에선 신성로마제국의 “내전”이었다.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의 상호적대는 바로 무력충돌로 이어지진 않았고, 식민지에서 영국-프랑스 간 경쟁심화와 전쟁발발이 동맹전환의 촉매제가 되었다. 또한 오스트리아, 프랑스가 전쟁수행 능력과 개전의 정당한 근거를 갖추는데 시간이 필요했다.²³⁸⁾ 베스트팔렌 조약 보장자인 프랑스는 먼저 제국평화의 파괴자가 되려고 하지 않았고, 오스트리아도 독일 제후들의 지원을 얻기 위해 먼저 공세적인 모습을 보이려 하지 않았다. 프리드리히 2세가 작센, 오스트리아, 러시아로부터 임박한 공격위험을 느끼고 작센에 대해 선제공격하면서 전쟁이 발발했다. 이는 반-프로이센 동맹을 만들고 제국의 주요 군주, 약소세력들은 프로이센이 제국질서와 법, 원칙을 깨면서 주변 영토들을 공격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부당한 행위로 평가했다.

237) Scott, 2014; Dwyer, 2014, p. 16. 칸은 7년 전쟁이 합스부르크의 일관된, 진지한 목표에 따라 수행되었고, 프리드리히 2세를 “제국의 군주로서 의무를 저버린 이단적 세력”으로 보아 이데올로기적 갈등의 측면이 있었다고 본다. Kann, 1974, p. 159

238) 베르니는 작센, 보헤미아의 방어능력 우려했고, 프랑스, 신성로마제국, 스웨덴, 오스트리아가 재정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한 개입이 진행되었다고 회고했다. Bernis, 1901, pp. 238-239.

제국추밀원이 공적평화 위배로 프리드리히 2세에 대한 추방령을 내리는 것에 대해 제국의회의 선제후, 군주, 기사협의회에서 신, 구교 진영이 대립했다.²³⁹⁾ 양 진영의 프로파간다는 모두 제국질서와 공적평화를 회복해야 하고, 제국을 분열시키는 시도를 저지하는 데 무력사용이 정당하다는 것이었다.²⁴⁰⁾ 프리드리히 2세는 “황제와 제국영방들의 세력균형 유지”와 교파적 균형유지를 위해 신교세력들의 합스부르크 견제가 필요하다고 선전했다.²⁴¹⁾ 그리고 북독일 세력을 결집하여 하노버 보호를 외치며 오스트리아에 대항했다. 하지만 황제가 제국의회를 통해 4만 명의 제국군을 구성하는데 성공했고, 주로 제국의 남서부 군주들이 참전했다.²⁴²⁾ 프랑스, 스웨덴은 제국 관습법적 구조를 지탱하는 베스트팔렌 조약의 보장자 자격으로 개입을 정당화했다. 이러한 선전전에도 불구하고, 다수 중소 제후들은 작센을 구원하는 것 이외에 강대국 갈등에 연루되기를 원하지 않았다. 즉, 제국 내외 어느 세력들도 제국 내 균형과 중부유럽의 평형을 해치는 것을 원치 않았다.

프로이센은 초반 작센을 점령한 뒤 지리, 군사적 유리함과 영국의 지원으로 우세했으나, 오스트리아, 프랑스, 러시아는 전쟁목표와 이해관계의 차이로 프로이센 전면격퇴에 어려움을 겪었다. 오스트리아는 술레지엔 탈환을, 러시아는 동 발트 해에서 영토팽창을, 프랑스는 주적인 영국을 격퇴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프로이센의 위협수준에 대한 평가도 차이가 있었고, 삼국 간 상대적 세력 확대에 대한 불신, 전비부담 문제에서 마찰이 있었

239) Pütter, 1790, Book XII. Chap. III. pp. 112-113. 하노버와 브란덴부르크 선제후, 26명의 신교영방들이 프로이센을 지지했으나, 60명의 신교영방들을 포함하여 다수가 오스트리아를 지지했다. 헤센-카셀 방백은 영국과 프로이센의 위협에 굴복했다. Szabo, 2013, p. 84.

240) Ingrao, 2003, p. 174.

241) 7년 전쟁동안 교파적 양극화로 인한 정치선전의 대결구도가 가장 첨예했다. 프리드리히 2세의 반-오스트리아 신교결집과 함께 프란츠 1세 황제도 가톨릭 군주들의 연대를 촉구하여 교파적 양극화에 기여했다. 하노버 선제후와 신교 협의체는 작센과 중재를 제안하고 신교인 브란덴부르크를 지원하려고 했지만 실패했다. Wilson, 2008, p. 351.

242) 제국공법학자 푸터는 “제국의회가 제국추밀원과 협력하여 공적평화와 관련된 법을 시행했다는 것이 중요한 사항”이었음을 강조했다. Pütter, 1790, Book XII. Chap. III. pp. 91-92. 제국의회는 제국제도에서 프리드리히 2세를 축출하고, 영토 밖의 우편교환과 이동, 전시물품의 엠바고 등을 결정했다. 영국-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프랑스 진영에 참여한 제국 군주들과 병력 수에 대해선 Wilson, 1998, p. 267 참조. 오스트리아 주 병력에 의존한 제국군은 크라이스를 통한 병력동원과 식량보급, 지불, 규율, 군사능력, 장비부족에서 문제가 있었다. Pütter, 1790, Book. XII. Chap. IV. pp. 99-103.

다.²⁴³⁾ 프랑스는 로스바흐 전투 패배 후 영국에 집중하며 대서양의 갈등을 더 우선시했고, 점차 군사 및 재정적 부담을 줄이려하면서 오스트리아와 마찰이 생겼다.²⁴⁴⁾ 오스트리아는 1차 개혁에도 불구하고 군대와 재정능력에서 한계에 직면했고, 카우니츠가 개혁 주도권을 넘겨받았다.²⁴⁵⁾

하노버-영국도 제국 내 세력균형과 유럽의 평화와 안정을 대외정책의 목표로 했으나, 개입 수준과 이익계산에 관해 격한 내부 논쟁이 있었고, 프로이센을 지원하는데 갈등이 있었다. 조지 2세의 하노버 선제후 역할과 세력균형의 보호자로서 영국의 역할을 강조하는 쪽은 적극적 개입을 찬성했고, 영국과 하노버를 독립적으로 보는 시각은 무역, 상업제국으로서 영국의 성장을 위한 정치경제적 이익계산을 중시했다.²⁴⁶⁾ 뉴캐슬-피트 내각은 대륙 전략과 해양 전략의 핵심 축으로서 하노버가 중요하고, 대륙에서 프랑스를 저지하여 영국이 해상의 우위를 점유할 수 있다고 보았다. 피트는 하노버에 적극적으로 개입했지만 영국의 내부 논쟁과 조지 3세(George III, 1760-1820)의 정책 전환, 프로이센과의 갈등으로 1762년 지원을 철회했다.²⁴⁷⁾ 프로이센은 절박한 상황에 있었으나, 반-프로이센 동맹 진영의 취약성과 러시아 국내정치의 변화를 틈타 생존할 수 있었다.²⁴⁸⁾

7년 전쟁은 영국, 프랑스, 스페인 간의 파리 조약(Treaty of Paris 1763)과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작센 간의 후베르투스부르크 조약(Peace of

243) Clark, 2007, p. 201. 프랑스-오스트리아 동맹의 갈등사안은 오스트리아 저지대지역의 영토변경, 프랑스의 하노버 공격 제언, 그리고 프랑스의 병력과 보조금 지원범위 문제였다. Cooper, 2012, pp. 46-50, pp. 67-71.

244) Szabo, 2013, p. 191.

245) Franz AJ. Szabo, *Kaunitz and enlightened absolutism 1753-1780*.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4), pp. 74-76.

246) Harding, 2007, pp. 170-180.

247) 반대론은 독일전쟁에 대한 개입이 “독일의 자유(German Liberties) 보존, 유지, 영국-하노버의 공동의 대의를 강화한다고 하지만 실익이 없다.”고 평가했다. 찬성론은 영국 정책관료들의 전략적 고려를 지지하며 “영국과 프로이센의 목표가 북미에서 영국의 제국을 보존하고, 프로이센의 슐레지엔의 보존을 유지하는 것이었다. 독일 관습법적 구조(Germanic Constitution)와 세력균형의 유지는 공동의 목표였다.”는 것을 다시 강조했다. Isreal Maundit, *Considerations on the present German war* (London: 1760), p. 23.

248) 프리드리히 2세는 프로이센의 파멸을 막은 이유들로 첫째, 동맹세력들 간의 조화(harmony)의 결여와 상충된 이익으로 인한 분산 둘째, 오스트리아의 과도한 신중함으로 프로이센이 가장 절박할 때 완패시키지 못한 것 셋째, 엘리자베스 러시아 여제의 사망으로 인한 오스트리아의 동맹 정책 실패를 언급했다. Frederick II, 1789, p. 367.

Hubertusburg, 1763)의 체결로 종결되었다.²⁴⁹⁾ 평화 협상 이전에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이 서로 원하는 전전상태 회복의 구체적 내용은 모호했다. 양국은 평화조건을 “공정하고 공평한 평화(fair and equitable peace)”로 표현했고, 오스트리아는 프로이센이 점령한 작센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보았다.²⁵⁰⁾ 하지만 프리드리히 2세는 오스트리아가 원하는 글라츠 반환과 점령지역에 대한 어떠한 배상도 하지 않을 예정이었다.²⁵¹⁾ 결국 프로이센과 작센 간 조약에서 작센에 대한 아무 보상 없이 전투의 중단과 즉각 휴전, 드레스덴 평화조약(1745)을 기점으로 전전 상태(status quo ante bellum)의 회복에 합의했고, 오데르 강변의 철도와 뤼르스텐베르크가 프로이센에게 양도된 것을 다시 확인했다.

또한 프리드리히 2세는 예비 협상에서 오스트리아가 제안한 조항들에 대해 모두 근거를 들어 반박했는데, 제국성의 회복과 관련된 부분을 직접 거부한 점이 주목된다. 오스트리아가 제안한 2조는 “제국의 국가들, 특히 프랑코니아와 메클렌부르크 공작, 제르프스트 군주에게 정당한 고려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내용이었고, 3조는 “황제에게 영예로운 방식으로 제국 내 평화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²⁵²⁾ 4조는 신성로마제국을 포함하여 전체 사면을 공표하는 내용이었고, 전통적 제국질서를 강화하는 성격이었다. 그러나 프리드리히 2세는 이미 프로이센과 제국 내 군주들과의 불화가 소멸되었으므로 이러한 문구가 모호하고 불필요한 것이라고 일축했다.²⁵³⁾

후베르투스부르크 조약의 핵심은 베를린 평화조약(1742)과 드레스덴 평화조약(1745)을 재확인하고, 점령지역을 점령국에 배상금 요구 없이 양도하는 것이었다. 이를 통해 프리드리히 2세의 슬레지엔과 글라츠 보유를

249) 후베르투스부르크 조약은 프로이센-오스트리아의 조약(21개 조항과 2개의 비밀조항)과 프로이센-작센의 조약(11개 조항과 3개의 별도조항)으로 되어있다.

250) 프리드리히 2세가 언급한 양국이 수용할 수 있는 평화의 몇 가지 원칙들은 협상국이 피해입지 않는 선에서의 공평한 화의(equitable peace), 모든 합의할 수 있는 쪽에게 영예로운 조건(honorable condition)이어야 하며, 지속가능하도록 견고한 조치들을 통해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Frederick II, *Posthumous works of Frederic II. King of Prussia Vol. 2: The history of the Seven Years War*, 1789, p. 347

251) Frederick II, 1789, P. 365; Szabo, 2013, p. 420.

252) Frederick II, 1789, p. 358.

253) Frederick II, 1789, p. 361.

다시 확인했다. 마찬가지로 프리드리히 2세도 마리아가 보유한 지역에 대한 영유권을 포기하고, 전쟁에서 배상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합의했다(2-3조). 그리고 베를린 평화조약에 따라 슐레지엔의 부채지불을 재확인했고, 프로이센-오스트리아가 독일 내에서 보유한 보유지들을 상호보장하며(16조), 팔츠의 울리히, 베르그 상속에 대한 권리도 다시 인정했다(18조).

제국차원에선 “베스트팔렌 조약과 제국의 모든 관습법적 구조가 이 합의를 통해 재확인”(19조)되었다. 제국 구성원들 간에는 별도의 평화조약 없이 군대해산이 이루어졌고, 양쪽의 동맹국이었던 제국영방들이 삼자 간 조약에 포함되었다. 프리드리히 2세는 비밀조항에서 새로운 황제선거에서 요제프 2세(Joseph II, 1764-1790) 지지를 약속했고, 1764년 3월 선제후 회의에서 요제프 2세가 차기 황제로 선출되면서 오스트리아는 제권을 안정화했다.

7년 전쟁의 갈등은 30년 전쟁과 같이 제국의 관습법적 구조 자체를 둔 갈등이 아니었다. 제국 질서를 보존하려는 제국적 논리와 국가논리가 국가이성과 영토를 둘러싼 갈등이었다. 전쟁 이후에도 제국은 주권국가 또는 느슨한 연합과 같은 단위로 변화하지 않았다. 하지만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 사이의 제국과 유럽에서 상대적인 세력변화는 실질적으로 이후 제국 정치와 유럽정치의 핵심 변수가 되었다. 프로이센이 제국 내에서 오스트리아와 거의 대등한 경쟁자가 되었고, 강국으로서 지위가 인정되었다.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사이의 독일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더욱 심화되었고, 전후 제국의 현상유지를 지향한 프랑스, 영국, 러시아의 세력 균형적 전략과 개입은 또 다른 양상을 만들어냈다.

5. 소결

18세기 중반 신성로마제국의 질서 안에서 대내외 주권을 공고화하며 성장하는 국가들은 전쟁을 통해 계속 발전해나갔고, 제국질서와 마찰을 일으켰다. 신성로마제국의 관습법적 구조의 취약성, 오스트리아의 권력과 자원한계로 인한 주권확립의 어려움은 위기를 만들어냈다. 하지만 오스트리

아, 프로이센을 비롯한 제국구성원들과 외부세력들은 중부유럽에서 계속 제국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오스트리아 왕위계승 전쟁은 합스부르크 세습영지에 대한 주요 제후들의 야심과 제권 유지에 대한 도전이 만들어냈다. 브란덴부르크-프로이센의 프리드리히 2세는 제국 내 균형과 유럽 세력균형 변화에 대응하면서 이전의 제국정치문화를 흐트러트리며 자신의 국가이성을 실천했다. 프로이센에 대응하는 오스트리아는 여전히 제국의 관점에서 대응했고, 쉘레지엔 탈환에 대한 대응과 복수도 제국의 공적질서를 해치는 문제로서 인식했다. 전쟁은 오스트리아가 제권을 회복하고, 쉘레지엔을 프리드리히에게 넘기면서 영국, 프랑스의 개입하면서 불안정한 제국의 세력균형을 조정했다.

오스트리아, 프로이센은 제국 안에서 각각 군주정의 생존과 지위유지를 위해 내부개혁을 시행하고, 대외정책을 수정했다. 외교혁명에 신성로마제국에 대한 목표가 부딪치면서 나타났는데, 오스트리아는 프랑스, 러시아와 함께 프로이센을 약화시키려 했고, 하노버-영국은 제국과 유럽의 세력균형보존을 설파하며 제국에 개입했다. 오스트리아와 제국제후들은 전통적인 반-프랑스 협력연대를 상실했다. 오스트리아에게 7년 전쟁은 제국질서 회복을 위한 전쟁이었고, 제국이 참여하는 내전으로 만들었다. 7년 전쟁은 제국 대내외 행위자들의 개입과 타협의 정치적 결과로 전전 상태를 확인하면서 종결되었다. 신성로마제국의 관습법적 구조의 내용에는 변화가 없어서 제국은 비정상적인 상태로서 계속 존속했으나, 오스트리아-프로이센의 경쟁은 이후 실질적으로 제국과 유럽정치에 큰 여파를 주게 되었다.

VI. 유럽 세력균형의 위기 2: 제국의 분열과 해체, 1763-1806

7년 전쟁 이후 1806년 해체시기까지 제국 관습법적 구조에서 구성원들 간 세력균형 문제는 계속 해결되지 않았고, 해체 이후에도 제국과 유럽 체제는 주권국가들로 이루어진 질서로 재편되지 않았다. 또한 제국은 유럽 전쟁의 중심부였고, 제국정치와 유럽정치를 흔드는 오스트리아-프로이센의 경쟁이 심화되었다.²⁵⁴⁾ 양자가 영토 내에서 국가적 성격을 강화한 것은 제국의 관습법적 구조를 약화시키면서도 동시에 보존시키려는 노력을 촉진했다. 구성원들은 제국의 관습법적 구조를 다른 방법으로 강화 또는 수정하려고 했는데, 오스트리아는 왕조를 보존하고 제국을 재건시키기 위해, 프로이센은 여전히 미약한 유럽 강대국들 사이에서 생존을 위해 제국을 계속 활용하려 했다. 제국의 중견, 약소세력들은 양자에 의해 제국의 전통적 구조가 무너지는 것을 저지하려고 했다.

유럽의 강대국정치와 세력균형에 의한 제국유지 논리는 더 크게 제국 정치에 영향을 끼쳤다. 바이에른 왕위계승전쟁, 폴란드 분할 등은 제국 안에서 강대국들의 세력균형정책에 의한 영토교환, 분할위협을 고조시켰다. 구성원들은 질서를 흔드는 대내위협에 대응하고, 제국을 현상유지 또는 변경하려 하면서 마찰을 빚었다. 마지막으로 유럽 국제체제를 뒤흔든 프랑스 혁명 전쟁과 나폴레옹 전쟁이 신성로마제국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 어떻게 제국의 분열과 해체로 이어지게 되었는지 살펴본다.

254) Clark, 2014, pp. 216-218. 아레틴은 오스트리아-프로이센 경쟁 상황에서 양자에게 제국문제는 부차적, 수단적이었다고 평가했다. Aretin, 2002, pp. 101-102. 와일리는 양자의 경쟁이 제국 내 영향력을 두고 이루어졌고, 제국 관습법적 구조의 보존, 복원(revalorization)을 촉진했다고 평가했다. Whaley, 2012b, pp. 412-413.

1. 계몽 절대주의 영향과 제국 영토들의 분화

7년 전쟁 이후 오스트리아, 프로이센을 비롯한 주요 영토들의 세력격차가 커졌고, 각 영토들의 대내개혁으로 제국영방들의 내적구조가 다양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제국의 필요성을 부정하지 않았다.²⁵⁵⁾ 제 3의 독일 세력들도 여전히 중요했다.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작센 등 다수의 영토국가들이 부채에 직면했고, 평화적이고 안정화된 제국과 함께 재건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이들은 통합성을 유지한 제국이 보호막이 되어 오스트리아-프로이센의 추가 갈등을 막고, 개별적인 안보보존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전쟁은 중대형 영토국가들에서 계몽 절대주의(Enlightenment absolutism)에 따른 개혁을 촉진했다. 이는 재정-군사 국가(fiscal-military state)를 강화하려는 노력과 계몽주의를 지지한 엘리트들의 지적배경에 따라 진행되었다.²⁵⁶⁾ 계몽 절대주의 특징은 중앙집권화를 통해 조세, 재정 영역에서 군주, 신분의회가 관리했던 것을 단일한 공적영역으로 포섭하는 것이었다.²⁵⁷⁾

오스트리아의 목표는 제국 내에서 위신을 회복하고, 프로이센의 영향력 확대를 막는 것이었다. 막대한 전비부채 분재에 대해 재상 카우니츠를 중심으로 대내 개혁방향을 다시 모색했다. 요제프는 오스트리아 대공 시절 자신의 정치원칙을 밝히며 대귀족의 부에 대한 제한과 관료제, 내각조직 중심의 효과적인 통치를 강조했다.²⁵⁸⁾ 당시 유럽궁정의 관심은 “내적역량, 법, 법의 준수, 재정, 군대, 상업, 존경받은 군주”였다.²⁵⁹⁾ 특히 전쟁성

255) Wilson, 1998, p. 280.

256) 계몽주의와 프로이센 계몽주의에 대해선 Derek Beales, *Enlightenment and reform in eighteenth-century Europe* (I.B Tauris, 2005), pp. 90-107. 7년 전쟁 전후 유럽국가들의 정치변화는 Hamish Scott, “The Seven Years War and Europe’s Ancien Régime,” *War in History* Vol. 18, No. 4 (2011), pp. 419-455.

257) Wilson, 2004, pp. 279-280.

258) “Inner strength, laws, strict attention to the law, orderly finances, a respectable military, blooming commerce, an esteemed ruler.” in Archduke Joseph II, “Political Daydreams [Rêveries politiques] (1763)”, p. 2. http://germanhistorydocs.ghi-dc.org/sub_document.cfm?document_id=3534 (검색일: 2016년 4월 6일)

259) Joseph II, 1763, pp. 3-4.

(Kriegsrat)과 최고재판소의 관리가 중요하며, 재정, 외교, 상업에서 부채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개혁프로그램의 주 세력은 관료였고, 오스트리아를 더 탈인격화, 추상화, 합리화, 세속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군비확충과 군대확대를 위해 군사부문에서는 프로이센의 징집체제를 모델로 개혁을 감행했다. 오스트리아는 강대국 지위를 유지하는데 제국 내 자원과 정치적 영향력을 확보할 수 있었던 이점이 있었다. 이후 ‘요제프주의(Josephinism)’로 불리는 개혁은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과의 권력 격차를 줄이고, 재정능력을 확보하려는 실용적 고려로 인한 것이었다.²⁶⁰⁾ 요제프 2세는 경제적 목적에 따라 국가가 교회의 위계질서와 교회재산을 통제하고자 했다.²⁶¹⁾

프로이센의 목표는 국가성장을 위해 평화를 유지하고, 오스트리아의 제국 내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는 것이었다. 프리드리히 2세는 제국과 유럽에서 강국지위에 올랐으나 자신감을 갖기보다 여전히 취약성을 인식했고, 대외적 명성과 실제 대내자원의 괴리문제를 고심했다.²⁶²⁾ 더 이상 영토정복에 따른 군사적 성장은 불가능했기 때문에 대내 재건을 위해 힘쓰게 되었다. 이에 따라 군대를 확대하고, 중앙집권화를 통한 군주 중심의 국가통제를 강화했다.²⁶³⁾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외에 다른 독일영토에서도 개혁이 추진되면서 내부구조들에서 다양화, 분화(divergence)가 심화되었다. 바덴, 헤센-카셀 등은 프로이센을 모방한 개혁을 추진했고, 계몽주의에 영향을 받았다. 일부 약소영토들은 병합, 세속화를 반대하고 제국 관습법적 구조를 회복시키기 위해 정형화된 표준적 개혁을 거부하고 자체적인 개혁노력을 진행했다.²⁶⁴⁾ 하지만 영토국가들 사이 세력차이는 더 심화되었다. 개혁의 성패도 달랐지

260) ‘계몽 절대주의’와 ‘요제프주의’는 차이가 있는데, 후자는 1840년대 이후 독일 내부에서 지칭되었다. Beales, 2005. pp. 287; Ingrao, 2002, 197-202.

261) P. G. M. Dickson, “Joseph II's reshaping of the Austrian church.” *The Historical Journal* Vol. 36. No. 1 (1993), pp. 89-114.

262) 프리드리히 2세는 유럽대륙 체계는 4개의 강대국들로 이루어져있으며, 프로이센은 거기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Frederick II, 1768; Scott, 2014, p. 186

263) 1763년 이후 프로이센은 가속화된 중앙집권화된 체계로 발전되었으나, 경직된 군주제적인 통제를 강화하여 왕 개인의 역할은 더 증대되었다. 따라서 왕을 도우며 외교업무를 담당하는 비서들이 있는 내각(Kabinet)도 확대되었지만 여전히 전통적 통치스타일이 강했다. Scott, 2014, pp. 191-200. 군사국가(military-state)로서 성격 강화는 Hagen Schulze, 2014, pp. 201-209.

264) Wilson, 2004, p. 282.

만 약소영토들의 자원은 상대적으로 일관된 반면,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의 영토 및 자원은 폴란드 분할 등으로 증대했기 때문이었다.

2. 요제프 2세 황제의 제국정책

오스트리아에게 제국의 통합성과 제국 권위의 회복은 이후 추진한 대 개혁의 중요한 목표였다.²⁶⁵⁾ 전쟁으로 제국과 황제의 권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상황에서 오스트리아와 제국을 구하기 위해 제권을 안정화. 오스트리아 재상은 요제프 2세에게 제위는 오스트리아의 외교, 군사적 측면에서 물질적 이익을 제공한다고 다시 강조했다.²⁶⁶⁾ 제권확보는 기회이면서도 위기였는데, 황제가 제국영방들의 권리와 “제국의 복리”를 소홀히 하거나, 권력을 남용하면 오스트리아를 붕괴시킬 원인이 될 수도 있었기 때문이었다.²⁶⁷⁾ 당시 제국정치 상황은 신교세력들이 프로이센, 하노버에 의존하고 단결한 상태인데 반해, 구교세력들은 안보를 위해 외국에 의존하고, 서로 분열되어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영국, 프랑스 등이 계속 제국 내 패권확보와 영향력 확대 경쟁에 몰두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요제프 2세도 제국이 존속된 이유가 정체의 비정상성과 외국의 상호 질시 그리고 법, 질서원칙에 따른 제국영방들의 자유보존에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

265) Peter H. Wilson, *Absolutism in Central Europe* (Psychology Press, 2000), pp. 118-119; 요제프가 즉위하면서 제국개혁에 대한 기대가 고조되었고, 친 프로이센 입장이었던 공법학자 모제르도 친 오스트리아 입장에서 제국을 다시 중시하는 담론을 생산했다. Whaley, 2012b, pp. 400-411.

266) 페르젠(Johann Anton Pergen) 대공은 “제권보유가 오스트리아 세력 확대의 핵심 요소”이며, 그 밖에 핵심이익 13가지를 제시했다. 왕조의 전쟁 또는 투르크와 전쟁에서 제국으로부터 자원동원을 할 수 있고, 제국의결기구에서 오스트리아에게 유리한 정책을 조정할 수 있고, 제국 내 병력동원, 제국세의 부과, 제국기사 및 제국도시에서의 자원동원이 가능한 것 등을 제시했다. “Count Johann Anton Pergen's Memorandum to Austrian Co-Regent Joseph II on 'the Value of the Imperial Crown' to the House of Austria (1766)”
http://germanhistorydocs.ghi-dc.org/sub_document.cfm?document_id=3518
(검색일: 2016년 4월 6일).

267) Pergen, 1766, p. 5. 덧붙여 “황제가 제국 내외에서 평판이 나빠지고, 지지를 상실한다면, 이는 프로이센 왕이 오스트리아에 해를 가하고 약화시킬 힘을 부여할 것이다.”고 하여 프리드리히에 대한 견제의식을 드러냈다.

독일의 신체(*corpus Germanicum*), 이러한 비정상적인 몸(*irregular body*)은 기적 또는 외국의 상호질시(*mutual jealousy*)에 의해서만 계속 존재해왔다....각 영방들의 타당한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황제의 권력이 강자의 억압으로부터 약자를 보호하고, 법과 질서를 보존할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다...²⁶⁸⁾

황제는 전통적으로 선제후들과 타협해서 제국영방들 간 불화를 조정하는 봉건 대군주이자 최고재판관으로의 역할을 강화하려고 했다. 또한 이미 유명무실화되었지만 서임식 관행을 통해 제국영방의 권리, 지위가 부여됨을 강조했다.²⁶⁹⁾

1767년부터 황제가 진행한 제국대법원 개혁도 제국 정치문화 안에서 진행되었고, 기존 제국제도를 유지하려는 노력이었다.²⁷⁰⁾ 제국영방들도 교파갈등 해결 방안과 사법, 조정기구를 개혁, 부활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황제는 “제국영방들이 제권확대를 우려하지 않도록 다양한 교파들을 동등하게 대우”할 것이며, “제국영방들은 제국대법원의 정의(*justice*)와 봉건적 권리에 의해 제한되어야 한다.”고 보았다.²⁷¹⁾ 이는 황제가 한편으로 남은 제권을 약화시켜 “무질서”(anarchy)를 만들려는 외국과 제국영방들에 대한 대응이었다.

요제프 2세는 오스트리아의 배타적인 국익과 황제의 개인권력 강화만 도모하지 않았다. 오스트리아의 영향력 회복과 동시에 적극적인 ‘제국’의 공고화를 지향했다.²⁷²⁾ 제국 공법학자인 퓨터는 황제 개인의 최고권

268) “Emperor Joseph II on the Structure and Political Condition of the Austrian Monarchy and the Holy roman empire (1767/68)” p. 2. http://germanhistorydocs.ghi-dc.org/sub_document.cfm?document_id=3519 (검색일: 2016년 4월 6일).

269) 1788년 이후 요제프는 제후들에게 남은 서임식에서 의례수행요구를 포기해야 했고, 이는 수장과 구성원들의 유대가 몰락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Rilinger, 2012, p. 368.

270) 1767년 제국대법원의 시찰(*Visitation*), 1775년 제국결정, 종교문제에 대한 조치는 Pütter, 1790, pp. 136-164.

271) “Emperor Joseph II on the Structure and Political Condition of the Austrian Monarchy and the Holy roman empire (1767/68).” p. 3. http://germanhistorydocs.ghi-dc.org/sub_document.cfm?document_id=3519 (검색일: 2016년 4월 6일).

272) Hochedlinger, 2013, p. 83.

(majesty)과 제권을 명확히 구분했다.²⁷³⁾ 1780년대 황제가 단독통치를 하며 마리아 여제의 보수적 입장을 넘어서 더욱 급진적인 제국개혁을 시도했다. 특히 수도원 개혁을 포함한 그의 종교정책은 신교영방들의 강력한 반대 에 직면했다.²⁷⁴⁾ 또한 합스부르크에 충성했던 성직 군주들을 포함한 제국의 후견세력들을 약화시켰다. 제국영방들은 오스트리아의 정책을 제국의 통합 성에 대한 대내 위협으로 인식했다.

3. 제국 내외 영토재분배 계획과 현상유지 노력

1760년대 후반 유럽의 세력균형 변화는 제국 내부 균형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오스트리아, 프로이센이 더욱 유럽정치에 연루되면서 주요 제국의 결정을 외부가 결정하는 수동성(passivity)이 나타났다.²⁷⁵⁾ 전쟁을 통한 유럽 국가들의 세력, 지위변화는 5개 강대국들의 각축으로 이어졌다. 영국은 해양패권의 지위와 식민지에서 우위를 획득하게 되었고, 프로이센과 러시아는 강대국으로 성장했으며, 기존 패권들인 네덜란드, 스페인은 약화되었다.²⁷⁶⁾ 프랑스는 중, 동부유럽, 특히 신성로마제국에서 이전의 영향력을 점차 상실했다.²⁷⁷⁾ 동유럽에서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러시아 사이의 경쟁은 제국 내외 세력균형에 의한 주요 완충지역의 영토분할로 이어졌다.²⁷⁸⁾

273) 퓨터는 황제의 주권(maiestas)이 제권(imperial authority)과 구분되고, 'Realverbindung'을 제시하여 황제-영토 간 개인적 연합(personal union)과 구분했다. 능력/권능으로서 제권은 제국의 구성에서 파생되는 것이므로, 이는 기본법, 준수(observances), 명령(ordinances)에서 나온다고 보았다. 따라서 황제는 비인격적인 연계, 비인격적 제권을 행사하는 수행자일 뿐이고, 각 영토는 제국에 명확히 종속된다는 점은 인정하되, 최고권의 범위를 확정할 때, 황제가 여전히 군주로서 제국 내에서 주권(maiestas)을 갖는다는 것을 강조했다. Gross, 1975, p. 450.

274) Aretin, 2011, pp. 38-39.

275) Aretin, 2002, pp. 103-104.

276) Scott, 2006, p. 96 ; 18세기 중반 서유럽 세력인 영국, 프랑스와 중동부유럽 세력인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러시아는 구분되어 5개 강대국들(Great Powers)로 등장했고, 이는 나폴레옹 시대 때 강대국 체제(Great power system)의 토대가 되었다. Hamish Scott, *The Birth of a Great Power System, 1740-1815* (Routledge, 2014), ch. 5-6 참조

277) Hamish M. Scott, 'The decline of France and the transformation of the European states system, 1756-1792', in Peter Krüger and Paul W. Schroeder (eds.), 2003, pp. 105-128.

278) 동유럽 세력들의 성장으로 인한 국제정치 변화에 대해선 Scott, Hamish M. *The*

유럽 전반적으로 강대국들은 분할을 통해 팽창을 도모했고, 약소 세력들의 주변화(marginalization)를 가속화했다.

유럽세력들의 제국정치에 대한 개입이 계속되면서 특정 국가 주도로 제국 내 균형이 일방적으로 전복될 수 없었다. 하노버-영국은 오스트리아의 제국 내 현상유지를 깨려는 시도를 견제하려 제국정치에 계속 참여했고, 신교제후들의 연대를 구축했다. 바이에른과 관련된 오스트리아의 영토계획도 제국제후들의 반대와 현상유지를 위한 노력, 프로이센, 프랑스로 인해 저지되었고, 러시아도 제국 내 세력균형 문제에 개입했다. 대내외 행위자들의 이익이 충돌하면서 제국의 관습법적 구조가 흔들렸지만 제국의 틀은 계속 보존되었다.

프로이센의 생존을 위한 대외적 목표는 러시아로부터 안보 보장, 제국 중립화였다. 먼저 러시아의 잠재적 공격위협을 저지하기 위해 러시아와 동맹을 맺는데 성공했고, 폴란드 및 북부 독일에서의 정치적 영향력을 공고히 하려고 했다.²⁷⁹⁾ 이에 따라 1764년 폴란드 왕위계승 문제에서 러시아의 후견인을 등극시키고, 1768년 러시아의 투르크 전쟁에 원조를 제공했다. 러시아는 프로이센-오스트리아의 상호견제 구도를 만들며 영국과 삼자동맹을 제안했다.²⁸⁰⁾ 이에 프랑스-오스트리아는 계속 동맹을 유지했다. 또한 프리드리히는 제국 중립화 전략으로 제국 내 약소 신, 구교 군주들에 접근하여 오스트리아 후견체제에서 이들을 분리시키려고 했다. 이는 프로이센 서부 지역 안보와 슐레지엔 보호를 위해서였다.

황제가 안보적 목표로 지배 지역 확대를 위해 여러 제국 내외 영토 재분배 계획에 참여한 외교정책과 제국정책은 많은 논란을 낳았다. 1차 폴란드 분할(1772)과 바이에른 봉토 교환계획은 오스트리아가 프로이센으로부터 영토를 상실한 전략적 취약성을 회복하려는 의도였다.²⁸¹⁾ 1767년 이후

Emergence of the Eastern Powers, 1756-1775.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1) 참조.

279) Clark, 2014, pp. 213-215; Scott, 2014, p. 190. 프로이센-러시아 동맹은 프리드리히의 러시아에 대한 과도한 위협인식 때문이었다.

280) 슈뢰더는 이를 세력균형에 의한 패권동맹으로서 패권 견제의 동맹이 아닌 다른 강대국들을 고립시키려는 동맹의 사례로 본다. Schroeder, 1996, p. 24.

281) 이후 겐츠는 영토계획들이 제국의 연방적 구조의 파괴가 아닌 보존(continued existence of a federal constitution)을 위해서였고, 황제의 방어적 성격을 지적했다.

황제는 프로이센에 접근했는데, 러시아가 점차 남하하면서 중동부유럽에 영향력을 확대했기 때문이었다.²⁸²⁾ 그리고 러시아, 프로이센과 함께 1차 폴란드 분할에 참여했다.²⁸³⁾ 오스트리아는 술레지엔의 상실을 대체하고 외교적 고립을 피하려 했다. 하지만 제국의 완충 지역이었던 폴란드를 세력 균형적으로 분할한 것은 제국 내 약소 영방들의 분할, 병합에 대한 우려를 고조시켰다. 제국공법학자 모제르(Frederick Carl von Moser)는 폴란드가 완전히 분할되면 다음 목표는 제국이 될 것이라고 보았다.²⁸⁴⁾

바이에른 계승전쟁(1777-1778)에서 시도한 황제의 제국 내 봉토 재분배 정책으로 인해 오스트리아에 대한 지지는 더 약화되었다.²⁸⁵⁾ 오스트리아가 제국 관습법적 구조를 강화하려는 기존 제국정책에서 벗어나자 독일 군주들은 오스트리아의 약탈적 성격에 반발해 프리드리히 쪽으로 기댔다. 1784년 황제는 오스트리아령 네덜란드와 바이에른의 교환을 다시 시도했고, 이에 따라 오스트리아는 제국영방들로부터 고립되었다. 대항자인 프리드리히는 “제국 관습법적 구조의 보호”를 옹호하며 제국을 정치적 안전망으로 활용할 수 있었다.

독일 문제에 대한 외부 세력들의 정책에 따라 제국 내 영향력이 변화했다. 프랑스는 베스트팔렌 체제 보장자 역할과 오스트리아와 동맹자 사이에서 개입에 소극적이었고, 그 사이 러시아가 중재에 나서 테센 조약

Friedrich von Gentz, *On the state of Europe before and after the French revolution* (London, 1802), pp. 122-123. 술레지엔에 대한 보상으로서 방어적 성격에 대한 지적은 Wilson, 1998, p. 285.

282) 러시아-투르크 전쟁으로 오스트리아는 러시아로부터 위협인식을 느꼈다. 요제프는 러시아와 오토만 분할을 제언했으나 마리아가 종교, 정치적 이유로 반대했고, 카우니츠는 투르크 협력을 통한 러시아 견제방안을 제안했었다. Scott, 2001, pp. 204-205.

283) 이는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러시아의 영토이익과 상대적인 전략적 이익, 가치까지 계산하고 조정해서 균형을 맞춘 것이었다. 프리드리히는 러시아-오토만 전쟁에서의 러시아 위협이 고조되자, 오스트리아와 위협인식을 공유했고, 폴란드 분할로 이를 잠재우고자 했다. 폴란드 분할에 참여하여 3국의 균형(equilibrium)이 보존될 것이라고 회고했다 Frederick II, *Memoirs from the peace of Hubertsburg, to the partition of Poland*, p. 62. 1차 폴란드 분할 진행과정에 대해선 Scott, 2001, pp. 211-224.

284) Whaley, 2012b, p. 603.

285) 1777년 비텔스바흐 가문이 배출한 바이에른 선제후 가문의 대가 끊기자 팔츠 선제후 칼 테오도어는 양 가문을 합치려고 했다. 바이에른의 성장을 우려한 요제프 2세는 이 기회를 이용하여 바이에른과 팔츠 일부지역을 합병해 오스트리아의 위상을 강화하려고 했다. 작센과 프로이센이 1778년 보헤미아에 병력을 충돌시켜 무력시위를 하던 중 전투 없이 평화중재로 종결되었다.

(Treaty of Teschen, 1779)을 체결했다. 러시아는 프랑스와 동등하게 “제국 관습법적 구조의 보장자”가 되기를 원했다.²⁸⁶⁾ 이후에도 오스트리아의 제국정책을 지원하면서 더 적극적이고 다양한 방식으로 제국에 개입했고, 오스트리아-프로이센 사이의 세력균형을 조정했다. 프랑스는 계속 분열된 상태의 제국의 현상유지를 목표로 프랑스가 독일에 대한 우위와 안전을 확보하는 노선을 지속해야 한다고 보았다. 프랑스의 이익을 더 고려한 제국 정책은 점차 라인지역에 대한 외교, 후견체제 확대로 변화했다.²⁸⁷⁾

점차 제국영방들은 제국이 동유럽 강대국들의 분할게임에 연루되고, ‘법적 지배’가 토대인 관습법적 구조가 약화된다고 인식했다. 프로이센의 리더십 하에 작센, 하노버 선제후와 약소 군주들은 군주동맹(Fürstenbund, 1785)을 형성해 황제를 중심으로 제국이 변하는 것을 막으려 했다.²⁸⁸⁾ 프리드리히 2세는 복잡한 제국 내 교파갈등 상황을 이용해 합스부르크가 새롭게 반-종교개혁의 정책을 추진한다고 선전했고, 적극적으로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하노버 선제후도 제국의 현상유지와 제국영방들의 수호, 유럽의 안정을 위해서 뒤늦게 군주동맹에 참여했다.²⁸⁹⁾ 요제프는 구교 교회들을 개혁하고, 동시에 구교 군주동맹들을 통해 프로이센에 대항하려 했다.

군주동맹을 형성한 제국 내 역학은 외부 관찰자들이 놓친 구성원들의 제국에 대한 인식과 정치적 특징을 보여준다. 첫째, 각 제국영방들의 지위, 교파, 세력에 따른 다양성과 제국 내 실질적 위계, 봉건적 관계가 남아있었

286) 프로이센은 이를 찬성했고, 오스트리아는 의구심을 가졌으며, 팔츠-바이에른 대표는 이를 반대했으나 조약의 12, 16조에 보장자 역할이 결국 기입되었다. 프리드리히는 모호한 조항으로 러시아의 보장자 지위가 확인되었다고 보았으나, 오스트리아는 이러한 해석을 반대했다. Aretin, 2002, pp. 97-98.

287) Wilson, 1998, pp. 290-2.

288) 초기 군주동맹을 고려했던 마인츠 선제후, 제국의회 의장 등은 오스트리아-프로이센 갈등에 연루되지 않는 것이 목표였고, 먼저 하노버와 더 협력하길 원했다. 하노버가 너무 제국정치에 연루되지 않으려하자 군주들은 프리드리히 쪽으로 기댔다. Whaley, 2012b, pp. 364-365.

289) 제국 관습법적 구조를 보존하려 군주동맹에 참여한 조지 3세의 목표는 당시 오스트리아와 다시 동맹을 맺으려는 영국 정부의 외교관들과는 상반된 입장이었다. 영국은 프로이센과의 적극적 협력이 오스트리아-프랑스-러시아의 대항동맹을 촉진할 우려가 있었기에 주저했었다. Torsten Riotte, “George III and Hanover,” in Riotte, 2007, p. 70; T.C.W. Blanning, “‘That Horrid Electorate’ or ‘Ma Patrie germanique’? George III, Hanover, and the Fürstenbund of 1785.” *The Historical Journal* Vol. 20, No. 2 (1977), pp. 311-344.

다.²⁹⁰⁾ 계속적으로 구성원들의 교파 문제와 제국 내 사익 추구를 통한 크라이스와 같은 제국의 특수한 조직도 계속 작동했다. 제국의 방대한 지리적 범위에서 주요 세력, 가문들의 영향력도 더 달라지고, 각축했다.

둘째, 선제후, 군주, 도시, 기사들을 포함한 다양한 제국영방들을 황제와 동등한 대표세력 또는 연합을 구성하는 동질적인 주권국가로 보는 시각은 제국의 현실과 거리가 멀었다. 1770년대 후반 미국, 프랑스 등에선 연방주의의 확산으로 신성로마제국을 느슨한 연합과 같아도 평가했다. 하지만 국가연합 또는 연방이론이 발전되는 중, 모제르, 퓨터 등 제국 공법학자들은 여전히 제국을 봉건적 위계질서와 연방적 원칙이 부분적으로 섞인 것으로 보았다. 관습법적 구조를 지키려는 제국 군주들의 공동대응의 배경과 결과로 “독일의 자유”에 대한 여러 공적 논쟁들이 만들어졌다.²⁹¹⁾

셋째, 강대국 경쟁에서 소외되었던 약소 군주들은 자신들의 권리, 독립성을 보호하는 연방주의적 거버넌스를 구상하면서 제국 내 세력균형을 유지하고, ‘법적 지배’라는 안정적인 제국 전통을 부활시키려 했다.²⁹²⁾ 즉, 제국 내 제 3의 독일세력들이 계속 영향력을 유지했고, 오스트리아-프로이센 경쟁으로만 제국이 분열되지 않았다. 군주들의 연대를 프로이센의 전략적인 이해관계의 부산물로도 볼 수 없는데, 이들은 프로이센의 의사를 계속 따르려고 하지 않아 1790년대에 동맹이 해체되었다. 제국은 여전히 이전 모습을 유지하려고 하면서 대내외 충격에 유연하게 대응했다.

제국이 참전한 튀르크 전쟁(1787-1792)은 이제 제국의 전쟁이 아닌 지정학적으로 취약한 오스트리아의 이익이 걸린 강대국 전쟁이었다. 1780년대부터 두드러진 러시아의 팽창과 남하하는 오스트리아를 긴장시켰다. 오스

290) Helmut Neuhaus, “The federal Principle and the Holy Roman Empire,” in Maiken Umbach (ed.), *German federalism. Past, present, future* (Houndmills 2002), pp. 36-37.

291) Hartmut Lehmann, “Another Look at Federalism in the Holy Roman Empire,” in Umbach, 2002, pp. 80-85.

292) 슈뢰더는 이들의 노력이 프리드리히를 비롯한 강대국들의 세력균형의 도구가 되어 버렸다고 평가했다. Schroeder, 1996, p. 32. 움바크는 우호, 비밀외교 등의 구체제적 문화코드, 감정적 연대가 혼합된 군주동맹이 계몽주의 시대 연방주의 이념을 촉진했고, 제국 전통에 따른 영토국가들의 중앙집권화, 근대화를 가능하게 했다고 본다. Maiken Umbach, “History and Federalism in the Age of Nation-State Formation,” in Umbach, 2002, pp. 44-52.

트리아는 영토 확보를 위해서가 아니라, 러시아가 더 상대적 이득을 얻는 것을 저지하려 러시아와 오토만 제국을 분할하는 전쟁에 참여했다. 러시아가 전체 오토만 제국을 장악하면 오스트리아의 동부 안보가 위협해질 수 있었다. 프로이센은 오스트리아, 러시아의 영토 확대가 유럽 세력균형에 위협이라고 보고, 영국, 네덜란드와 3국 동맹(1788)으로 대응했다. 프로이센은 발트해 지역 영토를, 영국, 네덜란드는 러시아와 전쟁을 피하면서 유럽 세력균형을 유지하길 원했다. 프로이센은 폴란드, 스웨덴, 오토만과도 협상하여 러시아를 저지하려고 했지만 러시아의 외교로 3국 동맹은 와해되었다. 결국 신성로마제국을 포함한 주변국들은 1792년 러시아의 오토만 제국 일부 영토 요구를 인정해야 했다. 제국은 시스토바 조약에서 다뉴브 지역의 정복지를 반환하면서 전전 상태 회복에 동의했다. 중동부 유럽에서 오토만 제국의 약화와 러시아의 확대로 인해 완충지대가 없어지고, 영국, 프랑스와 영향권을 둔 갈등요인이 생기게 된 것은 18세기 세력균형체제가 붕괴의 촉발이었다.²⁹³⁾

4. 프랑스 혁명과 나폴레옹 전쟁, 제국의 해체

프랑스 혁명과 나폴레옹의 등장, 이어진 대불 동맹전쟁은 신성로마제국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가? 프랑스 혁명과 대불 동맹전쟁이 유럽체제에 미친 영향에 대한 평가는 논쟁적이며²⁹⁴⁾, 신성로마제국의 ‘해체’에 대한 영향 역시 단순한 인과관계로 평가하기 어렵다. 제국 안에선 마지막까지 제국 개혁을 통해 단합하고, 구성원들 간 균형을 보존하려는 노력이 있었다. 제국의 거버넌스의 미래에 대한 방안을 합의하지 못한 채, 프랑스의 변동으로 온 군사, 정치적 위협에 내부 구성원들의 입장은 분산되었다.

프랑스 혁명의 정치사회적 여파에 대비하기 위해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은 협력하기로 했고, 제국 구성원들은 이러한 세력균형 변화를 주시했다. 오스트리아는 특히 혁명의 대내확산을 막고, 자신의 대외적 지위에 대한 위협을 저지하려 했다.²⁹⁵⁾ 프로이센에 접근한 이유는 프랑스를 통한

293) Schroeder, 1994, pp. 86-87.

294) 이에 대해선 폴 슈뢰더(Paul Schroeder)의 유럽협조체제(Concert of Europe)논의에 관한 *International Historical Review* Vol. 16, No. 4 (1994)의 논쟁을 참조.

러시아 견제가 어려워지고 동유럽에서 지위가 흔들릴 우려 때문이었다.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은 ‘필니츠 선언’을 통해 프랑스의 왕정복고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는데, 양자의 접근(rapprochement)은 오로지 편익을 위한 수단적인 동맹이었고, 결과적으로 신성로마제국의 중립기회를 상실시킨 부정적 영향을 가져왔다.²⁹⁶⁾ 이들의 반-혁명적 조치들이 바로 전쟁을 목표로 하진 않았고, 전쟁은 이데올로기적 투쟁이나 혁명 저지를 위한 정치적 논리에서 나온 싸움이 아닌, 더 많은 보상, 배상을 위한 싸움이었다.²⁹⁷⁾

프랑스 혁명을 주도한 세력들은 제국에도 혁명을 확산시키고, 제국을 중소국가들의 느슨한 체계로 재편하거나 해체시키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 루이 16세가 제국과 공모한다는 이유로 프랑스 혁명의 주도세력들 사이에 위협인식을 느끼고, ‘오스트리아’를 다시 주적으로 삼았다. 이들은 4월 오스트리아에 전쟁선포를 하면서 왕정복위 시도가 프랑스에 대한 제국의 주권침해와 내정간섭이라고 주장했다. 레오폴드 2세에 이어 제위를 이어받은 프란츠 2세 황제는 혁명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더 보수적 태도를 보였고, 전쟁 대응을 위한 자원, 비용마련을 위해 제국의 단합과 공동방어를 요청하면서 제국을 연루시켰다.²⁹⁸⁾ 혁명전쟁이 제국 전체의 전쟁이 된 이유는 오로지 비용의 보상과 오스트리아, 프로이센이 프랑스부터 영토보상을 받는 팽창적 목표를 정당화하기 위해서였다.

이러한 1790년대 초중반 대내외의 안보적, 정치적 위협에 직면한 상황에서 제국 관습법적 구조의 유효성에 대한 평가와 개혁에 관한 논의가 활발해졌다.²⁹⁹⁾ 또한 2차(1793), 3차(1795) 폴란드 분할이 진행되면서 오스

295) 루이 16세와 마리 앙투아네트의 망명 실패 이후, 부르봉 왕가를 염려한 레오폴드 1세는 1791년 7월 프랑스 왕정의 문제를 유럽 군주들 전체의 관심사로 표명하고 협력을 요청했지만(Padua Circular), 적극적인 반응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합스부르크 세습영지에 대한 조치는 “Emperor Franz II's Confidential Instructions to his Officials in Austria and Bohemia on "Preventive Measures for the Maintenance of Citizenly Peace and Order" (February 9, 1793)”

http://germanhistorydocs.ghi-dc.org/sub_document_s.cfm?document_id=3566
(검색일: 2016년 4월 6일)

296) T.C.W Blanning, *The Pursuit of Glory: Europe 1648-1815* (Penguin 2008), pp.617-618.

297) Schroeder, 1994, pp. 67-83.

298) Wilson, 1998, p. 306.

299) Whaley, 2012b, ch. 64, pp. 602-613.

트리아와 프로이센 중심으로 신성로마제국 역시 폴란드와 같이 분할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반영되었다. 프랑스로부터 제국 영토들의 병합 위협까지 높아지면서 집단안보를 강화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오스트리아와 독일 제후들이 각자의 안보를 우선시하고 프랑스에 대한 공동투쟁 의지가 많이 약화되면서 이는 실행되지 못했다. 그러나 대부분은 제국의 핵심 제도들과 약소세력들을 보호하는 제국의 관습법적 구조를 회복을 지지했다.

하지만 프로이센이 프랑스와 따로 바젤 조약(1795)을 맺고, 제국과 전쟁 시 북독일 지역의 보호와 중립을 약속하면서 리더십을 확보하려고 했고, 대신 라인 강 서안을 프랑스가 병합하는데 비밀리에 동의했다. 하노버 역시 북독일 중립화 안을 어쩔 수 없이 수용했다.³⁰⁰⁾ 남부 독일의 중견국가들도 프랑스에 협력하기로 하였는데, 이들은 더 이상 합스부르크에 의존하는 것이 무익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오스트리아, 프로이센을 제외한 나머지 세력들을 결집하여 중립 또는 중도의 방식을 통한 대처도 더 이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드러냈다.³⁰¹⁾

1797년 쿠데타를 성공시킨 나폴레옹은 유럽에 대한 제국적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신성로마제국의 재편을 도모했다. 나폴레옹의 빈 진격으로 오스트리아는 비밀리에 캄포 포르미오 조약(Treaty of Campo Formio, 1797)에서 벨기에, 라인 강 좌안을 프랑스에게 넘길 수밖에 없었다. 이는 철저한 세력균형에 의한 영토분할 조약이었다. 라슈타트 회의에서 황제는 라인서부를 프랑스에게 완전히 양도하고, 라인지역 독일 군주들에 대한 보상으로 성직 제후령들의 세속화를 결정했다. 프랑스는 제국의 느슨한 연방적 형태는 유지하되, 적은 수의 큰 영방국가로 분할하는 영토재편을 밀어붙이려고 했다. 독일제국의 통합과 외세로부터의 해방에 대한 열망에도 불구하고 이를 주도할만한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은 제국보다 다른 지역에 집중하는 대외정책을 펼쳤다.

영국, 러시아는 제국 내부 세력균형을 계속 유지하고자 했기에 프랑스의 공세를 매우 우려했고, 이에 오스트리아, 프로이센과 2차 대불동맹

300) 조지 3세는 영국-프랑스의 개별조약을 피하고, 공동대응을 촉구하며 1793년부터 프랑스의 전전상태 회복을 추구하고, 독일이익과 영국이익, 하노버-영국 정책을 분리하려 했었다. Riotte, 2007, p. 72.

301) Wilson, 1998, p. 321.

을 형성했다. 그러나 나폴레옹을 막기엔 역부족이었고, 뤼네빌 조약(Treaty of Lunéville, 1801)과 아미앵 조약(Treaty of Amiens, 1802)으로 서부, 남부유럽을 프랑스가 완전히 장악하게 되면서 동맹도 붕괴했다. 라인 강 좌안을 프랑스의 완전한 주권 하에 넘기는 대신 프랑스는 라인 동부 독일영토에 대한 요구를 철회했다. 뤼네빌 조약은 전통적인 법적 지배질서를 대체하고 제국 내 세력균형을 조정할 수 있는 새 제국질서를 만들기 위한 개혁 논쟁을 더욱 촉발했다.³⁰²⁾

그 결과, 1802-3년 제국의회를 통해 마지막으로 처리된 ‘제국 영토재편성’은 제국 정치질서를 다층적 수준에서 상당히 변화시켰다.³⁰³⁾ 실질적 문제는 라인 강 좌안의 영토를 상실한 세속 제후들에 대한 보상이었다. 이를 위해 신성로마제국의 위계구조를 지지해온 중요 토대인 성직 제후령들이 세속화되면서 소멸했고, 주요 제국자유시들이 세속 중대형 영토들에게 흡수되면서 독립지위를 상실했다. 트리어, 쾰른 대주교구와 선제후직이 사라지고 4개의 새로운 선제후직이 만들어졌다. 성직 제후령은 3개만 생존했지만 약소 영토들, 기사단은 보존되었다. 프랑스가 원한대로 바덴, 바이에른, 프로이센, 헤센-다름슈타트 등 중대형 세력들이 보상차원에서 영토를 확대하고, 위상을 강화했고, 나폴레옹에게 충성을 바치려고 했다. 나폴레옹은 이들을 프랑스의 전쟁수행에 필요한 인력과 자원동원을 위한 수준으로서 성장시키는 것이었다.

베스트팔렌 조약 이후 신성로마제국은 황제와 제국영방들의 세력균형을 관리해왔고, 이는 유럽 세력균형과 평화의 핵심 축이었다. 영토재편성을 통한 제국 대내 세력균형 변화는 주요 구성원들의 수 변화로 인한 제국의 회와 크라이스의 구성 문제, 제국대법원의 재정문제 등 관습법적 구조에 대한 문제를 모두 해결하지 않았다. 하지만 사실상 제국질서의 내적기반은 더욱 약화되고 유명무실화 되었다. 그리고 나폴레옹 제국의 팽창은 신성로마

302) Whaley, 2012b, pp. 618-619.

303) 이는 1803년 ‘제국의회대표회의결의(Reichsdeputationshauptschluss)’로 지칭되며, 1814년까지 진행된 독일 제국직속성부정 또는 매디타이지롱(deutsche Mediatisierung, German mediatization)으로도 불린다. 이는 제국직속(unmittelbar) 국가들이 다른 국가에 흡수되어 비직속(mittelbar)이 된다는 뜻으로서, 제국과 직접적인 봉건적 관계가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Whaley, 2012b, p. 620.

제국과 유럽의 세력균형에 가장 큰 정치군사적 위기였다. 나폴레옹이 프랑스의 황제로 등극하며 독일제국을 대체할 수도 있다는 우려에 따라, 신성로마제국 황제 프란츠 2세는 1804년 8월 스스로 오스트리아의 세습 황제로 오르고, 오스트리아를 제국으로 선포했다.

제국을 되살릴 유럽 세력균형의 향방은 영국과 러시아에게 있었다. 영국은 하노버의 보호와 제국의 통합성, 유럽의 세력균형을 보존하기 위해 북독일과 홀란드, 벨기에에서 프랑스를 몰아내고자 했다. 나폴레옹이 하노버를 점령하고 제국이 위기에 처하자, 러시아의 알렉산드르 1세도 유럽의 안보와 제국의 독립을 계속 유지하고자 개입했다. 이에 따라 1805년 오스트리아는 영국, 러시아, 스웨덴, 피에몬테-사르디니아 왕국과 함께 3차 대불동맹을 형성했다. 러시아, 영국은 프랑스를 저지하기 위해 오스트리아령 네덜란드와 오스트리아, 프러시아를 제외한 독일 서부, 남부지역까지 완충지대를 확장시키는 것을 고려했다. 그러나 3차 동맹은 주요 독일세력들이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 1, 2차 동맹과 결정적 차이가 있었다. 특히 핵심 행위자였던 프로이센은 프랑스와 반 프랑스 연합 사이에서 고민하다 계속 중립을 유지했다. 또한 바이에른, 바덴, 뷔르템베르크 남부 독일 제후들은 나폴레옹과 군사동맹을 통한 후견지위를 얻고, 영토 확대를 약속받았다.

아우스터리츠 전투에서 오스트리아-러시아 연합군이 프랑스에게 대패한 것은 오스트리아의 영토상실과 제국의 약화, 해체로 이어졌다. 패전한 오스트리아는 프레스부르크 조약에서 막대한 영토들을 상실했다. 나폴레옹은 독일에서 오스트리아를 몰아내고, 새로운 위성국가들을 건설하면서 바이에른, 뷔템베르크, 작센을 공국에서 왕국으로 승격시켜 완전한 주권을 승인했다. 이러한 조치들은 황제와 제국의 주권을 유명무실하게 했다. 나폴레옹은 제국을 완전히 복속하기보다, 남서부 독일 국가들을 연방으로 재편하려는 계획을 유지했다. 오스트리아는 베네치아, 이스트리아, 달마티아를 프랑스의 위성국인 이탈리아 왕국에 넘겨주고, 나폴레옹을 국왕으로 인정했다. 프로이센은 프랑스에게 하노버 공국을 양도받는 대신 바이에른 왕국에 영토를 할양하면서 안스바흐, 바이로이트, 클레베 공국을 상실했다.

신성로마제국의 위계성을 지탱했던 구조들이 사라지고, 이제 나폴레옹 제국은 독일을 40개 정도의 제후국들로 축소된 동맹으로 재편시켰다.

1806년 6월 오스트리아, 프로이센을 제외한 16개의 약소, 중견군주들은 나폴레옹의 보호 하에 라인동맹(Rheinbund)을 형성했다.³⁰⁴⁾ 구성국들은 독일 제국에서 탈퇴했고, 황제 8월 프란츠 2세는 나폴레옹의 압력에 의해 제위를 포기하고, 신성로마제국의 해체를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중립지위에 있었던 프로이센이 프랑스에 패배한 후, 중부, 북독일의 약소 제후국들이 라인동맹에 가입했고, 4차 동맹전쟁이 끝난 후 약 20여개의 제후국들이 추가로 가입했다. 하지만 라인동맹 구성국들이 가진 “완전한 주권(full sovereignty)”의 의미는 불명확했고, 제국 내에서 통용되던 군주들의 영토주권(Landshoheit)의 의미와 혼동되었다. 이들이 여전히 제국 봉토의 지위에 남아서 제국제도와 황제의 관할권, 권위에 속해있는지는 애매한 부분이 있었다. 그러나 나폴레옹의 관점에서 라인동맹은 애초 독일의 군사적 지배와 통제를 위해 만들어졌다.³⁰⁵⁾ 구성국들은 나폴레옹에게 군사, 안보적으로 종속된 비대칭적 동맹으로서 병력을 부담해야 했고, 온전한 대외적 주권을 확보하지 못했다. 또한 강한 영토세력들은 주권을 더 확보하려 했고, 약소세력들은 주변세력들의 보호를 요청하면서 내부적으로도 상이한 목표를 갖고 있었다.³⁰⁶⁾

신성로마제국은 내부의 분열과 나폴레옹 제국으로부터의 합병 위기 속에서 완전히 해체되고, 프랑스의 패배에도 다시 회복되지 못했다. 그러나 신성로마제국의 독특한 유산은 구성국들의 독일연방(Deutschen Bund)의 형성으로 이어졌고, 1815년 빈 체제(Vienna system)에 흡수되었다.³⁰⁷⁾ 오

304) 독어로 *Rheinbund*, 불어로 *Confédération du Rhin*, 영어로 *Confederation of Rhine*이라고 지칭된다. 라인동맹의 조약 1조는 라인동맹에 참여한 군주들이 “독일 제국령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고, 라인국가연합의 이름으로 연합(confederation)을 이룬다.”는 내용이다. 2-3조는 독일제국의 모든 법이 무효화되며, 독일제국과 관련된 칭호를 버리고, 다음 의회에 이를 알린다는 내용이다. 선제후-제국대제상은 상위군주(prince-primate)를 맡고, 각 연합구성국들이 보유한 완전한 주권(plénitude de la souveraineté)을 인정한다. 군주들은 외국에 대해 독립을 유지하며(7조), 연합국에 우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주권을 양도할 수 없다.(8조) *History of the causes and effects of the Confederation of the Rhine. Marquis Lucchesini, John D. Dwyer trans.* (London: 1821), Appendix, pp. 376-395.

305) Schreoder, 1994, pp. 293.

306) Ingrao, 2000, p. 230.

307) 빈 체제가 18세기적 세력균형이 아닌 정치적 평형(political equilibrium)에 기반한다는 논의는 Shroeder, 1994, p. 482.

스트리아의 리더십 하에 프로이센, 그리고 나머지 독일이 느슨하게 엮인 독일연방은 중간체(intermediary)로서 독립성을 유지해야 했다. 또한 러시아와 프랑스의 확대를 저지할 정도로 강하되, 자체적으로 패권이 되지 않을 정도로서 “유럽의 안정과 평형(repose and equilibrium of Europe)”을 지탱하고 동시에 연방의 내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목표로 만들어졌다.³⁰⁸⁾ 이는 여전히 주권적이면서도 비주권적인 요소가 섞여있었고, 단순히 중부유럽을 영토국가들의 무정부적 국가체제로 재편시킨 것이 아니었다. 나아가 ‘독일문제(German Problem)’는 독일 통일전쟁까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5. 소결

18세기 후반 유럽 국제체제에서 중요한 변화는 전쟁의 중심부였던 신성로마제국의 해체, 특히 독일지역의 약소, 중견국가들의 영토적 재편과 세력균형에 의한 분할이었다. 베스트팔렌 조약 이래 신성로마제국은 주권국가 아닌 제국으로서 법, 관습법적 구조와 대내외적으로 복잡한 세력균형 안에서 생존해왔다. 이러한 제국이 단순히 내재적 취약점이나 실패요인이 있어서 해체된 것은 아니었다. 제국의 위계구조에 대해 도전하는 주권, 연방적 경향에 따른 긴장과 마찰이 외부위협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더욱 심화되었기 때문이었다. 해체 직전까지 제국은 구성원들에게 대체불가능한 정치 단위였고, 외부에서도 중부유럽의 세력균형을 위해 소(小) 질서로서 기존상태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7년 전쟁 후 요제프 2세 황제가 진행한 개혁은 오스트리아 중심의 단일한 주권국가화가 아닌 제국전체를 안정적 제권 하에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었다. 하지만 오스트리아, 프로이센이 강대국 경쟁에서 상호경쟁하며

308) 독일연방조약의 서문은 “독일의 안보와 독립을 위해, 그리고 유럽의 안정과 평형(repose and equilibrium of Europe)을 위해 영구적인 연방을 형성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2조에서는 “독일의 외부, 내부 안보를 유지하며, 개별 독일국가들의 불가침(invulnerability)과 독립(independence)을 목표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German Federal Act (June 8, 1815) http://germanhistorydocs.ghi-dc.org/sub_document.cfm?document_id=233 (검색일: 2016년 4월 6일)

자신들의 생존기반을 만들려는 수단으로 제국제도를 활용하여 제국자체의 강화로 이어지지 못했다. 오스트리아가 제국질서의 변화를 도모하는 것에 대해 프로이센은 다른 군주들과 군주동맹을 형성해 제국 관습법적 구조의 현상유지를 추구했다. 또한 제국 내외 행위자들이 연루된 바이에른 계승전쟁, 폴란드 분할이 진행되면서 유럽의 보상적 세력균형 논리가 침투했다.

프로이센, 오스트리아는 의도하지 않게 기존의 법, 관습, 제도에 의해 유지되어 온 제국 질서원칙을 깼다. 이에 제 3의 세력들은 제국이 강력한 영토국가들 중심으로 재편되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했다. 마지막까지 제안된 다양한 제국 정체의 개혁안들은 제국을 보존, 부활시키려는 노력이었다. 그러나 이를 개혁방안들을 실행하지 못한 상태에서 전통적으로 제국질서를 지탱해 온 원칙과 제도들이 약화되고, 정치적 중요세력들이 약화되고 병합되면서 내부적인 토대가 무너지기 시작했다.

나폴레옹 프랑스의 제국화로 인한 외부 충격은 주변국들의 세력균형 회복 노력에도 불구하고 신성로마제국의 법적 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렸다.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및 중소 세력들이 각자의 생존, 안보와 이익을 추구하면서 나폴레옹의 제국적인 정책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고, 제국 내 약소 세력들은 보호받지 못한 채 주요 영토국가들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 병합, 재조직되었다. 결국 반-프랑스 동맹진영의 한계와 오스트리아, 프로이센의 군사적 패배와 정치적 약화로 나머지 독일세력들이 나폴레옹의 후견적 지위 아래 라인동맹으로 엮이면서 신성로마제국은 해체되었다.

VII. 결론

본 연구는 유럽 근대 주권국가체제의 등장에 관한 국제정치학의 베스트팔렌 신화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베스트팔렌 조약(1648) 이후 1806년까지 유럽정치에서 신성로마제국이 어떻게 위계적인 제국으로서 존속할 수 있었는지 살펴보았다. 유럽 단위들이 주권국가화되고, 세력균형을 국제정치적 규범 또는 원칙으로 삼아 움직이는 베스트팔렌 체제가 형성되는 가운데 신성로마제국은 비정상적인 소(小) 체제이자 독특한 제국 단위로서 공존할 수 있었다. 18세기 후반까지 신성로마제국은 황제 또는 영토제후들 중심의 주권국가로도, 느슨한 연합으로도 변하지 않았다. 제국의 대내 균형이 유럽의 세력균형과 연동되면서 내적, 외적으로도 제국의 정체성이 보존될 수 있었고, 이는 지역질서의 권력게임의 장을 복잡하게 만들었다.

본 연구는 1648년 이후 신성로마제국의 존속 양상과 원인을 제국의 내적, 외적 세력균형의 변동과 회복을 통해 설명하고자 했다. 제국의 봉건적 위계적 관습법적 구조는 구성원들의 권한, 지위를 조정해 대내 균형을 유지하는 법, 제도들을 만들어왔다. 이러한 단일한 주권을 확립하지 않은 정체의 불안정성과 취약성은 위기를 낳기도 했다. 하지만 비주권적인 상태의 제국의 현상유지는 대외적으로 유럽 평화의 보존에 핵심으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외부 행위자들은 제국 내 균형의 유지 혹은 변동이 자국과 유럽체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유리한 세력균형을 만들고 제국의 현상유지를 지지했다.

신성로마제국의 독특한 관습법적 구조는 법, 관습, 전통에 토대를 두고, 이를 구성하는 황제와 제국영방들은 형식적, 실질적으로도 불평등한 관계를 이루고 있었다. 황제는 힘과 서열에서 다양한 제국영방들의 권리, 지위, 안보 등을 법적, 정치적으로 보호했고, 제국영방들도 정치안보적 보호막으로서 제국을 필요로 했다. 제국개혁 시기 마련된 법, 제도적 틀은 대내 균형을 유지하면서 해체시점까지 존속했다. 종교개혁과 카를 5세 황제의 통치에 의한 충격에도 불구하고, 제국은 이를 기반으로 정치적 타협을 통해

질서를 회복했다. 1555년 아우크스부르크 화의는 관습법적 구조의 원칙을 통해 종교문제에 있어서 황제와 신, 구교 제국영방들 사이의 균형 상태를 만든 것이었다. 이와 같은 관습법적 구조에 대한 축적된 합의들은 대내외 역학에 따라 제국이 유연한 구조로 지탱하는데 기여했다.

논문은 네 시기에 걸쳐 제국 내외 세력균형이 내부, 외부의 위협요인에 의해 흔들렸다가 다시 복원되는 과정을 다룬다. 세 번에 걸쳐 대내 균형에 대한 위기와 유럽 세력균형의 위기를 극복하고 제국이 존속할 수 있었으나, 마지막 나폴레옹 제국의 전쟁대응에서 제국은 해체되었다.

내부 균형의 변동으로 발생한 30년 전쟁은 신성로마제국의 관습법적 구조를 둘러싼 구성원들의 종교, 정치적 갈등에서 촉발된 내전이였다. 국제전적 성격이 혼합되었으나, 갈등의 핵심은 제국의 거버넌스와 구성원들 간 관계에 대한 것이었고, 구성원들의 내전 종식 노력과 외부 세력의 개입을 통해 제국 내 균형은 다시 회복되었다. 이에 따라 베스트팔렌 조약의 핵심 원칙과 구체적인 조항들은 주로 제국 내부문제의 해결에 대한 것이었고, 더 정교하고 복잡한 위계질서 안에서의 균형을 만들었다. 프랑스, 스웨덴은 베스트팔렌 조약의 보장자가 되어 제국의 현상유지를 위해 개입할 근거를 갖게 되었고, 제국이 유럽 내에서 황제 중심의 주권국가로도, 또는 너무 약한 제후들로 이루어진 국가연합으로도 변화하지 않도록 대내외 균형이 조정되어야 했다.

1648년 이후 1740년대까지 유럽체제에선 주권규범과 국제정치적 원칙으로서의 ‘세력균형’이 등장했는데, 제국은 그 안에서 위계적인 정체성을 보존하며 지정학적 역할과 지위를 회복할 수 있었다. 그 이유는 제국의 현상유지가 유럽 세력균형과 평화보존의 핵심이라는 동의가 생겼기 때문이었다. 튀르크, 프랑스로부터의 대외위협과 양면전쟁에서 오스트리아 황제와 제국영방들을 포함한 내부의 세력균형은 유럽 세력균형과 연결되면서 주권, 영토를 둘러싼 복잡한 정치적 게임을 만들었다.

18세기 중반 오스트리아 왕위계승 전쟁(1740-1748)과 7년 전쟁(1756-1763)도 제국 내부 균형이 깨지면서 발생했다. 법, 관례에 의해 유지되어 온 제국질서에 대해 국가이성의 논리를 가져온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의 영토적 고착화와 갈등은 질적으로 다른 충격을 가했다. 중부유럽에서

세력균형의 불안정을 우려한 주변국들의 계산은 오스트리아 중심의 제권을 다시 회복시켰고, 프로이센의 영토획득과 성장을 인정하면서 제국을 유지시켰다.

7년 전쟁은 제국 각 영토들의 대내구조와 대외적 지위를 변화시켰다. 이후 오스트리아의 현상변경적 시도를 막으려 프로이센과 제국의 중소세력들은 관습법적 구조의 유지를 위해 노력했다. 주변 강대국들 유럽의 세력균형 논리는 계속 제국의 관습법적 구조를 지탱하는 측면이 있었다. 동시에 약탈적, 보상적 세력균형이 진행되면서 중소 완충지대가 소멸되고, 제국의 분할위협이 높아졌다. 나폴레옹 프랑스의 제국화의 충격과 이에 대한 대응과정에서 구성원들의 목표와 이익이 분산되면서 해체되었다.

연구의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베스트팔렌 신화와 유럽질서에 대한 역사사회학적, 역사학적인 연구영역에서 퍼즐로 남아있던 신성로마제국의 내부 구조와 동학을 조명하고자 했다. 신성로마제국의 내부구조와 문제들을 간과한 채 베스트팔렌 조약의 유럽적, 국제적 의미를 평가하고, 유럽 주권국가체제의 등장을 설명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점에서 다각도에서 베스트팔렌 신화를 비판적으로 검토해 온 기존 연구들을 보완하고자 했다.

둘째, 베스트팔렌 질서 또는 모델을 가정한 국제정치이론들에 대해 기존 연구자들은 이론적 편향성과 몰역사성을 지적해왔으나, 이에 대한 성찰적 대안으로서 구체적인 경험 연구를 진행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본 연구는 신화에 대한 이론적 비판에 한정된 논의를 신성로마제국 대내외 정치와 유럽 주권국가체제의 등장에 관한 역사적, 경험적 연구를 통해 보완하고자 했다.

셋째, 국제정치학계의 통념과 달리 제국 내외의 행위자들은 유럽정치질서를 형성하고 세력균형을 보존하는 데, 신성로마제국의 파괴를 지향하지 않았다. 제국의 현상유지가 유럽의 세력균형과 평화의 보존에 필수적이라는 동의가 있었고, 신성로마제국의 존속은 체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기여했다. 즉, 비정상적, 전근대적, 비주권적인 신성로마제국의 존속이 실제로는 근대 유럽정치체제를 안정적으로 유지, 작동시키는 핵심이었다.

이는 신성로마제국과 같은 독특한 단위 또는 위계적인 소 체제가 장

기간 존속하면서 유럽질서가 주권국가들로 이루어진 평면적 무정부상태로 이행하지 않았고, 나아가 당시 유럽 국제정치의 예외가 아니라 유기적으로 연결된 정상상태였음을 시사한다. 향후에도 이러한 이질적 성격의 단위들이 공존한 혼성질서(heterarchy)의 작동방식에 대한 연구와 논의를 더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단위 또는 질서에 관한 국제정치학계의 특정한 편견을 깨고, 이론화를 하는데 힌트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는 신성로마제국의 대내 동학과 외부동학의 연관성에 초점을 두었으나, 유럽체제와 질서수준의 전반적인 변환(transformation)에 대해선 다루지 못했다. 또한 1806년 신성로마제국의 해체 이후 유럽 국제체제와 독일이 어떤 질적인, 구조적인 변환을 겪는지에 대해선 후속연구를 통해 더 자세히 다뤄질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선 더 많은 행위자들을 포함하여, 지역질서를 유지 또는 변화시키는 근본적인 추동력과 요인들에 대한 고찰이 더욱 필요하다.

참고문헌

1. 1차 자료

1) 사료집

Helfferich, Tryntje. 2009. *The Thirty Years War: A Documentary History*. Hackett Publishing.

Macartney, C.A. (ed.), 1970. *The Habsburg and Hohenzollern Dynasties in the Seventeenth and Eighteenth Centuries, in Documentary History of Western Civilization*. New York, Evanston, and London: Harper & Row.

Perry, Clive. (ed.), 1969. *Consolidated Treaty Series*, N.Y.: Oceana Publications.

Wilson, Peter H. 2010. *The Thirty Years War: A Sourcebook* (Palgrave Macmillan).

2) 웹문서

① Internet Archive <https://www.archive.org/>

Bernis, François-Joachim de Pierre de. 1901. Katharine Prescott Wormeley trans. *Memoirs and Letters of Cardinal de Bernis*, New York : Collier.

Burke, Edmund. 1790. *Reflections on the Revolution in France, And on the Proceedings in Certain Societies in London Relative to that Event. In a Letter Intended to Have Been Sent to a Gentleman in Paris* (1 ed.). London: J. Dodsley in Pall Mall.

Davenant, Charles. 1701. *An essay upon universal monarchy*

Fénelon, François. 1720. *Two Essays on the Ballance of Europe*,

London.

Frederick II. 1752. "Political Testament" in C.A. Macartney, ed., *The Habsburg and Hohenzollern Dynasties in the Seventeenth and Eighteenth Centuries*, in *Documentary History of Western Civilization*. New York, Evanston, and London: Harper & Row, 1970.

_____. 1789a. Thomas Holcroft trans. *Posthumous works of Frederic II. King of Prussia Vol. 1: History of My Own Times*.

_____. 1789b. Thomas Holcroft trans. *Posthumous works of Frederic II. King of Prussia Vol. 2: The History of the Seven Years War*.

_____. 1789c. Thomas Holcroft trans. *Posthumous works of Frederic II. King of Prussia Vol. 4: Memoirs from the peace of Hubertsburg, to the partition of Poland*.

Gentz, Friedrich von. 1804. *On the state of Europe before and after the French revolution*.

Leibniz, Gottfried Wilhelm. 1988. Patrick Riley trans and (ed.), *Leibniz: Political Writings*. Cambridge University Press.

Madison, James and Alexander Hamilton. 1787. *Federalist Paper* 19.

Maundit, Isreal. 1760. *Considerations on the present German war*. London.

Pufendorf, Samuel von. 2007. Edmund Bohun trans, Michael J. Seidler (ed.), *The Present State of Germany* (1667) Indianapolis: Liberty Fund.

_____. 2013. Jodocus Crull trans, Michael J. Seidler (ed.), *An Introduction to the History of the Principal Kingdoms and States of Europe* (1695). Indianapolis: Liberty Fund.

Pütter, Johann Stephan. 1790. *An Historical Development of the Present Political Constitution of the Germanic Empire*. Vol. 2. T.

Payne and son.

Lord Viscount Bolingbroke, Henry St John, 1770. *Letters on the Study and the Use of History* (1752) London : Printed for T. Cadell.

Lucchesini, Marquis. 1821. John D. Dwyer trans. *History of the causes and effects of the Confederation of the Rhine*. London.

German Politicks, Or, the Modern System Examined and Refuted.

London: Printed for Jacob Robinson, in Ludgate-Street. 1744.

A letter to a certain Foreign Minister (London: printed for M. Cooper, 1745)

The definitive treaty of peace and friendship between His Britannick Majesty, the Most Christian King, and the States General of the United Provinces : concluded at Aix la Chapelle the 18th day of October N.S. 1748 (London: Printed by Edward Owen in Warwick-Lane, 1749)

② German History in Documents and Images by German Historical Institute. <http://germanhistorydocs.ghi-dc.org/index.cfm>

“The Golden Bull (1356)”

“Royal Coronation of Maximilian I (April 9, 1486).”

“Imperial Reform (1495),

“Protestant Resistance - The Smalkaldic League (1531/35)”

“The Religious Peace of Augsburg (September 25, 1555).”

“The ‘Youngest Recess’ [jüngster Reichsabschied] of the Imperial Diet of the Holy Roman Empire in 1654 (May 17, 1654)”

“Veit Ludwig von Seckendorff, Excerpts from *Teutscher Fürsten-Staat* (1656)”

“Landgrave George II of Hesse-Darmstadt, Political Testament (June 4, 1660)”

“Electoral Agreement of King and Emperor Leopold I (July 18, 1658)”

“The Imperial War Constitution [Reichskriegsverfassung] (1681-82)”

Frederick II, “Notes to Himself on the Invasion of Silesia (1740)”

“Maria Theresa’s Political Testament 1749-50”

Archduke Joseph II, “Political Daydreams [Rêveries politiques] (1763)”

“Count Johann Anton Pergen's Memorandum to Austrian Co-Regent Joseph II on "the Value of the Imperial Crown" to the House of Austria (1766)”

“Emperor Joseph II on the Structure and Political Condition of the Austrian Monarchy and the Holy roman empire (1767/68).”

“Emperor Franz II's Confidential Instructions to his Officials in Austria and Bohemia on "Preventive Measures for the Maintenance of Citizenly Peace and Order" (February 9, 1793)”

“Georg Wilhelm Friedrich Hegel, ‘The Constitution of Germany,’ unpublished manuscript (1800-1802)”

“Declaration of Sovereignty of the [German] People Between the [Rivers] Meuse, Rhine, and Mosel" (November 13, 1797)

“German Federal Act” (June 8, 1815)

2. 2차 자료

김동원. 2010. “페르디난트 1세와 제국의회와 튀르크전쟁지원.” 『역사와 세계』 Vol. 37.

김장수. 2013. “합스부르크가문의 대보헤미아 정책과 보헤미아 귀족들의 대응책.” 『서양사학연구』 Vol. 28.

김준석. 2006. “‘연방적 국가’의 탄생” 『국제정치논총』 Vol. 46, No. 4.

_____. 2012. “17세기 중반 유럽 국제관계의 변화에 관한 연구.” 『국제정치논총』 Vol. 52, No. 3.

- 박상섭. 1996. 『근대국가와전쟁: 근대국가의군사적기초, 1500-1900』. 나남.
- 이혜정. 2002. “웨스트팔리아와 국제관계의 근대성.” 『국제정치논총』 Vol. 42, No.2.
- 전재성, 2009. “유럽의 국제정치적 근대 출현에 관한 이론적 연구.” 『국제정치논총』 Vol. 49, No. 5.
- 황대현. 2011. “특집: 서양사 속의 평화; 아우크스부르크 평화축제 (Augsburger Friedensfest)로의 길-아우크스부르크 시의 30년 전쟁 극복과정과 동등권(Paritat) 체제의 수립.” 『서양사론』, Vol. 108.
- 황선훈. 2004. “라이프니츠의 정치적 형이상학과 국가건설전략.” 『정치사상연구』 Vol.10, No. 2.
- Anderson, Michael. 1995. *The War of Austrian Succession, 1740-1748*. London: Routledge.
- Aretin, Karl Otmar von. 2002. “Empire and European Politics, 1763-1806”, in Peter Krüger and Paul W. Schroeder (eds.), *The transformation of European politics, 1763-1848: episode or model in modern history?* Münster: Lit Verlag.
- _____. 2011. “The Old Reich: A Federation or a State of the German Nation?,” in R. J. W. Evans, Michael Schaich, and Peter H. Wilson (eds.), *The Holy Roman Empire, 1495-1806*. Oxford University Press.
- Asbach, Olaf and Peter Schröder. (eds.) 2010. *War, the state, and international law in seventeenth-century Europe*. Ashgate Publishing, Ltd.
- _____. 2014. *The Ashgate Research Companion to the Thirty Years' War*. Surrey: Ashgate Publishing Company.
- Asch, Ronald G. 2004. “Ius foederis re-examined, the peace of Westphalia and the constitution of the Holy Roman Empire.” in Randall Lesaffer (ed.), *Peace Treaties and International Law in European History: From the Late Middle Ages to World War On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Auer, Leopold. 2011. "The Role of the Imperial Aulic Council in the Constitutional Structure of the Holy Roman Empire", in R. J. W. Evans, Michael Schaich, and Peter H. Wilson (eds.), *The Holy Roman Empire, 1495-1806*. Oxford University Press.
- Bartelson, Jens. 1995. *A Genealogy of Sovereignt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eales, Derek. 2005. *Enlightenment and Reform in Eighteenth-century Europe*. I.B Tauris.
- Beaulac, Stephane. 2004. "The Westphalian Model in Defining International Law: Challenging the Myth." *Australian Journal of Legal History*, Vol. 7.
- Bireley, Robert. 1994. "Confessional Absolutism in the Habsburg Lands in the Seventeenth Century." in Charles W. Ingrao (eds.) *State and society in early modern Austria*. Purdue University Press.
- Black, Jeremy. 1990. "Essay and Reflection: On the 'Old System' and the 'Diplomatic Revolution' of the Eighteenth Century." *The International History Review*, Vol. 12, No. 2.
- _____. 2007. "Hanoverian Nexus: Walpole and the Electorate." in Brendan Simms and Torsten Rott (eds.), *The Hanoverian Dimension in British History: 1714-1837*.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lanning, T.C.W. 1977. "'That Horrid Electorate' or 'Ma Patrie germanique'? George III, Hanover, and the Fürstenbund of 1785." *The Historical Journal*, Vol. 20, No. 2.
- _____. 1994. "Empire and State in Germany 1648-1848," *German History*, Vol. 12, No. 2.
- Brady, Thomas A., Euan Cameron, and Henry Cohn. 2006. "The Politics of Religion: The Peace of Augsburg 1555." *German History*, Vol. 24.

- Brendle, Franz and Anton Schindling. 2011. "Religious War and Religious Peace in the Age of Reformation," in R. J. W. Evans, Michael Schaich, and Peter H. Wilson (eds.), *The Holy Roman Empire, 1495-1806*. Oxford University Press.
- Browning, Reed. 1967. "The duke of Newcastle and the imperial election plan, 1749-1754," *Journal of British Studies*, Vol. 7, No. 1.
- _____. 2005. "New Views on the Silesian Wars." *The Journal of Military History*, Vol. 69, No. 2.
- Bull, Hedley. 1977. *The anarchical society: a study of order in world politics*. Palgrave Macmillan.
- Burkhardt, Johannes. 2010. "Wars of states or wars of state-formation?" in Asbach, Olaf, and Peter Schröder, eds. *War, the state, and international law in seventeenth-century Europe*. Ashgate Publishing, Ltd.
- Clark, Christopher M. 2006. *Iron kingdom: the rise and downfall of Prussia, 1600-1947*. Harvard University Press.
- _____. 2014, "Piety, politics and society: Pietism in eighteenth-century Prussia," in Philip G. Dwyer, ed. *The rise of Prussia 1700-1830*. Routledge.
- Cooper, Kirsten L. 2012. *A Rivalry Ended? France and Austria during the Diplomatic Revolution and Seven Years War 1756-1758*, Ph. D. Dissertation, Emory University.
- Croxton, Derek. 1996. *Peacemaking in early modern Europe: Cardinal Mazarin and the Congress of Westphalia, 1643-1648*.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 _____. 1999. "The Peace of Westphalia of 1648 and the Origins of Sovereignty." *The International History Review*, Vol. 21, No. 3.
- _____. 2013. *Westphalia: The Last Christian Peace*. Palgrave Macmillan.

- Dhondt, Frederik. 2011. "From Contract to Treaty. The Legal Transformation of the Spanish Succession 1659-1713." *Journal of the History of International Law*, Vol. 13. No. 2.
- _____. 2013. "Legal discourse between integration and disintegration: the case of the peaceful succession struggles, 1713-1739." *European Traditions: Integration or Disintegration*
- Dickson, P. G. M. 1987. *Finance and government under Maria Theresia, 1740-1780*. Vol. 1, 2. Clarendon Press.
- Duchhardt, Heinz. 2012. "International System and Imperial System in the 'Short' Eighteenth Century: Two Worlds?" in Evans, Robert, and Peter Wilson, eds. *The Holy Roman Empire, 1495-1806: A European Perspective*. Brill.
- _____. 2014. "The Peace of Westphalia: A European Peace," in Asbach, Olaf and Peter Schröder. (eds.) 2014. *The Ashgate Research Companion to the Thirty Years' War*. Surrey: Ashgate Publishing Company.
- Dwyer, Philip G. (ed.) 2014. *The rise of Prussia 1700-1830*. Routledge.
- Espenhorst, Martin. "The Peace of Prague - a failed settlement?," in Asbach, Olaf and Peter Schröder. (eds.) 2014. *The Ashgate Research Companion to the Thirty Years' War*. Surrey: Ashgate Publishing Company.
- Evans, R. J. W. *The Making of the Habsburg Monarchy 1550-1700: An Interpretation*. (Clarendon Press, 1984)
- _____. 1997. "The Habsburg victorious," in Geoffrey Parker and Simon Adams, *The Thirty Years' War*. Psychology Press.
- _____. *Austria, Hungary and the Habsburgs. Essays on Central Europe, 1683-1867*. Oxford, 2006.
- Evans, R. J. W., Michael Schaich, and Peter Hamish Wilson, (eds.),

2011. *The Holy Roman Empire, 1495-1806*. Oxford University Press, 2011.
- Evans, R. J. W., and Peter Wilson. (eds.), 2012. *The Holy Roman Empire, 1495-1806: A European Perspective*. Brill.
- Fichtner, Paula Sutter. 1997. *The Habsburg Empire: From Dynasticism to Multinationalism*. Florida, Malabar: Krieger.
- Forster, Marc R. "The Edicts of Restitution (1629) and the Failure of Catholic Restoration," in Asbach, Olaf and Peter Schröder. (eds.) 2014. *The Ashgate Research Companion to the Thirty Years' War*. Surrey: Ashgate Publishing Company.
- Gross, Hanns. 1975. *Empire and sovereignty: a history of the public law literature in the Holy Roman Empire, 1599-1804*.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Harding, Nick. 2007. *Hanover and the British Empire, 1700-1837*. Boydell & Brewer.
- Härter, Karl. 2012. "The Permanent Imperial Diet in European Context, 1663-1806" in Evans, Robert, and Peter Wilson, eds. *The Holy Roman Empire, 1495-1806: A European Perspective*. Brill.
- _____. 2013. "The Early Modern Holy Roman Empire of the German Nation (1495-1806): A Multi-layered Legal System," in Jeroen Duindam, et al. *Law and empire: ideas, practices, actors*. Leiden: Brill.
- Headley, John M. 1998. "The Habsburg world empire and the revival of Ghibellinism," in David Armitage (ed.), *Theories of Empire, 1450-1800*. Aldershot and Brookfield, VT: Ashgate/Variorum.
- Hintze, Otto. 1975. "Military Organization and the Organization of the State," in Felix Gilbert, *The Historical Essays of Otto Hintz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Hobden, Stephen, and John M. Hobson. 2002. *Historical Sociology of International Relation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ochedlinger, Michael. 2003. *Austria's Wars of Emergence: War, State and Society in the Habsburg Monarchy, 1683-1797*. Pearson Education.
- _____. 2013. "The Habsburg Monarchy: From 'Military-Fiscal State' to 'Militarization'" in Storrs, Christopher, (ed.) *The fiscal-military state in eighteenth-century Europe: essays in honour of PGM Dickson*. Ashgate Publishing, Ltd.
- Horn, D. B. 1927. "The Origins of the Proposed Election of a King of the Romans, 1748-50." *English Historical Review*,
- Ingrao, Charles. W. 1979. *In Quest and Crisis: Emperor Joseph I and the Habsburg Monarchy*. West Lafayette.
- _____. *The Habsburg Monarchy 1618-1815*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0)
- _____. (ed.), 1994. *State and Society in Early Modern Austria*. West Lafayette, IN: Purdue University Press.
- Joon Suk, Kim. 2005. *Making States Federatively: Alternative Routes of State Formation in Late Medieval and Early Modern Europe*, P.H Dissertation, University of Chicago.
- Kampmann, Christoph. 2010. "Peace impossible? The Holy Roman Empire and the European state system in the 17th century" in Olaf Asbach and Peter Schröder (eds), *War, the State and International Law in Seventeenth Century Europe*. Farnham and Burlington.
- _____. "Emperor," in Olaf Asbach and Peter Schröder (eds.), *The Ashgate Research Companion to the Thirty Years' War* (Surrey: Ashgate Publishing Company, 2014)
- Kann, Robert A. 1974. *A History of the Habsburg Empire*,

- 1526-1918 (L. A.: California Univ. Press.
- Kayaoglu, Turan. 2010. "Westphalian Eurocentrism in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International Studies Review*, 12-2.
- Kissinger, Henry. 1994. *Diplomacy*. Simon and Schuster.
- Krasner, Stephen D. 1999. *Sovereignty: organized hypocrisy*. Princeton University Press.
- Krüger, Peter and Paul W. Schroeder (eds.), 2002. *The transformation of European politics, 1763-1848 : episode or model in modern history?* Münster: Lit Verlag.
- Lehmann, Hartmut. "Another Look at Federalism in the Holy Roman Empire," in Maiken Umbach (ed.), *German federalism. Past, present, future* Houndmills.
- Lesaffer, Randall. 2006. "Defensive Warfare, Prevention and Hegemony. The Justifications for the Franco-Spanish War of 1635 (Part I)," *Journal of the History of International Law*, Vol. 8, No. 1.
- _____. 2013. "The Peace of Utrecht: The European Balance of Power. A Comment from the Perspective of International law." Paper for the conference in Utrecht titled '100 Years Peace Palace and 300 Years Peace of Utrecht.
- Livet, Georges. 1976. "Louis XIV and the Germanies." in Ragnhild Marie Hatton (ed.), *Louis XIV and Europe*. Palgrave Macmillan.
- Lockhart, Paul. D. 2014. "Denmark," in Olaf Asbach and Peter Schröder (eds.), *The Ashgate Research Companion to the Thirty Years' War* (Surrey: Ashgate Publishing Company.
- Louthan, Howard. 2006. *The quest for compromise: peacemakers in counter-Reformation Vienna*.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ake, David. 2012. *Hierarchy in International Relations*,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 Lynn, J. A. 1999. *The Wars of Louis XIV, 1667-1714*. London.

- McGill, William J. 1971. "The roots of policy: Kaunitz in Vienna and Versailles, 1749-1753." *The Journal of Modern History*, Vol. 43. No. 2.
- McKay, Derek. 1997. "Small-power diplomacy in the age of Louis XIV: the foreign policy of the Great Elector during the 1660s and the 1670s," in Robert Oresko, G.C. Gibbs and H.M Scott (eds.), *Royal and Republican Sovereignty in Early Modern Europe: Essays in Memory of Ragnhild Hatton*. Cambridge.
- Muldoon, James. 1999. *Empire and Order: The Concept of Empire, 800-1800*. Macmillan.
- Neuhaus, Helmut. 2002. "The federal Principle and the Holy Roman Empire," in Maiken Umbach (ed.), *German federalism. Past, present, future* Houndmills.
- Nexon, Daniel H. 2009. *The struggle for power in early modern Europe: religious conflict, dynastic empires, and international change*. Princeton University Press.
- Nischan, Bodo. 1976. "Reformed Irenicism and the Leipzig colloquy of 1631," *Central European History*, Vol. 9.
- Osiander, Andreas. 1994. *The states system of Europe, 1640-1990: peacemaking and the conditions of international stability*. Oxford: Clarendon Press.
- _____. 2001. "Sovereignty, international relations, and the Westphalian myth."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55. No. 2.
- Piirimäe, Pärtel. 2002. "Just War in Theory and Practice: The Legitimation of Swedish Intervention in the Thirty Years War," *The Historical Journal*, Vol. 45, No. 03.
- _____. 2014. "Sweden," in Olaf Asbach and Peter Schröder (eds.), *The Ashgate Research Companion to the Thirty Years' War* (Surrey: Ashgate Publishing Company).
- Phelps, Dominic. 2011. "The Triumph of Unity over Dualism:

- Saxony and the Imperial Elections 1559-1619" in R. J. W. Evans, Michael Schaich, and Peter H. Wilson (eds.), *The Holy Roman Empire, 1495-1806*. Oxford University Press.
- Phillips, Andrew. 2010. *War, religion and empire: the transformation of international order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hilpott, Daniel. 2001. *Revolutions in sovereignty: How ideas shaped modern international relations*. Princeton University Press.
- Pohlig, Matthias. "The Peace of 1555 - a failed settlement?" in Olaf Asbach and Peter Schröder (eds.), *The Ashgate Research Companion to the Thirty Years' War* (Surrey: Ashgate Publishing Company).
- Press, Volker. 2003. "Austria and the Rise of Brandenburg-Prussia." In Charles W. Ingrao, (ed.), *State and Society in Early Modern Austria*.
- Pursell, Brennan. 2014. "The Palatinate and its networks in the Empire and in Europe," in Olaf Asbach and Peter Schröder (eds.), *The Ashgate Research Companion to the Thirty Years' War* (Surrey: Ashgate Publishing Company).
- Riotte, Torsten. 2007. "George III and Hanover," in Simms, Brendan, and Torsten Riotte, (eds.), *The Hanoverian Dimension in British History, 1714-1837*.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eus-Smit, Christian. 1999. *The moral purpose of the state: culture, social identity, and institutional rationality in international relations*. Princeton University Press.
- Ringmar, Erik. 2008. *Identity, interest and action: a cultural explanation of Sweden's intervention in the Thirty Years War*.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chmidt, Georg. 2011, "The Old Reich: The State and Nation of

- the Germans,” in R. J. W. Evans, Michael Schaich, and Peter H. Wilson (eds.), *The Holy Roman Empire, 1495-1806*. Oxford University Press.
- Schröder, Peter. 1999. “The constitution of the Holy Roman Empire after 1648: Samuel Pufendorf's assessment in his Monzambano.” *The Historical Journal*, Vol. 42. No. 4.
- Schroeder, Paul W. 1992. “Did the Vienna settlement rest on a balance of power?.” *The American Historical Review* Vol. 97, No. 3.
- _____. 1996. *The transformation of European politics, 1763-1848*. (Oxford University Press, 1996)
- _____. 2001. “The Luck of the House of Habsburg: Military Defeat and Political Survival.” *Austrian History Yearbook* Vol. 32.
- Schulze, Hagen. 2014, “The Prussian military state, 1763-1806”, in Philip G. Dwyer. (ed.) *The rise of Prussia 1700-1830*. Routledge.
- Schweizer, Karl W. 1977. “Lord Bute, Newcastle, Prussia and the Hague Overtures: A Re-Examination,” *Albion: Quarterly Journal Concerned with British Studies*, Vol. 9, No. 1.
- Scott, Hamish M. 1990. “Reform in the Habsburg Monarchy, 1740-90,” in Hamish M Scott (ed.), *Enlightened Absolutism: Reform and Reformers in Later Eighteenth Century Europe*. London: Macmillan.
- _____. 2001. *The Emergence of the Eastern Powers, 1756-1775*.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1.
- _____. 2002. “The decline of France and the transformation of the European states system, 1756-1792,” in Peter Krüger and Paul W. Schroeder (eds.) *The transformation of European politics, 1763-1848 : episode or model in modern history?* Münster: Lit Verlag.

- Hamish Scott, 2011. "The Seven Years War and Europe's Ancien Régime," *War in History* Vol. 18, No. 4 (2011)
- _____. "Prussia's Emergence as a European great power, 1740-1763," in Philip G. Dwyer. (ed.) *The rise of Prussia 1700-1830*. Routledge.
- _____. 2014. *The Birth of a Great Power System, 1740-1815* Routledge, 2014.
- McKay, Derek, and Hamish M. Scott. 2014. *The rise of the great powers 1648-1815*. Routledge.
- Schmidt, Sebastian. 2011. "To Order the Minds of Scholars: The Discourse of the Peace of Westphalia."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55.
- Simms, Brendan. 2013. *Europe: The Struggle for Supremacy, from 1453 to the Present*. Basic books.
- Simms, Brendan and Torsten Rott, (eds.), 2007. *The Hanoverian Dimension in British History, 1714-1837*.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ofer, Sasson. 2009. "The Prominence of Historical Demarcations: Westphalia and the New World Order." *Diplomacy & Statecraft*, Vol. 20, No. 1.
- Stollberg-Rilinger, Barbara. 2015. *The Emperor's Old Clothes: Constitutional History and the Symbolic Language of the Holy Roman Empire*. Vol. 10. Berghahn Books.
- Straumann, Benjamin. 2008. "The peace of Westphalia as a secular constitution." *Constellations* Vol. 15, No. 2.
- Szabo, Franz AJ. 1994. *Kaunitz and enlightened absolutism 1753-1780*. Cambridge university press.
- _____. 2013. *The Seven Years War in Europe: 1756-1763*. Routledge.
- Taylor, A. J. P. 2001. *The course of German history: a survey of*

- the development of German history since 1815*. Routledge.
- Teschke, Benno. 2003. *The myth of 1648: class, geopolitics, and the making of modern international relations*. Verso.
- Thompson, Andrew. 2009. "After Westphalia: Remodelling a Religious Foreign Policy." in David Onnekink (ed.), *War and Religion After Westphalia 1648-1713*. Routledge.
- Toyoda, Tetsuya. 2011. "Vattel's Doctrine of National Sovereignty in the Context of Saxony-Poland and Neuchâtel" in Tetsuya Toyoda (ed.), *Theory and Politics of the Law of Nations.: Political bias in International Law Discourse of Seven German Court Councilors in the Seventeenth and Eighteenth Centuries*. Leiden.
- Troost, Wouter. 2003. "William III, Brandenburg and the anti-French coalition", in Israel, Jonathan I. *The Anglo-Dutch moment: essays on the Glorious Revolution and its world impact*. Cambridge University Press.
- _____. 2011. "'To restore and preserve the liberty of Europe': William III's idea's on foreign policy," in Onnekink, David, and Gijs Rommelse (eds.), *Ideology and foreign policy in early modern Europe (1650-1750)*. Ashgate Publishing, Ltd.
- Umbach, Maiken. 2002. "History and Federalism in the Age of Nation-State Formation," in Maiken Umbach (ed.), *German federalism. Past, present, future* Houndmills.
- Volker, Markus. 2011. "The Historical Consciousness' of the Empire," in R. J. W. Evans, Michael Schaich, and Peter H. Wilson (eds.), *The Holy Roman Empire, 1495-1806*. Oxford University Press.
- Waltz, Kenneth N. 1979.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Waveland Press.
- Wendt, Alexander. 1999. *Social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Westphal, Siegrid. "Does the Holy Roman Empire Need a New Institutional History?," in R. J. W. Evans, Michael Schaich, and Peter H. Wilson (eds.), *The Holy Roman Empire, 1495-1806*. Oxford University Press.
- Whaley, Joachim. 2012a. *Germany and the Holy Roman Empire: Volume I: Maximilian I to the Peace of Westphalia, 1493-1648. Vol. 1*. Oxford University Press.
- _____. 2012b. *Germany and the Holy Roman Empire: Volume II: The Peace of Westphalia to the Dissolution of the Reich, 1648-1806. Vol. 2*. Oxford University Press.
- _____. 2014. "The Holy Roman Empire of the German Nation: Imperial politics 1555-1618," in Olaf Asbach and Peter Schröder (eds.), *The Ashgate Research Companion to the Thirty Years' War* (Surrey: Ashgate Publishing Company).
- Wight, Martin. 1966. "The Balance of Power," in H. Butterfield and M. Wight (eds), *Diplomatic Investigations*. London: George Allen & Unwin.
- _____. 1977. *Systems of states*. Leicester.
- Wilson, Peter H. 1998. *German Armies: War and German Society, 1648-1806* London: UCL Press.
- _____. 1999. *The Holy Roman Empire, 1495-1806*. London: Macmillan.
- _____. 2000. *Absolutism in Central Europe*. Psychology Press.
- _____. 2005. "Review Article: New Perspectives on the Thirty Years War," *German History*, Vol. 23, April.
- _____. 2006. "Still a monstrosity? Some reflections on early modern German statehood." *The Historical Journal*, Vol. 49. No. 2.

- _____. 2008. "Prussia's Relations with the Holy Roman Empire, 1740-1786." *Historical Journal*, Vol. 51, No. 2.
- _____. 2009. *Europe's Tragedy: A New History of the Thirty Years War*. Penguin UK.
- _____. "The Thirty Years War as the Empire's Constitutional Crisis" in R. J. W. Evans, Michael Schaich, and Peter H. Wilson (eds.), *The Holy Roman Empire, 1495-1806*. Oxford University Press.
- _____. "Meaningless Conflict? The Character of the Thirty Years War," in Frederick C. Schneid (eds.), *The Projection and Limitations of Imperial Powers, 1618-1850*. Leiden: Brill, 2012.
- Wines, Roger. 1967. "The Imperial Circles, Princely Diplomacy and Imperial Reform 1681-1714," *The Journal of Modern History*, Vol. 39 No.1.

Abstract

The Myth of Westphalia and Resilience of the Holy Roman Empire

ChaeYoung Yong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and International
Relation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It has been largely assumed that in the age of ‘Westphalian states-system’ which began after the peace of Westphalia(1648), the Holy Roman Empire languished its imperial power and only retained its nominal status in European order. Recently this conventional notion have been refuted by many historians and international relations(IR) scholars that the resilience of Holy roman empire in European politics rather maintained until its official collapse in 1806. However, what has been overlooked is the fact that, unlike the conventional notion that the peace of Westphalia has its focus in the European exteral affairs, the actual emphasis was in the internal constitutional problem and the internal political dynamics of Holy roman empire. This paper challenges the conventional myth of Westphalia and demonstrates why the Holy roman empire maintained its form as hierarchical empire even after the treaty. The aim of this paper is to provide better historical insights to explain the formation of modern European states-system.

This paper demonstrates the reasons of Holy roman empire’s resilience through internal, external mechanisms. Internally, the members of HRE wanted to preserve its hierarchical Reichsverfassung (imperial constitution) by regulating its internal balance of power

between various members of the empire. The constitution of the empire, based on customs, traditions and laws, helped to protect the peace and order of the empire, as the tension between majesty of the emperor/empire and territorial sovereignty of the imperial estates intensified.

Externally, the nexus between imperial politics and European politics in terms of 'dual balance of power' made the empire into integral constitutive part of the European system. The Holy roman empire had to be remained as non-sovereign status in the European system since the internal balance of the empire was closely connected to European balance of power. So other actors could easily intervene in the empire.

The logic of balance of power was not used to counter-balance the hierarchical order but to sustain the hierarchical order. Both Habsburg Austrian emperor and the German princes were given major military, political assistance from their allies, even from their rivals to make certain distribution of power in order to protect peace and security of Europe.

Thus, despite internal and external crises, the constitutional status-quo of the Holy roman empire could be continuously recovered until 1806 through political compromises among its members and European actors so as to maintain uneasy balance of power both in empire and in Europe. This paper can give insight to IR by illustrating that abnormal, pre-modern, non-sovereign unit was actually the key to formation of modern European political system.

Keyword: Myth of Westphalia, Holy roman empire, Thirty years war, sovereignty, balance of power, European states-system

Student Number: 2012-22999